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박수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장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박수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장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33-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0-33-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0-33-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장근영 연구위원	박수익 부연구위원 박선영 교수 (동서대학교)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연구위원	이영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발 간 사 ■ ■ ■

대한민국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5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지금도 느려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는 다문화된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적 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정보시대에 강화된 개개인의 권한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들과,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인 민주시민역량은 위에 언급한 도전들에 미래세대가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OECD에서 제안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실시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비교조사(ICCS)의 결과분석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민주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의 현황과 변화양상 그리고 이를 보다 바람직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 및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를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ICCS의 조사도구를 사용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남, 여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변인 분석과 IEA 국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IEA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총체적 불만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민주시민지식은 낮으나 참여욕구는 높은 ‘봉건적 참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 출마 의사는 상승했으나 투표 참여 의사, 선거관련 정보 수집 의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대한 반대,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과 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과 이론과 실천의 불균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과 실제 참여와 실천 요소의 보완 정책을 제안하였다.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청소년 특별회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정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청소년 정당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핵심어: 민주시민역량, ICCS, IEA, 한국의 아동청소년, 국제비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의 조사 도구 중 정의-행동 영역 문항을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정에서 우선 순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ICCS와는 달리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확대하여, 학교급 혹은 학년에 따른 시민역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ICCS 2009의 최종 결과보고서 및 IEA의 관련 보고서들에 기술된 시민성 및 시민의식의 정의-행동영역 구조와 민주시민역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과 분석의 기본 틀을 삼았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 국내 민주시민역량 관련 전문가들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양적연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음.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9,398명이었음.
- 협동연구 추진: 이 연구는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는 연구로 1개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였음. 협동연구기관에서는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변인의 분석과 IEA 국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담당하였
음.

3. 주요결과

1) ICCS 문항의 분류체계와 타당도 분석

- 분류체계와 타당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 각 문항의 타당성에는 동의했으나 영역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음.
- 시민 참여의 원리,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다문화 포용성 관련 문항의 분류 체계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음.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민주주의의 원칙간의 관계에 대해 ICCS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개념 사이에 가장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
- 국내 전문가들은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는 민주시민역량과 비교적 관계가 적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2) 민주시민역량의 유형분류와 국가간 비교분석

- 시민역량에 있어서 ICCS 참여국 청소년들은 크게 조용한 참여자, 정치적 소외자, 종교적 시민, 낙천적 참여자, 봉건적 참여자, 총체적 불만자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시민역량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 ‘정치적 소외자’ 유형과 ‘조용한 참여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국가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유형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총체적 불만자’ 가 차지하는 비율이 25.2%로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 ‘정치적 소외자’ 를 ‘조용한 참여자’ 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교육, ‘봉건적 참여자’ 들을 최소한 평균이상 수준의 민주시민지식을 갖춘 ‘종교적 참여자’ 로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의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필요성을 제안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

- 2009년과 2011년 사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승한 지표와 하락한 지표를 발견
- 향상된 지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 학교 내외에의 참여 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 정치적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에 후보 출마 의사였음.
- 투표 참여 의사,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음.

4) 2011년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 ICCS의 정의-행동 척도를 이용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한 결과, 시민역량에 있어 남녀성차가 발견되었으며, 포용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
- 애국심, 공공 신뢰, 국가에 대한 애착 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감소했음.
- 시민성 및 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도는 실제 참여 행위 및 미래의 행위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고) 학생간에 뚜렷한 시민역량의 차이가 발견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시민적 태도와 행동 특성을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음. 학교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시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

4. 정책제언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과 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임.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이 시급함.
- 학년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역량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교육시스템이 민주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우리나라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에서 가장 결여된 요소는 실천적 요소임.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육의 개발이 시급함.
- 청소년들의 참여욕구와 관심은 증대하나 이를 충족시킬 합법적 참여의 경로가 부족함. 청소년의 선거권을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정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청소년 정당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함.
-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원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고, 국제비교연구 자체도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고유한 시민성과 정서를 국제적인 비교조사 체계에 반영시키지 못하며, 우리 학계 내에서조차 제대로 발굴되지도 못한 상태임. 그러므로 한국적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정체성 등을 반영한 척도의 개발과 관련 연구가 필요함.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민주시민역량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 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3
1.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배경	15
2.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16
3. 해외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변천	20
4. 한국의 시민교육에의 시사점	50
제 3 장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과 연구 사례	53
1. 사회적자본과 민주시민역량	55
2. 핵심역량(Key Competencies)과 민주시민역량	57
3. IEA의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60
4. IEA의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IS 2009)	63
제 4 장 ICCS 2009 결과 요약	67
1. 척도의 구성	69
2. ICCS 2009의 평가기준	72
3. 조사대상자	74
4. 조사결과	75

제 5 장 연구 결과	91
1. ICCS 문항구조 및 타당성 평가	93
2. 민주시민역량의 질적 유형 분석	129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141
4.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159
6. 결과 요약	167
제 6 장 정책제언	171
1.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 현상 대응정책 마련	173
2. 실천적 민주시민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	175
3. 합법적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방안	176
4. 한국형 민주시민역량 척도의 개발 및 관련 연구 추진	180
참고문헌	183
부 록	191

표 목 차

〈표 II-1〉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23
〈표 II-2〉 영국의 핵심단계(Key Stage)별 시민교육목표	25
〈표 II-3〉 영국의 Key stage 3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26
〈표 II-4〉 영국의 Key stage 4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27
〈표 II-5〉 시민교육의 3대 요소의 변화	28
〈표 II-6〉 2007년 이후 시민교육의 3대 요소	28
〈표 II-7〉 시민성 척도	29
〈표 II-8〉 미국 사회과의 10개 주제	38
〈표 II-9〉 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학교 시민교육용 프로그램	39
〈표 II-10〉 중등학교에서의 시민성 교육 조직	41
〈표 II-11〉 중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	43
〈표 II-12〉 일반계 고등학교 시민교육 내용	44
〈표 II-13〉 직업계열 고등학교 시민교육 내용	44
〈표 III-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55
〈표 III-2〉 OECD DeSeCo 핵심역량의 세가지 영역	57
〈표 III-3〉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구성	58
〈표 III-4〉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점수와 국가 간 비교 결과	59
〈표 III-5〉 IEA CivEd의 시민의식 문항구조	61
〈표 III-6〉 IEA ICCS 2009의 시민성 및 시민의식 개념구조	63
〈표 III-7〉 ICCS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의 개념정의	64
〈표 III-8〉 ICCS 내용영역 2)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의 개념정의	65
〈표 III-9〉 ICCS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개념정의	66
〈표 III-10〉 ICCS 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 영역의 개념정의	66
〈표 IV-1〉 ICCS 2009 영역별 문항배분	72
〈표 IV-2〉 ICCS 2009 각 국가별 시민지식 점수	76
〈표 IV-3〉 ICCS 2009 각 국가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78

〈표 IV-4〉 ICCS 2009 각 국가별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응답비율	81
〈표 IV-5〉 ICCS 2009 각 국가별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응답비율	83
〈표 IV-6〉 ICCS 2009 각 국가별 학교밖 시민참여 응답비율	84
〈표 IV-7〉 ICCS 2009 각 국가별 학교 내 시민참여 응답비율	86
〈표 IV-8〉 ICCS 2009 각 국가별 기대시민참여 응답비율	88
〈표 V-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영역	96
〈표 V-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영역	97
〈표 V-3〉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사회와 체계×추론과 분석영역	100
〈표 V-4〉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사회와 체계×추론과 분석영역	101
〈표 V-5〉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공동체 원리×지식영역	103
〈표 V-6〉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지식 영역	104
〈표 V-7〉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106
〈표 V-8〉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108
〈표 V-9〉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참여×지식 영역	110
〈표 V-10〉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참여×지식 영역	110
〈표 V-1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참여×추론과 분석 영역	112

〈표 V-1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113
〈표 V-13〉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정체성×추론과 분석 영역	115
〈표 V-14〉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정체성×추론과 분석 영역	116
〈표 V-15〉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가치 및 신념영역	118
〈표 V-16〉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가치 및 신념영역	118
〈표 V-17〉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태도영역	120
〈표 V-18〉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태도영역	121
〈표 V-19〉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미래행동의도 영역	122
〈표 V-20〉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미래행동의도 영역	123
〈표 V-2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현재 행동 영역	124
〈표 V-2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현재 행동 영역	124
〈표 V-23〉 인지영역 문항 중 내용분류일치도 20% 이하 문항	127
〈표 V-24〉 인지영역 문항 중 타당도 70% 이하 문항	128
〈표 V-25〉 정의-행동 영역 문항 중 일치율 60% 이하 문항	128
〈표 V-26〉 정의-행동 영역 변인의 요인분석 결과	130
〈표 V-27〉 요인별 내용요약	133
〈표 V-28〉 군집분석결과 요약	136
〈표 V-29〉 비교대상 국가들의 군집별 분포(%)	137
〈표 V-30〉 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 수준의 차이	142
〈표 V-31〉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다	143
〈표 V-32〉 학교 내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음	145
〈표 V-33〉 올바른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 비율(%)	146
〈표 V-34〉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4점 만점)	148

〈표 V-35〉 정치적 관심(평균)	149
〈표 V-36〉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4점 만점)	151
〈표 V-37〉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평균)	152
〈표 V-38〉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평균)	154
〈표 V-39〉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평균)	155
〈표 V-40〉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	157
〈표 V-41〉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	163
〈표 V-42〉 학년별 학교 유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 비교(%)	167
〈표 VI-1〉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177
〈표 VI-2〉 세계 각국의 투표권 부여 연령현황	179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의 단계별 추진 내용	6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IV-1】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모형(1975)	71
【그림 V-1】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의 비교	98
【그림 V-2】	시민사회와 체계×추론 및 분석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02
【그림 V-3】	시민공동체원리×지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04
【그림 V-4】	시민공동체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09
【그림 V-5】	시민참여×지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10
【그림 V-6】	시민공동체원리×추론과 분석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14
【그림 V-7】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16
【그림 V-8】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모형(1975)	117
【그림 V-9】	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18
【그림 V-10】	태도 단계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	121
【그림 V-11】	미래행동의도 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23
【그림 V-12】	현재 행동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124
【그림 V-13】	추출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프로파일	136
【그림 V-14】	비교대상 국가에서 각 군집의 분포 현황	138
【그림 V-15】	정치,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수준의 차이	142

【그림 V-16】 학교 밖 시민참여(%)의 변화	144
【그림 V-17】 학교 내 시민참여(%)의 변화	145
【그림 V-18】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비율의 변화양상	147
【그림 V-19】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양상	148
【그림 V-20】 정치적 관심의 변화양상	150
【그림 V-21】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양상	151
【그림 V-22】 공공에 대한 신뢰도 평균의 변화양상	153
【그림 V-23】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	154
【그림 V-24】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	154
【그림 V-25】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의 변화	157
【그림 V-26】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59
【그림 V-27】 학년별 성평등 의식의 남녀차	160
【그림 V-28】 학년별 국가에 대한 애착수준의 변화	160
【그림 V-29】 학년별 공공기관(검·경찰,미디어,학교)에 대한 신뢰	161
【그림 V-30】 학년별 시민적 자아 효능감에서의 남녀 차이	162
【그림 V-31】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평등 의식	164
【그림 V-32】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정치적 관심과 자기 신념	164
【그림 V-33】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	165
【그림 V-3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166
【그림 V-35】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166

제 1 장



서 론

1. 민주시민역량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제 1 장
서론

1. 민주시민역량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 문화적으로는 한류와 IT 선진국으로서의 지위, 그 외에 OECD·G20 가입과 UN사무총장의 배출 등으로 국제적인 위상의 향상이 계속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인 지위의 향상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의무의 확대를 요구한다. 국제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민주·시민의식의 성숙과 사회·문화적 역량의 증대를 통해 향상된 지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문화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완화되기보다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상대빈곤율도 높다.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지니(GINI)계수는 1997년 0.283에서 2008년 0.314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현재에도 0.310 수준에 올라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유병규, 김동열, 2011)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에는 67.5%로 감소한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0년의 7.1%에서 2010년에는 12.5%로 늘어났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초과)의 비율은 1990년 17.5%에서 2010년에는 20.0%로 증가세에 있다(p.4).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구조가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청소년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는 2005년 6,121명에서 2011년에는 36,576명으로 597%나 증가하였다(김기현 외, 2011).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혁신적인 노력과 개인의 계층/문화 포용성의 급속한 확대를 요구한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개방성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자애물은 공공의 신뢰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보통은 선진국에 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ukuyama, 2001).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문화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신뢰수준이 특이하게 낮은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김기현 외, 2010; Shultz, W. 등, 2010; ACER, 2010a).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신뢰와 개방성, 그리고 포용성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민주시민역량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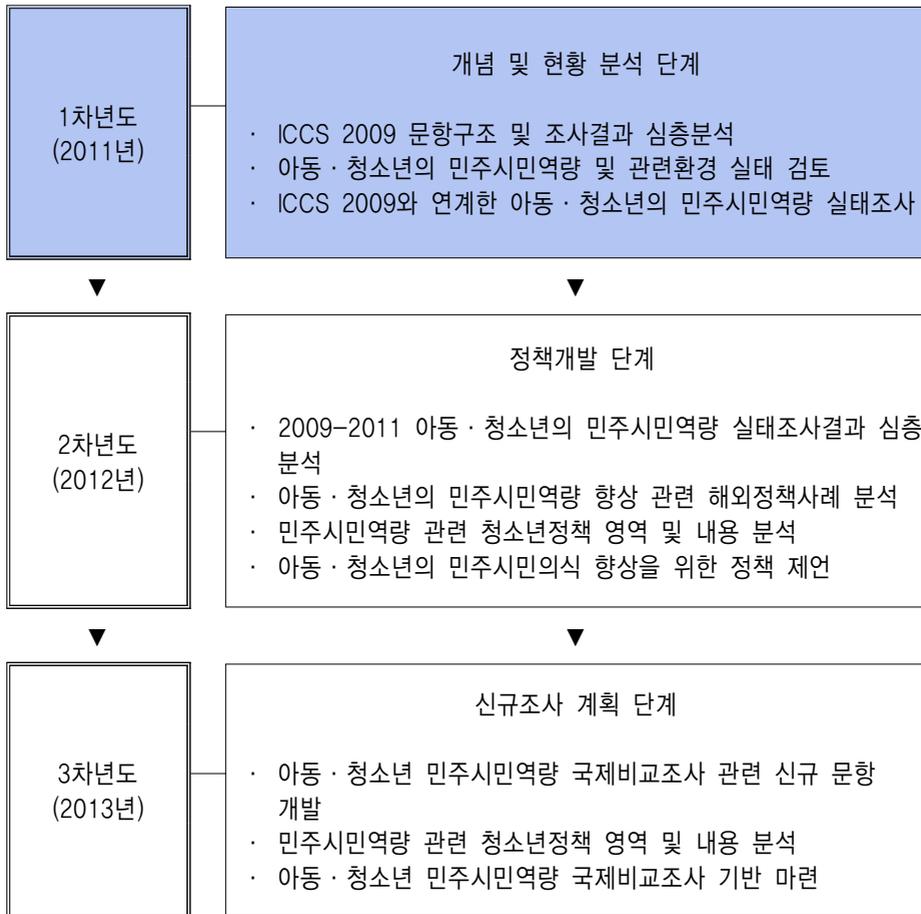
그 외에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화는 일반인들에게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2011년 단 두 명의 개인이 운영하는 텍스트 중심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서 주요강대국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한 결과 발생한 국제적인 파문과, 양방향 매체를 통해서 확산된 시민운동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은 참여의 경로를 다양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현상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청년층의 투표율은 빠르게 감소했다. 1972년에는 투표권을 가진 18-24세 사이 미국인중 50.3%가 대통령선거에 투표했으나(전체 투표율 55.2%) 2000년에는 같은 연령대의 투표권을 가진 미국인들 중 37.3%만이 대통령선거에 투표했다(전체 투표율 51.3%)(Palfrey & Gasser, 2010; p. 279).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투표 이외의 영역에서는 젊은층의 사회참여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전통적인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정치와 문화, 사회, 기술이 연계된 주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2009년 조사결과에서 남자 57.3%, 여자 52.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의 남자 54.9%, 여자 50.1%에 비해서 2% 이상 증가한 결과다(김원 외, 2009).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율은 연령별 격차가 매우 뚜렷해서 12-19세의 청소년 중 82.1%와 20대의 86.7%가 무선인터넷 사용경험이 있는 반면, 같은 경험 비율이 30대에서는 58.9%, 40대는 35.9%, 50대는 16.6%로 급속히 낮아진다(p.16).

이는 IT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대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반영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양방향 소통매체를 당연히 여기는 N세대 혹은 디지털 세대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발전된 IT 인프라를 향유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방향 소통과 참여의 욕구를 증진시켜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 이외에는 이러한 욕구를 표현하고 현실화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나 단체활동 혹은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권의 행사가 일반화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원칙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욕구의 증가가 그에 상응하는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병행하지 않는 경우 의외의 현상으로 분출될 수도 있다. 2008년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에는 이러한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 수준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0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교육효과 국제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가 있다(ACER, 2010a). 이 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와 덴마크로 평균 576점이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참여’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로 조사국가 평균(62%)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 18%(전체평균 41%), 학교에 대한 신뢰 45%(전체평균 75%),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39% 역시 조사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겨우 최하위를 면한 51%(전체평균 61%)였다. 또한,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경험도 하위권을 기록했다(김기현 외, 2010). 즉, 최상위 수준의 시민지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와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는 낮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는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비교조사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민주시민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및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환경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민주시민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효과를 예측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림 1-1】 연구의 단계별 추진 내용

본 연구는 3년 연속연구로 1차년인 2011년도에는 ICCS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성, 시민의식 개념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민주시민역량의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09년 ICCS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을 통해 앞서 제시하였던 결과의 원인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ICCS 주요 문항을 일부 포함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CCS의 조사대상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임에 반해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교(4~6학년)과 중·고교생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2009년도 ICCS 조사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고 연령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차 년도에는 1차년도 조사결과에 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관련 청소년 정책 영역 및 내용 분석과 다양한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차년도에는 정책

대안의 기대효과를 산출하고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국제 비교를 위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2014년에 실시할 차기 시민성 및 시민의식 국제비교조사의 아시아지역 국가조사문항(Asean Module) 및 국제조사문항(International Module)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1)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배경과 역사 조사

민주시민역량(civic competencies)은 시민성(citizenship),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시민의식(civic knowledge), 다문화 포용성(cultural diversity), 양성 평등, 인권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역량을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인 ‘사회적 자본’ 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식’ (혹은 시민성 지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포함된 시민성(civic)은 서로 다른 맥락과 배경에서 사용되지만 혼용되기도 하는 주요 개념들이다. 따라서 이들 개념들을 정리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이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2) 민주시민역량 관련 국제비교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본 연구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IEA에서 실시하고 우리 연구원이 공동 참여한 국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의 개념적인 틀을 기초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ICCS 2009에 사용된 문항이 우리나라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정하고, 관련 변인간의 관계 특히 민주시민의식과 교육환경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 조사에 참여한 38개 국가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시민의식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결과 분석

ICCS 문항을 기초로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에 대한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여 2009년도 ICCS의 결과와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했다.

- 민주시민역량 관련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현황, 시민참여 요구 및 신뢰, 관용, 양성평등의식 등 민주시민역량 실태 파악
- 민주시민역량 관련 환경 요소로서 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경험, 시민참여에 대한 가족/학교/교사의 수용 및 태도, 민주시민의식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등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개발에 필요한 환경 요소의 실태 파악
- 시민참여 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욕구와 참여 실태의 편차 분석을 통한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 제안 및 시민의식 교육환경에서 취약하고 우선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 도출

4) IEA ICCS 백서 참여 및 국제교류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IEA의 ICCS 백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IEA는 2012년 초에 ICCS에 참여한 38개 국가에서 자국의 교육환경과 맥락을 기술함으로써 전체 결과의 해석에 필요한 배경맥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원과 협동연구기관은 ICCS 참여기관으로 이 백서의 한국분야 기술을 작성해서 제공했다.

또한 지금까지 OECD를 비롯하여 한국이 다양한 국제비교조사 혹은 연구에 참여할 때 연구 프레임, 문항개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비교연구 및 결과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분석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세미나, 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제기구 등(외국학자 포함)이 한국교육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견교류를 통해 국제비교결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진행과정을 IEA가 참가하는 국제비교교육학회에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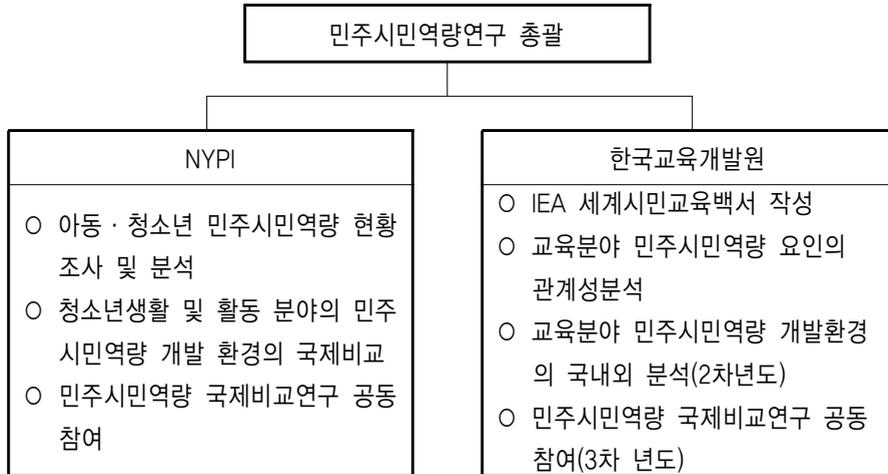
5)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2009년 ICCS 조사결과와 본원의 본 실태조사결과간의 시계열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를 통해 2009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던 공공에 대한 신뢰나 참여와 같은 민주시민역량 요인이 2011년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포용성이나 양성평등의식과 같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민주시민역량 요소에 대한 연령별 조사결과는 미래의 변화추세를 예측하는 근거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취약하며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주시민역량 요인의 순위를 선정하고 이들을 정책적인 우선 목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본원(NYPI)과 1개 협동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추진체계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 【그림 I-2】와 같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NYPI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역량 관련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조사와 결과 분석을 담당하였다. 특히, CivEd에서 전제한 생태체계학적 발달모형과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취약점과 강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IEA에 제출하는 ‘세계시민교육백서’의 한국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환경 분석 및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또한 우리 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제자료 비교분석결과의 공개와 논의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에 공동참가하고 차기 IEA의 국제비교연구에도 한국 공동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2)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 정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내용 분석(사회적 자본, 시민성, 시민의식, 생애핵심역량 중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를 위한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반영하였다. 덧붙여 민주시민역량 관련 변인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2009년 IEA에서 실시한 ICCS 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과 2009~2010년 간 본원에서 수행한 청소년핵심역량 조사 자료(김기현 외, 2010)와

의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ICCS 2009에서 사용한 조사문항 중에서 지식-인지 영역을 제외한 정의적-행동영역 문항을 사용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전체 80문항으로서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교내/학교 밖 참여, 양성평등과 다민족/다문화 포용성, 학교와 교실에서의 학생참여 환경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배경
2. 국내 시민역량 교육의 현황
2. 해외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변천
3. 한국의 시민교육에의 시사점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배경

시민(citizen)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회, 정치, 국가 체제와 같은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정의에서 시작한다. 시민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주장은 사회계약이론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시민권은 권리와 책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원칙은 최근까지 가장 대표적인 시민권의 접근이기도 하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생활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의 총합으로서 여기에는 투표할 권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 개인의 생활을 보호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시민의 개념은 국가 시민(national citizenship)과 연방시민(commonwealth citizenship) 그리고 국제 시민(international citizenship)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비록 같은 이름인 시민으로 불리지만 맥락과 대상에 따라서 이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영혜(2011)가 지적했듯, “로마제국이 칭송하던 ‘훌륭한 시민’의 미덕과 자질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성립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적 자질과 같을 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영국의 시민교육과 나치체제의 위협을 경험한 독일의 시민교육이 같은 모습이기는 어렵다.” (pp. 1) 그러나 이 같은 맥락과 구체적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역량이 민주적 가치를 더 확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시민성의 정의에 따라서 그 시민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개인과 사회에 요구되는 과제의 내용도 크게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시민교육은 국가가 원하는 구성원인 국민을 키우는 ‘공민교육’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1900년대 근대국가들이 형성된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일본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형성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1960년대 이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게 되었다. 공민으로서의 ‘시민의식’ 개념에서 ‘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온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변천과 그와 함께 변화해온 민주시민역량 관련 교육제도의 변화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의 현황¹⁾

1)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개요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공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의 상(像)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개정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시민을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시민교육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 한국의 시민교육 교과과정

한국에서는 시민교육을 어느 특정 교과에서 전담하기보다는 시민교육 관련 교과들이 협력적으로 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민교육에 대한 기여도나 연관성은 각 교과마다 차이가 있다.

1) 본 내용은 IEA에서 ICCS 2009에 참여한 38개 국가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백서에 한국 부문 내용으로 제출한 보고서의 초안이다. IEA의 내용검수와 수정보완 작업이 본 보고서 제출일정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최종본이 아닌 초안을 수록했다.

한국의 시민교육은 관련 교과외의 정규 수업과 기타 활동(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 ‘시민성’, ‘시민교육’ 등이 직접 교과명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 교과 속에 반영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나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통해서도 보완적으로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 중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중학교에서 시민교육에 주로 기여하고 있는 교과는 사회과, 도덕과 등이다. 그 중 기여의 정도, 연관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 영역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특성,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 삶의 터전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 지역의 지리적 특성,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한국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 등을 다룬다. 기능 영역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조직·활용, 탐구, 의사 결정, 사회 참여,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다룬다.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민주적 생활 태도,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민주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등을 다룬다.

(3)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동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범위는 교내 정규 수업부터 학교 밖 체험 활동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토의·토론 활동을 가지기도 하고, 환경, 인권, 반전, 평화, 복지 등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나 보편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하여 결성된 클럽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교나 학급 내의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이나 조직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민 단체, 복지 기관,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협력하여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4) 현재 진행중인 민주시민교육관련 논쟁점들

2007년과 2009년에 연이어 개정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1997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비해 다문화, 세계화 등의 변화를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 1997년 교육과정에서는 ‘민족적 정체성’, ‘민족 문화’ 등의 표현이 사회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세계 발전’ 등의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고대 역사를 놓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갈등하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여 역사 영역(한국사 및 세계사)에 대한 교육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묶어서 <역사>라는 이름의 교과서를 별도로 제작하였고 역사 영역의 수업 시수도 1997년 교육과정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시민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어 왔지만 그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시민교육을 여전히 기존의 특정 교과(사회과, 도덕과 등)를 중심으로 더 명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교과 체제를 시민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교과 내용보다는 핵심 역량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 사이의 논쟁이 있다. 전자의 주장은 사회과, 도덕과가 여전히 시민교육의 핵심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영역을 늘려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범교과적으로 추구되는 핵심 역량은 주로 기능에 치우쳐 있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모호해지고 빈곤해진다고 비판한다. 반면, 후자의 주장은 기존의 독자적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간 및 교과 내 내용 중복 또는 누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이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는 형식적, 기능적 요소를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대체로 교과 체제가 견고한 편이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격변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내세우면서 후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 교사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현황

사회과 교사로 교단에 서는 과정도 일반적인 중학교 교사 채용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한국의 사회과 교사 자격증은 사범대학에서 역사교육, 지리교육, 사회과교육 등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법정대학 등에서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을 전공하고 교육학 관련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사람 또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등을 부전공한 사람 등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공립이나 사립, 수도권이나 지방 등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시민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육 전공자 또는 관련 학문 전공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역시 담당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 시민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의 질에 편차가 적지 않고 일부 사회과 교사의 수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회과 교사 개인의 전공 배경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들은 그 전공 배경이 다른 교과에 비해 훨씬 다채롭다. 일단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 자체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뿐 아니라,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범대학 사회과교육 전공자, 사범대학 일반교육학 전공자 중 사회과 관련 과목 부전공자,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직 이수자,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육대학원 졸업자 등 종류가 많다. 더 나아가 원래 한문, 교련 등 지금은 사라진 과목을 가르치다가 사회과 교육에 대한 수백 시간의 특별 교육을 받고 사회과로 전공을 바꾸어 가르치고 있는 교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개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편차는 각자의 사회과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시민교육의 양태와 질이 담당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

3) 일반적 평가 및 평가 기준

시험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위의 교수활동이 끝날 무렵에 실시된다. 개별 교사 차원에서는 진단 평가, 형성 평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단위 학교나 교육청 및 국가 수준에서는 총괄평가(종합평가)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이란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교사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교수 활동, 학교의 교육 정책의 공과(功過)를 파악하여 수업 및 교육 활동을 개선하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국 시험은 그동안 수행해 온 교육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차원뿐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차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험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든 교육청이나 국가 수준의 시험이든 시험의 주체 및 단위에 상관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이와 관련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시민교육 교과만을 별도로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국가 수준에서 시민교육 관련 교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험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2) 시민교육의 질 모니터링

한국에서 시민교육 관련 교과에 해당하는 사회과, 도덕과의 교수학습만을 독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교과 수업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시민교육 관련 교과 수업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단위 학교 내에서 동료 교사들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장학(supervision)이다. 장학은 매년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각 교과 수업을 동료 교사와 관리자에게 공개하고 수업에 대한 토론과 논평을 주고받으며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절차이다. 최근에는 장학에 비해 수업자의 의사와 맥락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컨설팅도 확산되고 있다. 수업 컨설팅은 학교 내부 구성원(동료 교사, 관리자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는 외부 전문가(대학 교수, 연구원, 수업 컨설팅 전문가 등)에 의한 방식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점차 학부모에게도 수업 관찰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해외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변천

1) 영국의 민주시민교육

(1)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배경

모든 교육내용이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겠지만 특히 시민교육의 경우는 그 내용의 특성상 정치·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영국의 시민교육도 예외 없이 영국 정치 흐름을 반영하는데 시민교육의 실시에 있어 우호적이었던 정치 정당은 보수당보다는 노동당이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보수당 정부시절에는 자유 민주주의 사조가 만연하던 시기여서 통치 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핵심을 이루었다.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극대화 되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아래서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Crick, 2000).

그러나 1997년 총선에서 영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교육, 교육, 교육(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노동당이 오랜만에 집권함으로써 교육은 물론 사회제도와 복지제도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노동당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사상보다는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Civic Republicanism)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노동당은 보수당 정부가 강조하던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개인의 시민적 책무성, 타인의 요구와 다른 관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역할, 사회에의 기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Park, 2011). 이러한 배경 하에서 노동당 정부는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강화를 주도하였고,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안에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방치해오던 정치참여, 개인의 책임과 의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사상 등을 담았다. 사실 이런 시민 공화주의 사상은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수당 정부에서는 배제하던 이데올로기였다(Crick, 2000).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진 청소년의 문제와 다문화주의의 심화, 사상 최저의 선거 참여율 등은 영국 사회에 자유 민주주의 사상보다는 시민 공화주의 사상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Harber(2005)에 따르면 1997년 노동당 집권 전까지 시민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또 다른 이유는 영국 시민혁명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의 시민혁명은 온건하게 무혈주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탓에 영국 사람들에게는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처럼 독재정권하에서 자유가 탄압될 때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마련인데 영국 사람들은 이에 대한 갈망이나 투쟁, 혹은 노력 없이, 다시 말해 대가없이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대신 책임보다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져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도 손상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노동당은 1990년대 이후 영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영국의 재건과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공교육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강화하였고, 이에 시민교육을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안에서 의무화시키면서,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가르치고자 하였다(박선영, 2011).

이런 노동당의 정치적 배경 하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7년 크릭(Crick)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기술부(DfES)안에 '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민 교육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시민성의 정의,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시민교육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시민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의에 그 시대의 정신과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도입과 실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이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영국의 교육기술부가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QCA, 1998).

‘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시민교육의 의미와 내용, 목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Crick 보고서(Crick Repor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라고 하는데 이 별칭은 현대 시민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Crick 교수의 이름을 딴 것이다. Crick 보고서에는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민교육의 3대 주요 요소를 사회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으로 규정하였다(QCA, 1998:40-41).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에서는 필수 교과로, 초등학교(Primary Schools)에서는 선택교과로 시민교육이 포함되었다. 정치학자 출신인 Crick 교수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시민교육의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정치 문해(Political Literacy)이다. Crick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 문해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QCA, 1998). 그러므로 영국의 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정치 문해 교육과 실천에 필요한 민주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관용, 이해, 존중 등과 같은 덕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 정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교과의 명칭인 citizenship이 지니는 개념의 모호성과, 교사가 느끼는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업무 부담, 담당 전문가의 부족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Harber, 2005). 물론 2000년대 초기보다 2000년대 중반으로 올수록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태도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교과목 도입 이전에 좀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하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영국은 학교에게만 시민교육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시민단체 또는 청소년 단체와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는 시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는 시민교육의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동 운영과정을 통하여 학교는 새로운 교과과정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전문가로부터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시민교육 단체로서의 특성화와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가장 큰 유익은 시민교육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실천과 실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와 공동으로 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주로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민교육의 지식과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민교육의 공동 운영은 시민교육 실시에 있어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Park, 2007).

이 외에도 시민교육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작 시민교육이 필요한 16세 이후의 청소년들은 의무교육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어서, 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NEET족²⁾이 되는 경우 이들은 시민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영국은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지 않은데다가 16세 이후 청소년들의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후 시민교육은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향을 내어놓고 있기도 하다(박선영, 2011). 또 시민교육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므로 시민교육에서는 경제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고 사회나 국가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이 경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된다.

아래의 <표 II-1>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을 요약한 것으로 시민교육 교과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2011년 현재 교육과정이 개편 중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다른 국가교육과정이 소개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1998년 개정되어 2011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시민교육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과 4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때, 독립교과로 실시될 수도 있고,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로도 실시될 수 있어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뒤에서도 다시 논의하겠지만, 시민교육을 통합교과보다는 독립교과로 실시할 때 시민교육 효과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들은 독립교과로 실시할 경우 시민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대학에서 시민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도 많지 않아, 사실상 시민교육 전담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학교의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PSHE(Personal, Social, Health, Economy)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시민교육 교과목 운영의 현주소이다.

표 II-1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연령	5-7	7-11	11-14	14-16	
연도	1-2	3-6	7-9	10-11	

2)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을 갖지도 않으며, 어떤 식의 훈련과 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영어	■	■	■	■	핵심 교과
수학	■	■	■	■	
과학	■	■	■	■	
디자인과 기술	■	■	■		비핵심교과
정보통신기술	■	■	■	■	
역사	■	■	■		
지리	■	■	■		
현대외국어			■		
예술과 디자인	■	■	■		
음악	■	■	■		
체육교육	■	■	■	■	
시민성			■	■	
종교교육	■	■	■	■	
직업교육			■	■	
성교육			■	■	
진로관련 현장학습				■	
PSHE(개인, 사회, 건강, 경제 교육)	□	□	□	□	

* ■ : 법정과목 □ : 비법정과목 ³⁾

(2) 시민교육의 목적

현재 시민교육의 기초가 된 모델은 1997년 교육고용부 장관의 교육백서에서 처음으로 시민교육의 국가교육과정예의 도입이 논의된 이래 Crick 교수와 자문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전술하였다. 영국 시민교육의 목적이 Crick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는데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가치를 가르치고 권리, 의무, 책임을 알게 하여 학생을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학교·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QCA, 1998). 시민교육의 세부 목표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는 것, 의회·정당·압력단체·임의 단체 등의 성격 및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 영국 및 유럽의 정부 조직, 시민사회,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이해하는 것, 납세와 세금운용, 경제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http://www.nc.uk.net/nc_resources/html/ks3and4.shtml

이때 제시된 시민교육의 3대 요소는

- 사회적·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ies)
- 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
- 정치 문해(Political Literacy)

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이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의 안과 밖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은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요구된다. 즉 Crick 보고서는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참여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여,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통해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시기의 사회참여는 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정치 문해란 정치적 지식, 기술, 가치를 배우고 실제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민주적 의사소통과 실천이 포함된다.

영국의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의 목표를 핵심단계별로 나누어 상술한 것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영국의 핵심단계(key stage)별 시민 교육 목표

학년	시민교육의 목표 ⁴⁾
key stage 3 (7-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와 사건에 대한 이해 ●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경제적 제도와 체계의 역할 이해 ● 학교, 이웃,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감 있는 참여 ● 학교·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 이해
key stage 4 (10-1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로 정치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문제·사건을 학습, 사고, 토론 ●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입헌적인 경제 체제의 작동 과정과 영향에 대하여 깊이 이해 ● 자신의 학교·이웃과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창의적 비판과 평가 ● 학교·지방·국가·세계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공정·사회정의·존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

(3) 시민교육의 내용

시민교육이 국가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평가원은 시민교육학습방안을 제시하여 교사들에게 시민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주제와 주제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국은 국가수준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각 교육청과 학교는 재량껏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시민교육 학습방안의 내용을 Key Stage 3과 Key Stage 4 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① Key Stage 3의 시민교육 학습내용

표 II-3 영국의 key stage 3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영역	내용 ⁵⁾
학식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권리, 인간적 권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감, 주요 법 체제의 기본 측면 등과 청소년과의 관계 ● 국가, 지역, 종교, 인종적 정체감의 다양성과 상호존중 및 이해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재정에 대한 이해 ● 의회제도와 다른 정부 형태의 특징 ● 선거제도와 투표의 중요성 ● 국가적, 국제적 자원 집단인 지역 사회의 역할 ●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 ● 사회에서의 매체의 중요성 ●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 의미와 EU의 역할, 영연방과 UN
탐구와 의사소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와 ICT기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주제별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하여 사고 ● 그와 같은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구두나 글로써 표현하고 정당화 ● 탐구를 위한 집단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에서 일부 역할 수행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과 비판을 통한 타인 이해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협상과 의사결정 및 존중 ● 참여의 과정 고찰

4) 김원태 외 (2005)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발췌

5) 김원태 외 (2005)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발췌

② Key Stage 4의 시민교육 학습내용

표 II-4 영국의 key stage 4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영역	내용 ⁶⁾
학식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지식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인간적 권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감, 정의 ● 영국에서의 다양한 국가적, 지역적,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의 기원과 상호 존중과 이해에 대한 필요 ● 법 제정에 있어 정부, 법원의 역할 ● 민주주의와 선거과정에서 활발한 참여의 중요성 ● 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 지역, 국가, 유럽, 국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인 ● 인터넷, 정보, 매체의 역할, 언론 자유의 중요성 ● 소비자, 노동자, 기업가의 권리와 책임감 ● EU, 영연방, UN을 포함하여 유럽과의 관계에서 영국 ● 지속가능한 개발과 Local Agenda 21을 포함하여 세계적 상호의존, 책임감
탐구와 의사소통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및 ICT를 사용한 정보 분석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에 대한 연구) ●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구두나 글로 표현 및 정당화 ●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
참여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과 비판을 통한 타인 이해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협상과 의사결정 및 존중 ● 참여의 과정 고찰

(4) 2007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영국 시민교육의 변화와 평가

① 시민교육의 요소 변화

영국 정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새로운 시민교육의 3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비판을 최소화하고 시민교육의 국가교육과정 실시 이후의 평가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판을 받던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한 다문화주의의 포섭이라는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영국사회내의 공정하고 평등한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민주주의와 정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 사회 참여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계속되는데 이 역시 개인의 사회권이자

6) 김원태 외 (2005)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발췌

책임으로 보았다. 주요 내용이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 변경된 3대 시민교육의 요소와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DfE, 2010).

표 II-5 시민교육의 3대 요소의 변화

2002년	2007년 이후
개인적·도덕적 책무성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참여	권리와 책임
정치문해	정체성과 다양성

표 II-6 2007년 이후 시민교육의 3대 요소

3대요소	내용
민주주의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정의로서의 공평과 법 규율, 힘과 권위, 책임 -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책임 -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 -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책임에서부터 의회와 국회 등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 인식
권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법적, 인간적, 사회적, 시민적, 도덕적 수준에서의 권리, 의무, 책임 이해 - 권리와 책임의 균형
정체성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사는 법 습득 - 다양한 정체성 인식 - 영국의 다문화 역사, 현황 및 배경을 이해 - 변화와 사회통합, 공존 이해

② 새로운 시민성 척도 제시

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시민교육 목표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단계별 시민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국립교육연구재단과 IEA의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해 영국 자체적으로 시민성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QCDA, 2010).

수준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성 관련 주제에 대해 대화 가능 -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 가능 -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 - wants와 needs를 구별 -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혹은 다른 사회에 대해서도 질문 가능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해 의견 개진 - 자신의 참여가 어떻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가능 - 모든 사람이 wants와 needs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 wants와 needs의 차이 구분 - 상황적 정의 이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웃과 좀 더 넓은 지역 사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인식 - 주어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 - 자신의 생각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 - 다른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며 권리주장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해 - 민주주의의 일부를 인식하며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 - 사회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 - 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일 경우에 한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충돌을 포함하여 논쟁이 될 만한 사안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탐색가능 - 다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견이 다른 여러 사안들을 제시 -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개발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음 - 토론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찾아 이용할 수 있음 - 영국사회내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 - 시민교육에서 제시된 주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동 가능 - 개인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설명,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가능 - 지역사회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중재되어야 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 가능 - 국가, 유럽연합, 세계적인 수준에서 각기 다른 집단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판단 가능 - 문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 및 탐구능력 -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의사소통 - 다문화가 영국사회에 주는 유익을 이해하고 세계의 상호연계 이해 -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협력하여 참여 가능 - 영국의 사법제도,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부에 대해 이해 - 시민교육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관련된 투표와 캠페인에 참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 -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정보선택에 있어 편견을 배제할 수 있으며 중립된 자료를 선택 - 높은 수준의 토론이 가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측과 가정이 가능 -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타당하게 설득 - 집단 안에서의 역할을 분담,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 - 집단의 발전을 위한 기여가 가능, 발전적인 대안 제시 -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영국과 세계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 가능 - 지역에서 세계사회에 이르기까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받고 존중받으며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 - 영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 - 개인 간 국가 간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에 대해 이해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의 근본원인을 탐구 -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수 있음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의무가 상충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음 - 영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분석 - 정치적 또는 사법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 평가 - 다른 형태의 정부의 장단점을 표현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성 이슈와 관련된 지식을 사용하고 응용 -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 - 민주주의, 정의, 권리와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 문제해결을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여러 종류의 연구기법을 활용하고 응용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참여 시도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아주 높은 수준에서의 질문이 가능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시민성의 수준을 8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시민성이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또 낮은 단계의 시민성이 옳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2007년 이전에 제기되었던 다문화주의의 존중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척도는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항목도 누락되어 있다. 유럽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성과 시민성에 대한 실천이 척도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것도 영국 시민교육의 향후 발전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2001년 ~2010년 시민교육의 성과⁷⁾

2001년 영국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Skills)는 국립교육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NFER)에 의뢰하여 시민교육의 효과성과 성과에 대한 종단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때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의 시민교육에 있어서 장·단기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둘째, 학교, 교사, 개인적 수준과 같은 변수가 시민교육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보고 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종단연구를 위해 2002년 처음 시민교육을 경험한 7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을 2년에 한번씩 2009년까지 조사하였다. 횡단연구도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영국 전역의 8학년, 10학년, 12학년에서 각각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할 때마다 300개의 학교를 샘플로 설정하였다. 질적 연구로서의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12개의 학교를 2년에 한번씩, 시민교육 담당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기적으로 국립교육연구재단은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으며 최근까지 진행된 평가를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 청소년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인 혹은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가?
-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위해 시민교육의 실시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을 통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활동이란 학교 학생회에서의 투표와 청원활동, 학교 학생회에서의 참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증가하였다. 즉 자선단체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이나, 자선단체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의 문제 및 활동에의 참여율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Schulz, W. et al.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EA.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교육과정 외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다. 특히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에의 참가율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인이 되어서의 정치참여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투표나 선거에의 참여, 자원봉사 참여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참여는 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의 참여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그것이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와 공정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특히 난민이나 이민자, 재소자, 사회보장, 환경 규제 정책 등에 대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국 정부가 2000년대 중반이후 보수주의 사상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청소년들은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 국가, 유럽연합 수준에 있어서의 소속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소속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곱째, 사회, 시민사회,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학년이 올라가도 변함없이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09년의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였고 이때 조사에 의하면 33퍼센트의 학생들이 정치인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 영국에 총선 결과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노동당을 누르고 보수당이 집권하였다. 노동당은 이라크전쟁에의 파병으로 자신들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총선에서 패배하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정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치·사회제도에 대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 청소년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첫째, 청소년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민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 시민사회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 이 경우는 시민교육에의 경험이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민교육을 통해 습득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청소년은 개인으로서 정부, 학교, 가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시민성함양에 있어서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 청소년의 나이, 삶의 배경, 성격, 시민교육에 대한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민교육에 대한 태도나 관심이 굳어지고 있어서 저학년에 시민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시민교육의 형태, 시민교육 시간, 학습경험들은 시민성 함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시민교육을 매주 45분 이상 정기적으로 별도로 실시했는지 여부,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y Education: 개인, 사회, 보건, 경제 교육) 교사가 아닌 시민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시민교육 실시 여부, 시민교육을 공식적으로 평가(특히 GCSE 중등학교 자격 졸업시험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교육 실시 여부 등이 시민성 함양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다. 시민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효과적인 시민교육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지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국가수준의 시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서도 시민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통해 영국의 시민교육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의 독립적인 실시와 주당 45분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질 때 효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민교육이 통합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시민교육만을 위한 시간에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45분 이상의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에서 학습된 것이 외부 평가를 받거나,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주어질 때 시민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교육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역시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민교육 전담교사가 있어야 하고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y Education: 개인, 사회, 보건, 경제 교육) 교사에 의한 시민교육 실시는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교육이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의무교육 기간 내내 이루어져야 하고 의무교육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시민교육의 효과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다섯째, 시민교육의 3대 요소중의 하나인 정치문해(Political Literacy)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하다. Crick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3대 요소 중 정치 문해를 가장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서 정치문해를 다루기란 쉽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전담교사를 위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하며 정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정치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해 함양을 위한 정책과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치 문해 이외에도 교사와 학교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주요한 교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에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보장, 또 학교 밖에서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다.

라. 미래의 시민교육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통하여 국립교육연구재단은 시민교육이 분명히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고, 정치참여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불어넣었다고 하였다. 또 시민교육을 통하여 개인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학교, 지역사회의 전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교육연구재단의 연구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9.11사태 이후에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영국군을 파병한 것을 계기로 영국에서 2000년대 중반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 청소년들의 시민서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당시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이 강했는데 노동당의 무리한 이라크파병 추진은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 역시 정치로부터 대해 관심을 돌리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청소년시기의 시민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가 성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의 시민교육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성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7년 시민교육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국립교육연구재단의 10년에 걸친 연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2)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1) 미국 시민교육의 배경

미국은 주마다 독립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민주시민역량을 위한 교육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50개의 연방정부는 각 주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교육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교육 제도와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 미국에는 영국처럼 국가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이 없다. 다만 연방 정부 수준에서 교육과정 안내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교육의 운영과 실시는 전적으로 주정부와 학교 현장의 몫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진 교과목의 명칭도 아주 다양해서 social studies, citizen education, civic education, civics, civic learning, educ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cy, community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government 등이 있다(Owen 2011). 제일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civic education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교육 시간에 다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교육을 영국이나 다른 유럽의 경우처럼 일반화시키거나 정량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시민교육을 civic education이라고 보았을 때, civic education의 역사는 유럽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국가형성 과정이 유럽 국가들과 다른 미국에서는 처음 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민주주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국가형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1865년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사회의 발전과 존속은 지식과 기술과 덕목을 갖춘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가적 필요에 의한 시민교육이 1916년에 이르러서는 존 듀이의 ‘Education for Democracy’ 에서 학문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Owen 2011).

이후 민주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감과 동시에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에서는 시민교육보다도 사회과 교과라 할 수 있는 social studies가 훨씬 우세하게 되었고, 1970년대는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 전쟁과 갈등을 반영한 사회과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종교 근본주의 같은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반감과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방편의 하나로 사회과 교육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기도 하여 이때는 윤리, 도덕, 시민교육, 종교교육 같은 과목들이 학교로부터 배척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는데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상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사상이 붕괴되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종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다시 한 번 사회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사회과 교과와 부활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민교육이 점차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미국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유로 사회와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등한시 된 것을 꼽는 보고서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1987년에는 Center for Civic Education 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교양 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시민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Center for Civic Education에서 국가 수준으로 제시한 시민교육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교육에 해당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 내에서의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시민교육의 요소

Center for Civic Education은 1987년 설립 이후 CIVITAS라는 교재를 발간하여 시민성과 정부구조, 정치 등에 대한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국가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1991년 처음으로 발간된 CIVITAS는 영국의 Crick 보고서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http://new.civiced.org/>)

- Civic Virtue(시민적 덕목):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들에 대한 약속과 특징
- Civic participation(시민 참여):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등에 영향을 주고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참여적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문제와 이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
- Civic Knowledge(시민적 지식)와 intellectual skills(지적 기술): 시민들에게 시민성에 관련한 지식과 지적기술을 제공하여 공공정책의 계획, 실시, 입안 등등에 사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이상의 3대 요소를 가지고 CIVITAS가 제시하는 시민교육의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다.

(<http://new.civiced.org/>)

- 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 공공 정책, 법, 헌법 기구
- 넓은 의미의 사회, 문제, 지역사회 문제와 갈등, 이웃지역의 문제와 갈등
- 개인적 차원 : 시민적 태도, 성향, 공공의 약속 등

Center for Civic Education은 CIVITAS 이외에도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이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http://new.civiced.org/>)

- 정부는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는 무엇인가?
- 미국식 민주주의의 원리, 가치, 헌법의 구성목적에 의해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미국과, 다른 국가와 세계 정세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 미국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시민교육의 내용

① 사회과 교과에서의 시민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사회과 교과는 시민교육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과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과교육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이하 NCSS)에서는 사회 교육(Social Studies)이 시민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민교육이라고 보았다(김원태 외, 2006). 또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과의 목표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과교육위원회(NCSS)에서 제시하는 국가수준의 사회과 주제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8 미국 사회과의 10개 주제(strand)

주제	내용 ⁸⁾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문화간 공통적 특징 · 종교, 정치적 이상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 문화의 변화와 신념의 관계 · 언어와 문화의 관계
시간, 연속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체성 · 과거와 역사 · 개인과 과거 · 세계의 변화와 미래
인간, 공간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위치 · 타인의 위치 · 지역의 의미와 지형 변화의 원인 · 변화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
개인의 발달과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학습 · 사람의 행동 · 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욕구충족의 방법
개인, 집단 및 제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기관의 형성과 제도/기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제도/기관이 개인과 문화에 주는 영향 · 제도/기관의 역할 · 제도/기관의 변화와 나의 역할
권력, 권위 및 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의 개념 및 형태 · 권력의 소유자 · 권력의 성취와 사용, 정당화 · 합법적 권위 권력은 무엇인가? · 정부의 성립, 구조화, 유지 및 변화 · 개인의 권한과 다수의 원칙
생산, 분배 및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 조직 · 소비재 분배 ·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배분
과학, 기술 및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과 오래된 기술 · 신기술의 사회변화 초래가 주는 교훈 · 변화에 대응하기 · 최대다수의 혜택을 위한 기술 관리 · 기술변화와 우리의 가치 및 신념 보존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환경, 인권, 경제 경쟁, 독립, 민족 간 갈등, 정치적 및 군사적 동맹 등과 같은 국제적인 쟁점
시민성의 이념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와 방법 · 시민성의 의미 · 권리와 의무의 균형 · 공동체와 국가 구성원의 역할 ·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에의 기여 가능성

위의 표에서 보듯이 ‘시민성의 이념과 실천’이라는 주제가 사회과 교과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0개의 주제 모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회과 교과가 시민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시민교육에서 중요시 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실천과 사회참여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과가 가지는 문제와도 같다. IEA의 국제시민교육 비교연구에서는 비록 한국의 사회과 교과가 한국의 시민교육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과 교과서가 정치 지식에만 치중하고 있고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미국의 사회과 교과 역시 한국의 사회과 교과가 가지는 실천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Center for Civic Education에서의 시민교육

Center for Civic Education은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지침서(The National Standards)’ 등을 발간하고 초·중·고등학생용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시민교육 국가표준 지침서가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9 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학교 시민교육용 프로그램

프로그램(교재) 이름	내 용 ⁹⁾
우리 시민은...(시민과 헌법)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	미국의 역사와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
민주주의의 기초 (권위, 프라이버시, 책임, 정의) Foundations of Democracy (Authority, Privacy, Responsibility, Justice)	입헌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 개념에 관한 내용 - 권위, 프라이버시, 책임, 정의
우리 시민은...(시민 참여 계획) We the People...(Project Citizen)	중학생들이 자신의 주나 지방 정부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흥미를 개발
시민으로서의 실제 참여 Exercises in Participations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의 참여 기술을 개발(마약, 폭력 등의 세부주제 포함)

8)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9)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3) 유럽의 시민교육

(1) 유럽 내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

유럽과 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시민성 관련 교육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민주사회와 그에 관련된 권리 등의 보전, 사회 참여, 적극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 사회 통합(국내 통합 및 유럽연합 통합), 세계화, 동반자 의식 등.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시민교육의 기본이 되는 철학은 민주주의, 권리, 책임, 인내, 존경, 평등, 다양성, 지역사회 등이다. 이런 철학적 배경 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에는 지식과 이해, 기술, 태도의 영역으로 나누는 공통점이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모두 영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Park, 2007).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여러 다른 용어들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시민교육에 상응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 시민성, 인권교육, 도덕 교육, 윤리, 사회과학, 사회 연구, 세계연구, 근대화연구, 세계화 교육, 형화교육, 사회와 삶의 기술교육, 역사, 지리, 영어, 매체교육, 정치, 개인과 사회교육, 경제, 비즈니스, 법, 가치교육, 종교, 환경, 건강 등. 영국의 국립교육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중단연구와 횡단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연구 책임자인 David Kerr는 유럽에서 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Kerr, 등, 2010). 첫째,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인한 국민들의 빈번한 교류와 이동으로 자국 내 시민성이나 시민교육의 의미가 1980년대와 다르게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국 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역할과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럽연합회원국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유럽의 통합은 사회 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켰다. 이에 시민교육을 통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은 초기에 냉전체제로부터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 통합에서 시작되었지만 20세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경제통합을 넘어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더 나아가 운명 공동체적 통합에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개념 도출과 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각국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인식과 평등, 공정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다섯째,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자국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다중 시민성의 역할과 개념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유럽 자체 내의 지형변화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시민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크고 작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육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유럽 내 시민교육의 조직 및 구성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시민성, 혹은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접근방법,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Park, 2007).

표 II-10 중등학교에서의 시민성 교육 조직

국가	용어	접근방법	주당시수
영국	Citizenship	법정교과	학교재량
호주	Human society and its environment(HSIE)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캐나다	Social studies, history, law, political sciences and economics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프랑스	Civic linked to history and geography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가능	전체 역사/지리 26시간 중 3-4시간
독일	Social studies linked to history, geography and economics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헝가리	People and society with specific social studies, civics and economics courses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전체 커리큘럼 가운데 10-14%
이탈리아	Civics linked to history and geography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4시간
일본	Social studies, history, geography and civics and moral education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7-8학년: 175X50분(연간) 9학년: 140X50분(연간) 9학년 이상의 중등학교: 140X50분(연간)

한국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법정교과, 통합 혹은 독립교과	170X45분~204X45분 (연간)
네덜란드	Civics and citizenship and social studies	법정 통합교과	12세-15세:180시간(3년 동안) 16세-18세:2-4시간(주당)
뉴질랜드	Social studies	법정 통합교과	정해지지 않음
싱가폴	Civics and moral education	법정교과, 통합 혹은 특별교과	2X30분
스페인	Civic linked to history, geography and social studies	비법정교과, 독립 혹은 통합교과	주당 3시간
스웨덴	Social science including history, geography and social studies	비핵심 통합교과	9년의 의무교육기간 중 총 885시간
스위스	Social studies	비법정 통합교과	정해져 있지 않음
미국	Social studies including civics and government	법정 핵심 교과, 독립교과 혹은 통합교과	주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

(3) 프랑스의 시민교육

① 시민교육의 배경

프랑스는 같은 유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보다 앞서 1960년대부터 시민교육을 독립교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유로는 프랑스가 거느리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과 사회변화에서 기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프랑스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민교육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지속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김원태 외, 2006). 그 결과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시민교육이 많은 중등학교에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이 1985년 슈벤느망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중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보다는 비행학생에 대한 선дона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국처럼 중앙정부 안에 교육부가 존재하고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교육부가 프랑스 내 모든 교육에 이어서의 결정권과 교육과정운영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민교육 역시 지방정부보다는 교육부가 그 내용과 운영에 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단 시민교육은 법정 필수교과이고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 국립교육연구재단의 David Kerr 교수를 중심으로 한 시민교육 중단연구에서 프랑스는 최근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프랑스가 스스로 제외한 것인지, 연구대상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는 시민교육이 2000년대 이후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 내 다문화주의의 심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의 도구로서 시민교육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② 시민교육의 내용

먼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 -11 중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¹⁰⁾

학년	영역	세부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규칙 ● 인간의 권리와 의무 ● 생활과 환경에 대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생활 - 평등성교육 - 학생의 권리와 의무 - 학생과 시민권 - 사회, 환경, 유적에 대한 책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 연대성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앞의 평등 - 인종차별 - 인간의 존엄성 - 연대의식 - 위기 상황 대처 교육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와 권리 ● 프랑스 법원 ● 인권과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자유 -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권리 - 정보 활용 - 정의의 원칙 - 공동체적 가치 - 유럽 시민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 ● 공화국 권력의 조직 ●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 ● 민주주의 토론 ● 국방과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평등, 정의, 공화국 - 통치권 - 세계체제론, 참여민주주의 - 일반적 이해(利害) - 안전, 책임감, 윤리 - 평화와 전쟁

10)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내용이다.

표 II-12 일반계 고등학교 시민교육 내용¹¹⁾

학년	학습주제	
1	사회생활과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과 예의규범 ● 시민권과 통합 ● 시민권과 노동 ● 시민권과 가족관계의 전환
2	제도와 시민성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의 행사, 정치권력의 대표제와 정당성 ● 시민권의 행사, 정치참여의 형태와 집단적 행위의 형태 ● 시민권의 행사, 공화제와 특색의 교수 ● 시민권의 행사와 시민의 의무
3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 시민권과 정의-평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 ● 시민권과 유럽연합의 건설 ● 시민권과 세계화의 형태

다음은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의 내용이다.

표 II-13 직업계열 고등학교 시민교육 내용¹²⁾

과정	주제
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의 행사-예의규범, 인권과 시민권 ● 시민권의 행사와 통합 ● 시민권의 행사-노동과 사회적 정의 ● 시민권의 행사-대표제와 정치적 참여 ● 시민권의 행사와 오늘날의 주요 도전
B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과 예의규범 ● 시민권과 통합 ● 시민권과 노동 ● 시민권과 가족관계의 변화 ● 시민권, 대표제, 정치적 참여
직업 바칼로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의 행사-공화국, 민주주의, 특색의 교수 ● 시민권의 행사와 시민의 의무 ● 시민권의 행사와 평등-정의의 새로운 요구들 ● 시민권의 행사와 과학기술의 발전 ● 시민권의 행사-유럽연합 결성과 세계화의 형태

11)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12) 김원태 외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에서 요약 및 수정

위의 표에서 보듯이, 프랑스는 영국과 미국보다도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각각 나누어 시민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시민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이 각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므로, 이에 맞게 별도로 분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민교육의 주제들을 보면 고등학교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 그리고 성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과정에서의 시민교육의 내용에는 중학생으로서의 생활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민교육이 단지 정치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학교까지는 프랑스 자국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좀 더 넓은 수준의 지역사회, 즉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독일의 시민교육

① 시민교육의 배경

독일은 프랑스와는 달리 교육의 지방차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주별로 각각의 독립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독일에서 정치교육으로 이미 많이 실시되어 왔으며 특히 독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독일의 분단 상황을 반영하여 보이텔스 바흐 합의를 통하여 동독과 서독이 서로 교화 및 주입을 금지하고, 학문과 정치에서의 논쟁을 수업시간에도 반영하며, 학생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을 약속하였다(Hahn, Carole L, 2010). 이러한 합의가 현재 독일의 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시민교육의 목표 및 내용

독일의 시민교육은 법정 필수교과가 아니지만 정치교육이라고 불리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시민교육에 상응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 중등학교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이명희 외, 2000).

- 인간존중을 사회적·정치적 과제로 이해
- 남녀평등의 이해
-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이해
-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요구와의 균형적 시각 함양
- 현대사회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 정치제도, 민주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
- 현재와 미래의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
- 다원주의 이해
-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시각 함양
- 관용, 합리적 대화, 타협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관계 이해

독일 정치교육의 내용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개인과 사회, 사회적 구조, 제도와 정치체제, 정치적 행위의 기준과 가능성으로 나뉘며 이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세부주제를 학습하게 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중학교 수준보다 훨씬 심화되어 사회영역, 경제영역, 법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4) 유럽과 미국의 시민교육 비교

(1) 공통점 : 시민교육의 강화

① 시민교육의 세계적 부흥

현재의 시민교육이 세계 각국에서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은 1989년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주의의 붕괴의 영향이 컸다. 구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세계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각국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첫째, 공산주의의 붕괴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출현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시민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의 필요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공산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서구 복지국가의 존속에 대한 논란과 국내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 복지주의의 근본 뿌리는 사회주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당연히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근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이 요구되었다. 셋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제2의 근대화, 개인주의 심화, 가치관의 파괴, 사회 해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급속한 사회교류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과 새로운 모습의 청소년 사회화, 미디어의 영향력 증대, 새로운 형태의 폭력, 무질서, 근본주의 대두 등의 사회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회변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공산주의 몰락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9.11테러라는 방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시민교육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자국 내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배경이 존재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민교육이 강화된 이유는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② 시민교육 강화의 공통적 이유

1990년대 이후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2009년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¹³⁾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적 위협의 증가가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유럽 대륙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주의 증가가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불공정이 민주주의 정부를 위협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13) ICCS 연구는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IEA는 본래 교육성취에 대한 국제적 평가기구로 처음 연구는 1971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두 번째 연구가 1999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시민교육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시민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두 번째 연구를 IEA Civic Education Study(CivEd)로 부르기도 한다. CivEd는 이후 14세 이상 중등학교 학생의 시민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로 시민교육의 분야를 2개로 나누기도 하였다. 기존의 CivEd연구가 마무리되고 2009년에는 새롭게 ICCS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연구의 목적은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역량강화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정하게 된 것이다. 넷째, 비정부기구(단체)의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NGO 활동을 통하여 환경, 인권, 종교적 문제 등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NGO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영국만 보더라도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을 시민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Park, 2007).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근대화과 세계화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하였다. 즉 새로운 미디어와 소비, 사회구조의 변화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고 이러한 논의가 바로 시민교육에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③ 자국 청소년 역량강화와 사회통합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는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청소년의 비행문제,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시민교육에서 청소년 개인의 책임과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국 내 청소년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럽회원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사회과 교육과 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시민교육 보급을 통하여 청소년의 미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국정치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다. 각국은 청소년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차이점

ICCS의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연구에 참여한 나라는 38개국이나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프랑스, 독일, 미국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나라들에서 발견된 시민교육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첫째, 영국은 IEA초기부터 국제 시민교육 비교에 참여하였고,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국립교육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영국 자국 내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교육이 노동당 집권 이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시민교육의 주요요소가 수정되는 등, 시민교육에 있어서 그 어느 국가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강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시민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비교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의 자국 내 시민교육에 대한 강화보다는 유럽연합 시민으로서의 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국은 유럽연합회원국이기에는 하지만 유럽연합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회의적이기도 하였으므로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국 내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ICCS의 국제 청소년시민교육 비교에 대한 연구 참여 대신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연구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 내 사회통합, 사회적 포섭, 인권에 대한 존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민교육이 통제된다. 그러나 영국과의 차이는 프랑스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평등·박애주의 사상에 입각한 시민교육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1974년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정신에서 비롯된 공익에 대한 정신이 시민교육에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시민혁명의 정신을 현재까지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프랑스의 시민교육만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대두된 사회의 갈등을 시민교육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담겨 있긴 하지만 프랑스는 2004년 다문화주의 확산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종교 탄압(이슬람 여학생의 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이 테러 사태로까지 확산된 경험이 있어 다문화주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Kisby & Sloam, 2009)

넷째, 독일은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여전히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은 ‘citizenship studies’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패전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극단적 우파 이데올로기, 극단적 민족주의 등을 청산하며 관용과 인내, 인권존중의 사상을 진흥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민교육 대신 정치교육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관용의 가치를 지닌 개인이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과, 사회와 정치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인을 육성하는 것이다.¹⁴⁾ 세계 대전을 경험한 독특한 독일의 역사의식과 역사청산에서 비롯된

14) 독일 기본법(Basic Law) 33조의 내용

독일식 시민교육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민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미국은 다소 미국 우월주의 발상에 기초해 세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시민교육 내용에는 미국식 정치, 미국식 민주주의, 세계 나라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시민교육에서는 오히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정체성, 가치, 연대, 세계화에 대한 내용 등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4. 한국 시민교육에의 시사점

1) 시민교육의 제도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시민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영국과 프랑스의 아동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시민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시민교육 평가보고서에서도 시민교육이 정기적으로 시민교육 전담교사에 의해 실시될 때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도 ICCS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와 시민교육의 내용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지식의 실천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사회과 교과는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민교육이 새로운 독립 교과목으로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영국의 사례처럼 시민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 과정 안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관 지어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정치 문해 강화

정치 문해란 정치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문해는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구조,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적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치 문해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므로 선거권이 있건 없건,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령 아동과 청소년 수준에서의 정치참여는 여론형성에의 참여, 캠페인, 집회 참여, 의견 개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입시 같은 사안을 놓고 청소년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정치 문해 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다. 또 2011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 SNS를 이용한 정치참여와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길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시민교육 전담교사는 중립성을 지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한국형 시민성 척도 개발

2009년 ICCS 연구에 한국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시민성 평가 문항들을 보면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문항들이 더러 있다.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원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고, 국제비교연구 자체도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고유한 시민성과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한국사회에서만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노인공경이나 충효사상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민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시민성 척도는 현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정체성 등의 개념이 먼저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다.

4) 시민교육 중단 연구 및 횡단 연구 실시

영국의 국립교육연구재단이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중단 연구와 횡단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를 깊어지게

될 미래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담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청소년 시민성 비교연구에도 계속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연구자 양성 및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정책수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한다.

제 3 장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과 연구사례

1. 사회적 자본과 민주시민역량
2. 핵심역량(Key Competencies)과
민주시민역량
3. IEA의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4. IEA의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2009)

[제 3 장]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과 연구사례

1. 사회적 자본과 민주시민역량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본(personal capital)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 혹은 사회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학자인 콜먼(Coleman) 등에 의해서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성장에 있어 개개인의 지적·정의적 능력 이외의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콜먼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 요소로 타인이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trust), 효과적인 규범(effective norms),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퍼트남(R.Putnam)은 개인과 개인 간의 협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단결(solidarity), 신뢰(trust), 관용(tolerance), 조직·결사(association)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Putnam, 2000).

표 III-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사회적 자본 측정요소	세부 측정내용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관련 요소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활동 및 강도	●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장애요인	○
	정치참여활동(정치, 투표참여)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이웃에 대한 친밀감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정치결정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	●

지역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structures or support)	지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 소음 등 환경문제	
	지역의 공공서비스(교육, 교통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	○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계(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친구·친척·이웃과의 접촉의 질·양	●
	친구·친척·이웃과의 접촉장애요인	○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
신뢰, 사회적 응집성 (trust, social cohesion)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

* 주: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측정하는 요소

* 출처 : 김태준 외, 2008: 24.

이와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회적 자본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매카니즘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관련 지표와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된 SCI(Social Capital Initiatives)는 12개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계량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한 질적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OECD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부유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빈곤에 대한 우려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룩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은 민주시민역량의 핵심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시민역량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데, 이를 위해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동의를 얻어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핵심역량(Key Competencies)과 민주시민역량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OECD(2005, 2006)는 현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Use tools interactively),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Act autonomously),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주의·시민, 국가정체성·국제관계, 사회적 유대·다양성을 핵심영역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김기현·장근영 외, 2010)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과 연관되어 있다.

표 III -2 OECD DeSeCo 핵심역량의 세 가지 영역

핵심역량	정의
지적도구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본원에서 2010년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련 지표를 기초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간접 추산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하위영역은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로 구분된다. 우선 ‘관계지향성’ 영역은 2개의 척도를 사용했다. 우선 2009년 ICCS 척도의 학생 배경문항 중 Q33번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 에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었다. 두 번째 척도는 같은 조사의 Q27 ‘정부,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 대중’ 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협력’ 영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조사지에서 학교 밖 공동체활동 참여를 묻는 Q14 문항 중에서 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와 ㉕ 기부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2009년도 ICCS 조사에서 산출한 시민성 지식(Civic knowledge) 점수를 사용했다. 민주주의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갈등관리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III-3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지표구성

영역	세부내용
관계 지향성	· 2009 ICCS Q33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그럴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 · 2009 ICCS Q27 ‘정부,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 대중’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사회적 협력	· 2009 ICCS Q14 d)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e) 기부단체에 대한 참여 여부
갈등 관리	· 2009 ICCS 에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국가별 시민지식 평균점수

분석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은 비교대상인 36개국 중에서 35위로서 매우 낮았다(김기현 외, 2010). 구체적으로는 비교대상 22개 OECD 국가 중에서도 2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 지표를 구성하는 2009년 ICCS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지만 신뢰나 태도 면에서는 오히려 매우 낮았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관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식수준의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관계지향성(참여)이나 사회적 협력(신뢰)에 해당하는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이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핀란드는 오히려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영역의 개념과 실제 척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4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점수와 국가 간 비교 결과

영역 국가명	관계지향성		사회적협력		갈등관리		전체	
	평균	B-Score	평균	B-Score	평균	B-Score	전체 B-score 평균	순위
오스트리아	59.10	0.27	43.00	0.61	503	0.63	0.52	16
벨기에	52.00	0.09	41.50	0.58	514	0.68	0.47	22
불가리아	70.70	0.55	38.50	0.52	466	0.44	0.49	15
칠레	68.50	0.50	40.00	0.55	483	0.53	0.52	9
대만	61.00	0.31	18.50	0.11	559	0.91	0.45	23
콜롬비아	75.00	0.66	49.00	0.73	462	0.42	0.59	6
키프로스	62.80	0.36	39.50	0.54	453	0.37	0.41	30
덴마크	50.60	0.06	24.00	0.22	576	1.00	0.45	28
도미니카공화국	81.50	0.82	62.00	1.00	380	0.00	0.60	5
영국	58.00	0.24	42.50	0.60	519	0.71	0.53	12
에스토니아	57.30	0.22	29.50	0.34	525	0.74	0.44	27
과테말라	73.10	0.61	59.50	0.95	435	0.28	0.59	4
인도네시아	89.00	1.00	45.00	0.65	433	0.27	0.64	2
아일랜드	61.90	0.33	46.50	0.68	534	0.79	0.60	7
이탈리아	68.60	0.50	23.50	0.21	531	0.77	0.50	17
대한민국	48.30	0.00	13.00	0.00	565	0.94	0.31	35
리히텐슈타인	54.80	0.16	42.00	0.59	531	0.77	0.54	14
리투아니아	64.50	0.40	27.00	0.29	505	0.64	0.44	25
룩셈부르크	58.60	0.25	40.00	0.55	473	0.47	0.44	29
몰타	62.80	0.36	32.00	0.39	490	0.56	0.45	26
멕시코	69.40	0.52	45.00	0.65	452	0.37	0.51	13
뉴질랜드	58.30	0.25	43.50	0.62	517	0.70	0.53	11
노르웨이	55.40	0.17	36.00	0.47	515	0.69	0.47	24
파라과이	75.20	0.66	60.50	0.97	424	0.22	0.61	3
폴란드	56.20	0.19	41.50	0.58	536	0.80	0.52	10
러시아	74.50	0.64	29.00	0.33	506	0.64	0.53	8
슬로바키아	62.20	0.34	26.50	0.28	529	0.76	0.46	19
슬로베니아	59.90	0.29	34.00	0.43	516	0.69	0.47	18
스페인	64.70	0.40	29.00	0.33	505	0.64	0.46	20
스위스	52.00	0.09	37.50	0.50	531	0.77	0.48	21
태국	82.20	0.83	56.50	0.89	452	0.37	0.69	1
최고점	89.00	1.00	62.00	1.00	576	1.00		
최저점	48.30	0.00	13.00	0.00	380	0.00		
전체평균	62.97		36.42		500.03			

3. IEA의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교육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1999년에 실시한 시민교육수준 조사(CivEd: Civic Education Study)는 최초로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간단히 말해서 세계 각국의 8-9학년(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려는 의도였다. CivEd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내용은 결국 환경의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인간 발달·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근거로 시민의식 측정을 위한 시민교육의 주제 영역을 개념화했다(Torney-purta 등, 2001). 총 28개국의 참여국 사이에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여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시민교육의 주제영역으로 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지역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과 다양성 같은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을 도출했다. 각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Baldi 등, 2001).

- 영역 1: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의식
- 영역 2: 국가 정체성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
- 영역 3: 사회적 유대와 다양성 포용에 대한 인식

또한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 유형1) 내용에 관한 지식의 측정
- 유형2) 시민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해석하는 기술의 측정(예: 만화, 전단지)
- 유형3)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측정
- 유형4) 태도의 측정 (예: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 정도)
- 유형5)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에 대한 참여 행동의 측정

1) 조사도구의 구조

IEA CivEd는 조사 내용과 문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표 III-5 IEA CivEd의 시민의식 문항구조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
영역1 민주주의 인식 영역	25	13	52	70	24
영역2 국가적 정체성/국제관계 영역					
영역3 사회통합/다양성 영역					

각 영역별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민적 내용의 지식과 정보의 해석 기술

IEA 조사도구에서는 38개의 지적 능력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25개의 문항이 내용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13개의 문항이 시민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예를 들면, 세금의 형평성에 있어서의 차별, 비민주적 정부의 행위, 대규모 출판사의 신문 독과점의 결과, 역사책에 관한 만화의 주요 메시지, 전단지 출처, 민주주의에서 조직이나 단체가 중요한 이유, 복수정당제의 기능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1971년 IEA 시민교육조사에서도 포함된 바 있으며, 이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응답을 하였다. 1999년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에 장애가 되는 위협요소(예-정치부패), 긍정적 요소(예-자유 투표) 등을 포함하였고, 대부분의 문항은 첫 번째 영역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은 1971년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에 관하여 훌륭한 시민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6개의 문항을 가지고 평가되었으며, 관습적인 정치 참여(투표, 정당이나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와 사회운동에의 참여(환경이나 인권그룹에의 소속)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1999년의 시민의식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이 개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정부의 책임은 크게 경제 관련 정부의 책임(고용의 보장, 가격 조정, 산업지원, 실업대책, 부의 형평 조절)과 사회 관련 정부의 책임(의료보장, 노인복지, 교육 보장, 여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의 보장, 환경오염 관리, 순서(order)의 보장, 도덕적 행위의 증진), 이렇게 크게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3) 국가, 정부, 이민자 및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태도

시민의식은 지식 외에 공통의 가치와 태도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 하에 IEA 조사에서는 영역1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 공공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때의 두려움, 영역2에서 지원이나 소외에 대한 이슈, 국가에 대한 감정, 국가나 정치적 상징에 대한 일체감, 영역3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기회 혹은 권리에 대한 지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시민단체, 대중매체, 학교 및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대중매체로는 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과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국기에 대한 느낌, 국가에 대한 자긍심, 다른 나라에 살고자 하는 경향성 등)등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이민자와 여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통합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포함된 영역이다. 이민자에 대한 문항은 이민자들의 고유 언어와 관습을 지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다른 시민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4) 시민의 참여(civic engagement)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특징 중 하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여부는 직접 물어보았고, 정치적 정보에 대한 노출은 정치적 뉴스를 담은 매체(TV, 라디오, 뉴스 및 기사)에의 노출 빈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 예상은 정당에의 참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는 것,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것, 투표참여에의 의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조사되었다. 사회운동에의 참여는 청원서 서명, 비폭력적 항의 집회에 참여 등의 문항을 통해 관습적이지 않은 불법적 형태의 정치행동은 벽 등에 항의문을 쓰는 것, 항의의 형태로 교통을 차단하는 것, 건물을 점거하는 것 등의 질문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이 외에 자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 등도 포함된 바 있다.

4. IEA의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2009)

CivEd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난 2009년에 IEA는 CivEd를 발전시킨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를 실시했다(ACER, 2010a). 이 ICCS 조사는 CivEd의 내용영역을 확대하고 인지 영역 및 태도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한 것이다.

ICCS 시민성 평가 틀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첫째는 민주시민으로서 알거나 내면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 영역으로 여기에는 시민사회와 체계에 대한 내용,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앞서 언급한 ICCS에서 사용한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정의인 ‘시민성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과 사고력을 실제 일상생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은 민주시민역량의 정의와 부합한다. 이 시민성과 시민의식은 언급한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대 내용 영역 모두에 대한 이해와 추론, 적용 능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나머지 두 영역은 각 내용에 관련된 지식과 행동이라는 두 차원을 말한다. 즉 ICCS에서는 시민역량을 크게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하는 셈이다. 이 두 차원 중 첫번째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와 행동에 관한 정의-행동 영역이다. 여기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신념,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행동의 동기, 그리고 실제 행동이 포함된다. 두번째는 인지영역으로서 역시 지식 자체와 추론/분석 능력으로 구분된다. 영역의 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6 IEA ICCS 2009의 시민성 및 시민의식 개념구조

		내용영역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영역	지식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평등 -자유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시민의 자아상
	추론과 분석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	-사회 통합	-공동체 참여	-시민 유대감
정의-행동 영역		가치/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민주주의의 가치/신념 -시민적 가치/신념	-자신, 타인, 기관, 정 책에 대한 태도	- 투표참여의사 - 의견표현의사 - 정치적항의	-학생활동참여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ICCS에서 상정한 구체적인 내용영역의 주요 개념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는 2010년 ICCS 1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38개 참여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친 것이다(ACER, 2010a).

표 III -7 ICCS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의 개념정의

권력/권위	●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그들을 위해 만드는 조직체나 개인들이 가진 권한 혹은 능력의 본질과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들이다.
규칙/법	● 행동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침들이다. 규칙은 국가에 의해 강제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강제되지 않는 지침들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지침들이다.
헌법	● 국가 또는 국가 하위 조직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기본 규칙 혹은 기본 법
행정(통치)	● 공공 정책 및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절차
의사결정	● 시민 기관과 국가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
협상	● 협상을 지탱하고 협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협상의 이용과 그 필요성
책무	● 대표자들이 자신의 의무 수행 및 권력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답변해야 할 필요성. 책무성은 대표자들이 그들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민주주의	● ICCS의 이론적 틀은 “사람들에 의한 지배” 라는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수용한다. 이 정의는 통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을 지탱하고 인권의 존중과 신장을 보증하는 자유, 평등, 사회 통합의 원리들을 모두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회)와 직접 민주주의 체제(지역 공동체 또는 학교 기구와 같은 조직) 모두가 민주적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권	● 각 개별 국가가 자국에 적합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궁극적 힘을 가진다는 권리 주장. 이것 때문에 국제 조직, 협정, 조약이 작동하고 실행될 수 있다.
국민 형성	● 장기간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국민들 사이에 모종의 통합된 국가 정체감을 건설하는 과정. ICCS 평가 틀의 매개변인들 중 국민 형성은 신생 독립국에 한정되어 관련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무국적성	● 어떤 국가와도 국민성 혹은 시민성의 법적 연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이 개념은 무국적성의 원인과 결과를 포함한다.
참정권/투표	●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상황에서 선거할 권리, 책임, 그리고 기대감을 의미한다. 또한 이 개념들은 강제 선거, 자발적 선거, 그리고 비밀 투표처럼 투표 및 투표과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더 폭넓게 지칭한다.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를 관장하는 시스템과 산업 ● 규제, 무역, 과세, 사회 복지를 포함하는 내용
복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연금,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같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사회 경제적 안전을 유지하는 정부의 역할
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해 체결된 구속력 있는 협정
지속가능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는 요인들에는 환경 보호, 경제 개발, 사회적 평등, 사회 정의가 있다.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돈, 정보, 사람의 국제적 이동 증가,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 조직, 법적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ICCS 시민교육 평가 틀은 세계화의 정의, 지각, 존재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국제적 논쟁을 인정한다. 세계화는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평가 틀에 포함된다. 이 정의는 세계화의 장점 또는 존재에 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표 III-8 ICCS 내용영역 2)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의 개념정의

공공선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공동체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증진하는 것이다.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CS 시민교육체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자격의 형태는 UN 세계인권선언(1948)의 내용에 정의되어 있다.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타인의 역할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
사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안에서 이익과 불이익의 배분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동할 책임을 지닌다는 개념.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특징(사례: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

표 III-9 ICCS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개념정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동체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여에서 이익을 얻고, 그러므로 시민 공동체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시민의 자기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이 시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는 개인들 자신의 판단.
협동/응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협력할 때 공동체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개념(이러한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있음을 허용한다).
협상/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점의 평화적 해결은 공동체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협상이 해결책을 도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개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공동체 안의 이슈와 정보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표 III-10 ICCS 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 영역의 개념정의

시민 자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 이 관점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시민적 역할의 본성과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다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과 자발성의 범위에 대한 개인의 인식. 위의 정의에는 개인의 역할과 자발성의 본성이 개별적인 각각의 공동체가 연계된 맥락에 의지하며 변해간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공동체들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점들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개인의 지각.
문화/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공민적 삶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교제하는 문화의 가치와 장소에 대한 감각
애국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헌신 혹은 사랑. 이것은 개인이 국가를 지탱하려는 의지로 이어진다.
국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심을 국민적 정체성이 사회적, 정치적 원리에 우선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리들 혹은 프로그램으로 정치화하는 것.
시민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내에서 시민 공동체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윤리적, 도덕적 신념

이 ICCS 조사는 본 연구의 개념적 방법론적인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2009 ICCS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

ICCS 2009 결과 요약

1. 척도의 구성
2. ICCS 2009의 평가기준
3. 조사대상자
4. 조사결과

제 4 장 ICCS 2009 결과 요약

1. 척도의 구성

1) 인지영역 척도의 구성¹⁵⁾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S)의 인지영역 척도는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7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맥락 하나에 그 맥락과 연관된 둘 이상의 문항이 제시되는 유닛 형태로 만들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79문항 중 73개 문항이 객관식, 6개 문항은 주관식이었으며 주관식 문항은 4문장 이내의 길이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덧붙여 ICCS 조사문항 풀(pool)에는 1999년 CivEd 조사에 사용한 17개 문항을 포함시켜서 1999년 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CivEd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영역은 다시 내용 면에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인지적 과정의 측면에서 지식 영역과 추론과 분석 영역이라는 2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그 결과 전체 하위영역은 8개가 된다(2영역 × 4내용영역). 평가도구는 모든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리고 그 내용별 적용능력을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평가도구의 4개 내용 영역별 문항 구성 비율은 ‘시민사회와 시스템’ 이 40%, ‘시민공동체 원리’ 가 30%, ‘시민 참여’ 가 20%, ‘시민 정체성’ 이 10%. 그리고 두 인지 차원 영역별 문항 구성비는 ‘아는 것(knowing)’ 25%, ‘추론과 분석’ 이 75% 이다.

평가 문항들은 7개 문항군(cluster)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6개 문항군은 각각 주관식 문항 하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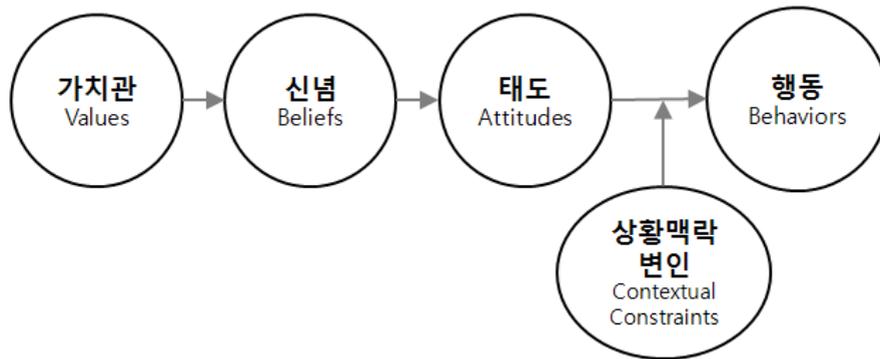
15) 본 장의 주요 내용 중 일부 결과는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I: 총괄보고서” (p.100-140)에서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ICCS 조사결과의 총괄적인 소개가 필요하여 본 연구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인용하였다.

포함하여 10-1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7번째 문항군은 CivEd와의 연계를 위해 포함시킨 문항들로 본 보고서와는 무관하다. 이 조사에 응답하는 학생들은 79개 문항에 전부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 학생들에게는 위의 7개 문항군 중에서 3개씩을 골라내 구성된 7가지 질문지(test booklet) 중에서 하나씩만을 배정했다. 문항군 구성방식은 균형순환배분(balanced rotation) 원칙을 따랐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생 한 명이 응답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평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79개 평가문항으로부터 라쉬(Rasch) 모형을 사용하여 ICCS 인지 척도(cognitive scale)를 만들었다. 산출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84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최종 산출된 학생 성취도 통계치(summary student achievement statistics)는 전체 조건을 고려한 능력추정치 산출법(plausible value methodology with full conditioning)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선 각 학생에게서 5개의 개별 능력 추정치(separate plausible values)를 산출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 과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종 보고서의 성취도 점수는 각국의 표본에 공평한 가중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평균 500(ICCS 평균 점수), 표준편차 100인 정규분포로 변환했다.

2) 정의-행동 영역 척도의 구성

정의-행동영역은 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4가지 내용영역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기준으로 다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기초로 그 행동에 대한 자기만의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 다음에야 그 행동을 할 의지가 발생하고,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논리적인 연쇄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는 대개의 이론들이 전제하는 공통적인 단계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행동모형의 대표적인 학자 피쉬베인(Fishbein)과 아이젠(Ajzen)은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Fishbein & Ajzen, 1975).



【그림 N-1】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모형(1975)

따라서 이 구분은 영역이나 차원이라기 보다는 행동에 이르는 단계(stag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4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가치-신념’ 단계로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해 어떤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인지적 차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태도 단계로 그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호오와 적극성을 의미하며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정서적 차원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미래 행동 의도’로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 그대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는 지금 현재 응답한 청소년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물어보는 문항들로서 (정의-행동 영역 중에서는) 실제 행동의 단계에 해당한다. ICCS에서는 인지영역 문항들에 대해서는 내용영역에 따른 구분을 중시하지만, 정의-행동 영역에 문항에 대해서는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욱 중시한다. 이 단계 구분은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표 IV-1 ICCS 2009 영역별 문항배분화

	내용 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내용 영역 2: 시민 공동체 원리			내용 영역 3: 시민 참여			내용 영역 4: 시민 정체성	
	시민	국가 조직	시민 조직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 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 자아상	시민 유대감

인지 영역

지식	14문항			4문항			1문항			0문항	
추론과 분석	17문항			22문항			17문항			5문항	
계	31문항			26문항			18문항			5문항	

정서-행동 영역

가치 신념	12문항			12문항			0문항			0문항	
태도	12문항			18문항			18문항			14문항	
행동 의도							21문항				
행동							14문항				
계	24문항			30문항			53문항			14문항	

2. ICCS 2009의 평가기준

ICCS에서 설정한 시민지식 수준(achievement scale)은 평가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를 기초로 한다. 성취도 기준 설정작업은 측정도구에 포함된 79개 문항 각각에 대해서 그 문항의 내용(content)과 그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적 요소(cognitive process)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다음 이 문항 기술에 기초해서 각 문항의 난이도 수준을 산정하여 문항의 난이도수준표(item map)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항별 난이도 수준표에 근거해 시민지식 수준(level)을

구분했다. 산출된 시민의식 수준은 395점, 479점, 그리고 563점에서 나뉘는데 각 시민지식 수준의 범위는 84점씩을 차지한다. 395점 미만인 경우는 이 조사도구가 애초에 전제한 시민성과 시민 지식의 최저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지식 수준의 내용은 그 수준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기술을 종합해서 기술했다. 원칙적으로 시민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성에 대한 내용적인 지식과 사고력이 (양적으로) 더 정교해진다. 그 정교화의 내용은 특정한 인지구조 모형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낮은 레벨은 단순히 알기만 하는 상태이고 높은 레벨은 아는 것을 분석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식의 구분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수준마다 그 수준 나름의 이해와 분석과 응용능력이 존재한다. 단지 정교함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수준에는 시민성과 시민지식의 각 개별요소들을 종합하는 과제와 그 내용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각 수준마다 그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면 시민지식과 실제 사회체계와의 상호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참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기술했다. 크게보자면, 시민지식의 낮은 수준에서는 주로 구체적이고 익숙하고 기계적인 시민성 요소들을 다루지만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형태를 규정하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요소를 다루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민지식 성취 수준표는 그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시민 지식이 더 정교하다는 점에서 위계적(hierarchical)이지만 특정 수준으로 평가된 학생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은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가정된다는 점에서는 발달적(developmenta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취 수준표가 시민지식을 교육해야 하는 순서(necessary sequence of learning)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에 따른 성장은 일반적으로 이 성취수준표에 기술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Level 1의 특징은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와 일반적인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준의 학생들은 시민성과 시민의식의 “큰 개념” 들을 알고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익숙한 맥락에서는 무엇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민 관련 기관들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수준의 학생은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수준1과 상위 수준들을 구분 짓는 핵심 요인은 학생이 시민 관련 기관의 기능에 대해 표현하는 지식의 구체성의 정도 및 기계론적 사고의 양이다.

Level 2의 학생은 일상에서 널리 접하는 시민 관련 기관, 제도, 개념에 대해 얼마간의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학생은 시민 관련 기관들과 그 기관들의 활동 과정 및 체계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친숙한 맥락에서 원리 혹은 핵심 개념과 그것이 정책이나 실행(policy or practice)에서 실현(operationalization)되는 것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공식적인 공공 절차를 자신의 일상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고, 능동적인 시민의 잠재적 영향권은 지역공동체 맥락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수준2와 수준3을 구분 짓는 핵심 요인은 정책과 실행의 평가 및 타당성 증명에 지식과 이해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Level 3의 학생은 시민성과 시민의식 개념에 대해 파편적인 지식과 이해가 아닌 통합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인다. 이런 학생은 시민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및 행동의 장점을 평가하고, 입장이나 계획(positions or propositions)의 타당성을 증명하며, 결과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이 수준의 학생은 일종의 기계적 반응이 아닌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시민지식의 능동적인 실천을 이해하며, 시민지식의 실천방안들을 그것을 통해 의도한 결과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

ICCS에는 38개국¹⁶⁾에서 총 5,215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각 학교의 학교장 5,215명을 비롯하여 교사 60,588명, 학생 140,650명이 ICCS의 설문과정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8학년)의 청소년들로 평균 연령은 14.4세였다.

ICCS 2009의 모집단 대상은 2008년 기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ICCS 2009의 표집절차에 대해서는 김태준(2009)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150개 학교가 최종 표집되었다. 표집방법은 유층화된 2단계 군집표집(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층변수는 지역(서울·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과 도시화 정도(도시와 농촌)였다. 일단 유층을 구성한 후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probability proportional by size) 학교를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표집된 학교에서 1개의 학급을 무선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표집된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표집대상이었다. 따라서 자료구조상 각 학생들은 학급에 내재(students nested with classroom)되어 있는 형태다. 그런데 학교당 1개 학급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학생은

16)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대만,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홍콩, 네덜란드(김태준, 2009).

사실상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집 총 사례수는 5,254명이었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대개 5천명 내외의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IEA에서는 이 표집을 통해 해당 국가의 모수(population)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 하위표집마다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치를 전체 자료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IEA에서는 국제데이터베이스 분석툴(IDB Analyzer)을 개발하여 ICCS 조사데이터와 함께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2011년 11월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ICCS 조사분석 자료도 이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4. 조사결과

1) 인지 영역 조사 결과

인지영역의 조사결과는 평가문항 점수의 총합인 시민지식 점수(civic knowledge score) 로 표기된다. <표 IV-2>은 조사 참여 국가별 학생들의 시민 지식 평균점수를 보여준다. 국가별 시민 지식 평균점수는 380에서 576점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시민 지식 수준1에 미달하는 수준에서부터 수준3에 이르는 범위이며 거의 표준편차 2에 해당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마다 시민지식 점수의 평균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중앙의 백분위 그래프를 보면 학생들의 시민 지식 점수 분포를 알 수 있다. 한국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했다.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로 평균 576점이었으며 덴마크도 같은 576점이었지만 표준편차가 더 커서 그 다음 순위가 되었다. 분석결과 한 국가의 평균점수와 그 국가 학생들 점수의 분산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내 점수의 변산이 국가 간 점수 변산보다 컸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위 5퍼센트의 점수와 상위 5퍼센트의 점수가 약 300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평균점수는 ICCS 평균점수(500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가 평균점수가 ICCS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은 나라가 14개국이었고 국가 평균점수가 ICCS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은 나라는 18개국이었다.

표에서 인접한 국가 간의 평균점수 차이는 대개 10점 미만(표준편차의 1/10)으로, ICCS 참여국들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일관된 기울기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4개 국가, 즉 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만 국가 간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간에는 최대 17점의

격차가 있었으며 이들 중 가장 아래인 대만과 그 다음 국가인 스웨덴 간의 격차는 22점이었다.

표 IV-2 ICCS 2009 각 국가별 시민지식 점수

영역 국가명	시민지식	Level1 미만(%)	Level 1(%)	Level 2(%)	Level 3(%)
	평균 점수	395점 이하	395~479	479~563	563점 이상
덴마크	576	4 (0.5)	13 (0.8)	27 (1.1)	56 (1.6)
핀란드	576	2 (0.3)	10 (0.7)	30 (1.2)	58 (1.3)
대한민국	565	3 (0.3)	12 (0.6)	32 (0.9)	54 (1.1)
대만	559	5 (0.4)	15 (0.8)	29 (1.0)	50 (1.3)
스웨덴	537	8 (0.8)	21 (0.9)	32 (1.1)	40 (1.4)
폴란드	536	9 (1.0)	19 (1.1)	31 (1.0)	41 (2.0)
아일랜드	534	10 (1.1)	20 (1.4)	29 (1.2)	41 (1.8)
이탈리아	531	7 (0.7)	20 (1.0)	35 (1.0)	38 (1.5)
리히텐슈타인	531	8 (1.4)	18 (1.9)	30 (2.4)	45 (2.0)
스위스	531	6 (0.8)	21 (1.5)	37 (1.3)	37 (1.8)
슬로바키아	529	7 (0.9)	22 (1.4)	34 (1.4)	37 (2.2)
에스토니아	525	8 (1.1)	22 (1.3)	34 (1.4)	36 (2.1)
영국	519	13 (1.2)	22 (0.9)	31 (1.2)	34 (1.6)
뉴질랜드	517	14 (1.2)	22 (1.5)	28 (1.4)	35 (2.1)
슬로베니아	516	9 (0.9)	25 (1.1)	36 (1.2)	30 (1.2)
노르웨이	515	11 (0.9)	24 (1.1)	33 (1.1)	32 (1.3)
벨기에	514	8 (1.2)	24 (1.7)	39 (1.6)	29 (2.1)
체코	510	10 (0.7)	27 (1.0)	36 (1.1)	28 (1.1)
러시아	506	10 (0.9)	29 (1.5)	36 (1.2)	26 (1.8)
리투아니아	505	9 (0.8)	28 (1.2)	39 (1.2)	24 (1.3)
스페인	505	11 (1.3)	26 (1.3)	37 (1.5)	26 (1.8)
오스트리아	503	15 (1.4)	25 (1.2)	32 (1.2)	29 (1.4)
몰타	490	17 (1.6)	26 (1.8)	33 (1.9)	24 (2.3)
칠레	483	16 (1.3)	33 (1.2)	32 (1.3)	19 (1.1)
라트비아	482	15 (1.6)	33 (1.3)	35 (1.7)	16 (1.4)
그리스	476	22 (1.7)	28 (1.3)	29 (1.1)	21 (1.4)
룩셈부르크	473	22 (1.2)	30 (1.0)	29 (0.8)	19 (0.6)
불가리아	466	27 (1.8)	26 (1.5)	27 (1.6)	20 (1.9)
콜롬비아	462	21 (1.3)	36 (1.0)	32 (1.1)	11 (0.8)
키프로스	453	28 (1.0)	32 (1.0)	27 (1.0)	13 (0.9)
멕시코	452	26 (1.3)	36 (1.1)	27 (1.0)	10 (0.8)
태국	452	25 (1.6)	38 (1.4)	29 (1.6)	8 (1.1)
과테말라	435	30 (1.7)	42 (1.6)	22 (1.4)	5 (1.2)
인도네시아	433	30 (1.9)	44 (1.5)	22 (1.3)	3 (0.7)
파라과이	424	38 (1.9)	35 (1.6)	20 (1.2)	7 (0.7)
도미니카공화국	380	61 (1.6)	31 (1.3)	7 (0.6)	1 (0.2)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우리나라는 앞서 평균점수의 순위에서와 마찬가지로 Level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핀란드와 덴마크가 1, 2위를 차지했다. 이 표의 국가 순위가 시민지식 성취도의 평균점수 순으로 제시된 표 3.10의 국가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평균점수에서와 순서가 달라진 경우는 시민성 평균 점수가 유사한 국가들이라도 각 수준별 학생의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Level 1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3퍼센트에 불과했다. 모든 국가를 통틀어 84퍼센트의 학생이 시민 지식 level 1, 2, 3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대체로 학생들의 점수가 level 2나 3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국가에서는 level 3의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또 다른 13개 국가에서는 level 2의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학생의 60퍼센트 이상이 level 2나 level 3에 해당되는 나라가 22개국이었다. 반면, 2개 국가에서는 level 1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8개 국가에서는 level 1의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학생의 60퍼센트 이상이 level 1 미만인 나라가 7개국이었다. 이 결과는 ICCS 시민 지식 점수의 분포가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ICCS 시민 지식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4개 국가(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의 경우, 학생의 50퍼센트 이상이 수준 3에 해당하고 80퍼센트 이상(단, 대만은 79퍼센트)이 level 2와 3에 해당했다. 반면에, 시민 지식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4개 국가에서는 70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level 1 미만에 해당했다.

2) 정의-행동영역 조사결과

(1) ICCS 2009 시민 기관에 대한 신뢰

최근 50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신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인의 기관에 대한 신뢰가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Inglehart(1997)는 신뢰를 일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고, 이러한 신뢰가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또한, Klingemann(1999)는 정치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정치적 과도기를 겪은 사회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Hahn(1998)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IEA의 시민교육에 관한 1971년, 1999년 조사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 간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번 ICCS 2009에서 학생설문조사 문항에서는 중앙정부부처,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대중을

포함한 시민기관에 대한 신뢰정도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신뢰함,” “무척 신뢰함,” “약간 신뢰함,” “매우 불신함” 등 4점 척도로 물었으며 각 국가간 비교 분석은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표 IV-3〉는 조사 참여 국가별 학생들의 신뢰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당에 대한 신뢰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평균 41%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 기관, 미디어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60%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학교 기관에 대해 평균적으로 75%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하여, 학생들이 기관 중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웨덴, 태국이고, 반대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들은 벨기에, 대만, 키프로스, 그리스, 과테말라, 아일랜드, 대한민국, 라트비아, 폴란드로 나타났다.

한국은 각 기관과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먼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치는 평균 62%보다 현저히 낮은 20%이었으며, 정당에 대한 신뢰 수치는 평균 41%보다 낮은 18%를 기록하였다. 미디어는 평균 61%에 비해 낮은 51%이었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는 평균 75%보다 낮은 45%였다.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 역시 평균 58%에 비해 낮은 39%였다.

표 IV-3 ICCS 2009 각 국가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정부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 대중	
	점수	편차	점수	편차	점수	편차	점수	편차	점수	편차
인도네시아	96	-0.4	66	-1.1	75	-0.9	96	-0.4	77	-0.8
핀란드	82	-0.8	61	-1	80	-0.8	76	-1	76	-0.8
태국	85	-0.8	61	-1	72	-0.9	91	-0.6	63	-0.9
도미니카 공화국	74	-1.3	51	-1.2	76	-1	88	-1.3	61	-1.3
리히텐슈타인	82	-2.1	64	-2.4	57	-2.5	70	-2.4	70	-2.4
이탈리아	74	-0.9	52	-1.1	81	-0.9	82	-0.8	52	-1
덴마크	72	-1	56	-1.2	56	-1	74	-1.1	68	-0.8
스웨덴	73	-1.2	60	-1.3	54	-0.9	64	-1.2	67	-0.8
파라과이	66	-1.3	32	-0.9	74	-1.5	88	-0.8	57	-1

룩셈부르크	72	-0.7	48	-0.7	62	-0.6	70	-1	64	-0.8
러시아	88	-0.7	51	-0.9	41	-1	84	-0.7	51	-1
몰타	62	-1.4	55	-1.7	70	-1.1	76	-1.7	50	-1.3
스페인	62	-1.2	40	-0.9	69	-0.9	82	-0.9	59	-1
오스트리아	77	-0.9	48	-1.3	53	-1	67	-1.2	64	-0.9
칠레	65	-1	34	-1	74	-0.7	80	-0.8	52	-0.9
콜롬비아	62	-1.2	35	-1.1	72	-1	87	-0.6	49	-0.9
슬로베니아	56	-1.4	45	-1.3	64	-1.1	68	-1.2	71	-0.9
불가리아	56	-1.3	32	-1.2	70	-1.1	80	-1	64	-1.1
리투아나	54	-0.9	33	-1.1	67	-0.9	80	-0.9	66	-0.8
스위스	69	-1	46	-1	54	-1.1	67	-1.2	64	-1.2
노르웨이	68	-1.1	56	-1	51	-1	72	-1.2	52	-1.1
영국	71	-0.9	43	-1.2	46	-1.2	73	-1	52	-1
체코	55	-0.9	28	-0.8	65	-1	73	-0.9	63	-0.9
뉴질랜드	66	-1	42	-1.2	49	-1.3	68	-1	58	-1.3
아일랜드	52	-1	40	-1.1	48	-1	75	-0.9	64	-1
과테말라	45	-1.4	26	-1	70	-1	88	-1	47	-1.1
멕시코	58	-1	35	-1	57	-0.8	72	-0.9	47	-0.8
에스토니아	62	-1.4	23	-1.3	54	-1	71	-1.2	58	-1
벨기에	51	-1	35	-1.1	48	-1	74	-1.2	57	-1.1
슬로바키아	57	-1.3	31	-1.2	58	-1.1	65	-1.2	51	-1.3
라트비아	32	-1.2	25	-1	65	-1.3	73	-1.2	58	-1.1
그리스	41	-1.2	25	-1.1	48	-1	73	-1	57	-1.1
키프로스	51	-0.9	31	-0.8	57	-1.2	57	-1.1	47	-0.9
대만	44	-0.9	26	-0.8	43	-0.8	71	-1	51	-0.9
폴란드	36	-1.2	23	-1.1	52	-1	63	-1.4	58	-1
대한민국	20	-0.7	18	-0.7	51	-0.8	45	-0.8	39	-0.7
ICCS 평균	62	(0.2)	41	(0.2)	61	(0.2)	75	(0.2)	58	(0.2)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2) ICCS 2009 성평등에 대한 태도

성평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1971년 IEA 조사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한을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이 그리고 1999년도 CivEd 조사에서는 6개 문항 주어졌었고, 이 두 조사에서 모두 여자 학생들은 여성들의 정치적인 권한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의 결과 또한 앞의 조사들의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여자 학생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도 높게 나왔다.

1999년도 CivEd 조사에서 모든 국가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또한, GDP가 낮은 국가들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ICCS 2009는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남성은 여성들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등 7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4점 척도로(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매우 동의하지 않음)하여 측정하였다.

국가별 양성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만, 덴마크,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불가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멕시코, 러시아, 태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IV-3〉 참조). CivEd 연구를 포함한 이전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관하여 더 많은 지지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6점 정도로 더 많은 지지율을 나타내었고, 그 편차가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였다.

Table 14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국가평균 National averages for students' attitudes towards equal gender rights overall and by gender

국가명	모든 학생 All students	여학생 Females	남학생 Males	성별 차이 (남-여) Differences (males - females)*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 Gender differences for attitudes towards gender equality				
					30	40	50	60	70
오스트리아	52 (0.3) ▲	56 (0.3)	47 (0.3)	-9 (0.4)					
벨기에 †	52 (0.3) ▲	56 (0.4)	49 (0.3)	-7 (0.4)					
불가리아	46 (0.3) ▼	49 (0.3)	43 (0.3)	-6 (0.4)					
칠레	51 (0.3) ▲	54 (0.4)	48 (0.3)	-6 (0.4)					
대만	55 (0.2) ▲	59 (0.2)	52 (0.2)	-6 (0.3)					
콜롬비아	49 (0.2) ▼	51 (0.3)	48 (0.3)	-3 (0.3)					
키프로스	48 (0.2) ▼	53 (0.3)	43 (0.2)	-10 (0.4)					
체코 †	48 (0.2) ▼	51 (0.3)	46 (0.2)	-5 (0.3)					
덴마크 †	54 (0.2) ▲	58 (0.2)	51 (0.3)	-7 (0.4)					
도미니카 공화국	44 (0.2) ▼	45 (0.3)	42 (0.2)	-2 (0.4)					
영국 †	53 (0.3) ▲	56 (0.3)	50 (0.4)	-7 (0.4)					
에스토니아	49 (0.3) ▼	51 (0.3)	46 (0.2)	-5 (0.3)					
핀란드	53 (0.2) ▲	58 (0.2)	48 (0.4)	-10 (0.4)					
그리스	50 (0.3)	55 (0.4)	45 (0.3)	-9 (0.4)					
과테말라†	49 (0.3) ▼	51 (0.4)	47 (0.4)	-4 (0.4)					
인도네시아	42 (0.2) ▼	44 (0.2)	41 (0.2)	-3 (0.2)					
아일랜드	54 (0.3) ▲	59 (0.3)	50 (0.4)	-8 (0.4)					
이탈리아	52 (0.2) ▲	55 (0.2)	48 (0.3)	-7 (0.3)					
대한민국†	50 (0.2) ▲	54 (0.2)	48 (0.2)	-6 (0.3)					
라트비아	46 (0.2) ▼	48 (0.3)	44 (0.3)	-4 (0.3)					
리히텐슈타인	53 (0.7) ▲	58 (0.6)	49 (0.9)	-9 (1.0)					
리투아나	48 (0.2) ▼	51 (0.3)	46 (0.3)	-5 (0.4)					
룩셈부르크	52 (0.2) ▲	55 (0.2)	48 (0.3)	-7 (0.3)					
몰타	51 (0.3) ▲	56 (0.4)	47 (0.3)	-8 (0.4)					
멕시코	45 (0.1) ▼	47 (0.2)	44 (0.1)	-4 (0.2)					
뉴질랜드†	52 (0.4) ▲	55 (0.4)	49 (0.5)	-6 (0.6)					
노르웨이†	54 (0.2) ▲	57 (0.3)	50 (0.3)	-7 (0.4)					
파라과이†	49 (0.2) ▼	51 (0.3)	46 (0.3)	-4 (0.4)					
폴란드	48 (0.3) ▼	51 (0.3)	44 (0.2)	-7 (0.4)					
러시아 연방	44 (0.1) ▼	45 (0.2)	42 (0.2)	-4 (0.3)					
슬로바키아†	48 (0.2) ▼	50 (0.3)	46 (0.3)	-4 (0.4)					
슬로베니아	52 (0.2) ▲	56 (0.2)	47 (0.4)	-9 (0.4)					
스페인	54 (0.3) ▲	57 (0.3)	52 (0.4)	-5 (0.4)					
스웨덴	55 (0.3) ▲	59 (0.2)	51 (0.4)	-8 (0.4)					
스위스 †	52 (0.3) ▲	56 (0.3)	49 (0.4)	-7 (0.4)					
태국 †	44 (0.2) ▼	45 (0.2)	42 (0.2)	-3 (0.3)					
ICCS 평균	50 (0.0)	53 (0.0)	47 (0.1)	-6 (0.1)					

표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 Countries not meeting sampling requirements

홍콩	51 (0.3)	55 (0.3)	49 (0.2)	-6 (0.4)
네덜란드	51 (0.5)	55 (0.6)	48 (0.5)	-7 (0.5)

National average

- more than 3 score points above ICCS average ▲
- significantly above ICCS average △
- significantly below ICCS average ▼
- more than 3 score points below ICCS averag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gender differences in bold.

* () 표준오차 () Standard errors appear in parentheses.

* 자료: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 여학생 평균점수 Female average score +/- Confidence interval
- 남학생 평균점수 Male average score +/-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평균적으로, 아래 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한 학생들은 양성평등에 대해 응답률50% 이상의 확률을 갖는다. On average, students with a score in the range indicated by this colour have more than 50% probability to respond to the statements regarding gender equality with:

■	긍정적 문항에 동의하지 않음, 부정적 문항에 동의함 Disagreement to positive, agreement to negative
■	긍정적 문항에 동의함, 부정적 문항에 동의하지 않음 Agreement to positive, disagreement to negative items

한국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서 국가 전체 평균과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은 50으로 국제 평균과 같았으며 여학생의 평균은 전체 평균 53점보다 1점 높은 54점이었다. 또한, 남학생들은 전체 평균보다 1점 높은 47점이었으며, 성별차이 역시 6점으로 평균과 동일했다.

(3) ICCS 2009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연구자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참여는 정치참여에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관심은 정치활동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치 참여에 관한 성 차이가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glehart, 1997). 1971년 IEA 연구에서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public affairs television)에 대한 관심은 시민지식과 참여에 긍정적 예측변수임이 나타났다.

ICCS 2009에서는 “지역공동체 정치적 쟁점”, “국가의 정치적 쟁점”, “국가의 사회적 쟁점”, “다른 국가들의 정치”, “국제정치”, “환경 이슈 등” 6개의 정치·사회 기관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였다.

〈표 IV-5〉을 보면, 국가별 그리고 성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에서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낮은 관심을 보였다. 성별차이는 일반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에 따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 50점이었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점수 모두 동일한 50점이었다.

Table 15 성별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국가평균 National scale score averages for students' interest in political or social issues overall and by gender

국가명	모든 학생 All students	성별 차이 (남-녀)* Differences (males - females)*		30	40	50	60	70
		여학생 Females	남학생 Males					
오스트리아	52 (0.2) ▲	51 (0.3)	53 (0.3)	2 (0.4)				
벨기에 †	45 (0.3) ▼	45 (0.4)	45 (0.4)	0 (0.5)				
불가리아	49 (0.2) ▼	49 (0.3)	49 (0.3)	0 (0.3)				
칠레	51 (0.2) ▲	52 (0.2)	51 (0.3)	-1 (0.3)				
대만	47 (0.2) ▼	47 (0.2)	47 (0.3)	0 (0.3)				
콜롬비아	52 (0.2) ▲	52 (0.2)	52 (0.2)	0 (0.3)				
키프로스	47 (0.3) ▼	46 (0.3)	48 (0.4)	3 (0.4)				
체코 †	47 (0.2) ▼	48 (0.3)	47 (0.2)	-1 (0.3)				
덴마크 †	48 (0.3) ▼	48 (0.3)	47 (0.3)	-1 (0.4)				
도미니카 공화국	57 (0.2) ▲	56 (0.3)	57 (0.3)	1 (0.3)				
영국 †	49 (0.3) ▼	49 (0.4)	49 (0.4)	-1 (0.6)				
에스토니아	50 (0.2)	51 (0.3)	50 (0.3)	0 (0.3)				
핀란드	46 (0.2) ▼	45 (0.2)	46 (0.3)	1 (0.4)				
그리스	50 (0.2)	50 (0.3)	50 (0.3)	0 (0.4)				
과테말라*	55 (0.2) ▲	55 (0.2)	54 (0.3)	-1 (0.3)				
인도네시아	55 (0.2) ▲	55 (0.2)	55 (0.2)	0 (0.2)				
아일랜드	50 (0.2) ▼	50 (0.3)	49 (0.3)	-1 (0.4)				
이탈리아	53 (0.2) ▲	53 (0.3)	53 (0.3)	0 (0.3)				
대한민국*	50 (0.2)	50 (0.2)	50 (0.2)	0 (0.3)				
라트비아	51 (0.2) ▲	51 (0.3)	51 (0.3)	0 (0.4)				
리히텐슈타인	50 (0.5)	50 (0.6)	50 (0.8)	1 (1.0)				
리투아나	51 (0.2) ▲	52 (0.2)	50 (0.3)	-2 (0.4)				
룩셈부르크	50 (0.2) ▼	49 (0.2)	50 (0.3)	1 (0.3)				
몰타	48 (0.3) ▼	48 (0.3)	49 (0.6)	1 (0.6)				
멕시코	52 (0.2) ▲	52 (0.2)	52 (0.2)	0 (0.3)				
뉴질랜드 †	50 (0.3)	50 (0.4)	49 (0.4)	-1 (0.6)				
노르웨이 †	47 (0.3) ▼	47 (0.3)	46 (0.3)	-1 (0.4)				
파라과이*	52 (0.2) ▲	52 (0.3)	53 (0.3)	1 (0.4)				
폴란드	50 (0.2) ▼	49 (0.3)	50 (0.3)	1 (0.4)				
러시아 연방	54 (0.2) ▲	53 (0.3)	54 (0.2)	0 (0.3)				
슬로바키아*	47 (0.2) ▼	47 (0.3)	47 (0.3)	0 (0.4)				
슬로베니아	45 (0.3) ▼	44 (0.3)	46 (0.4)	2 (0.5)				
스페인	49 (0.2) ▼	50 (0.3)	49 (0.2)	-1 (0.4)				
스웨덴	45 (0.3) ▼	46 (0.4)	45 (0.5)	-1 (0.5)				
스위스 †	51 (0.2) ▲	50 (0.3)	51 (0.3)	1 (0.4)				
태국 †	56 (0.1) ▲	56 (0.2)	56 (0.2)	0 (0.2)				
ICCS 평균	50 (0.0)	50 (0.1)	50 (0.1)	0 (0.1)				

표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 Countries not meeting sampling requirements

홍콩	52 (0.3)	52 (0.3)	52 (0.4)	0 (0.4)				
네덜란드	46 (0.3)	46 (0.4)	46 (0.4)	-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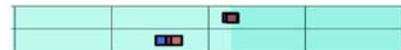
National average

- more than 3 score points above ICCS average ▲
- significantly above ICCS average △
- significantly below ICCS average ▼
- more than 3 score points below ICCS averag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gender differences in bold.

* () 표준오차 () Standard errors appear in parentheses.

* 자료: I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Female average score +/- Confidence interval
Male average score +/- Confidence interval

평균적으로, 아래 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한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 - 50% 이상의 확률을 갖는다. On average, students with a score in the range indicated by this colour have more than 50% probability to rate their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s:

관심 없음 Not very interested or not interested at all
관심 있음 Quite or very interested

(4) ICCS 2009 학교밖 시민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시민참여의 예측변수로서 공동체 그룹과 기관에서의 멤버십(membership) 또는 관여(involveement)를 사용한다. 이런 활동 관여정도(involveement)는 현재 참여(engagement)뿐만 아니라 미래참여의 예측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1999년 CivEd연구에서, 학생들은 기관과 활동의 참가(participation)에 대해서 응답요청을 받았다. 그 결과는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청소년 정당 단체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공기관(formal organizations)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ICCS 2009는 청소년 정당단체,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등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참여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정당, 노동조합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는 전체 평균 10%, 환경운동단체는 29%, 인권운동단체는 16%, 지역사회자선단체는 34%, 기부단체 참여는 39%, 외국인 문화단체 참여 14%로 전체적으로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표 IV-6〉 참조).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자선단체와 기부단체에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분포는 가장 낮게 나온 8%(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60%(벨기에)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은 정당, 노동조합과 유사한 청소년 단체는 전체 평균 4%, 환경운동단체는 5%, 인권운동단체는 2%, 지역사회자선단체는 18%, 기부단체 참여는 8%, 외국인 문화단체 참여 2%로 매우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인 지역사회자선단체와 기부단체에 대한 참여도 또한 저조하여 학교 밖 공동체 참여 결과에서 전체 국가들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표 IV-6 ICCS 2009 각 국가별 학교밖 시민참여 응답비율

	청소년 단체		환경운동 단체		인권운동 단체		지역사회 자선단체		기부 단체		외국인 문화단체	
도미니카공국	25	-0.9	58	-1.1	50	-1.1	70	-0.9	54	-1	33	-1
태국	23	-1.1	71	-0.8	39	-1	57	-1	56	-1	38	-1.2
과테말라	22	-1	55	-1.3	34	-1.4	64	-1	55	-1.4	28	-1.4
파라과이	19	-1	49	-1.2	31	-1.2	69	-1	52	-1	22	-1.2
콜롬비아	14	-0.6	55	-1.1	36	-1.2	57	-0.8	41	-0.9	17	-0.9
인도네시아	14	-0.7	61	-1	31	-1.2	40	-1	50	-1.1	24	-0.9

멕시코	15	-0.7	40	-1.1	25	-0.8	46	-1	44	-1.1	22	-0.9
키프로스	18	-0.7	38	-1	22	-0.9	26	-1	53	-1.1	18	-0.7
폴란드	4	-0.4	50	-1.3	17	-0.9	36	-1.3	47	-1.4	15	-0.6
불가리아	9	-0.7	41	-1.3	21	-1	37	-1.3	40	-1.6	17	-1
뉴질랜드	13	-0.9	21	-1	7	-0.6	40	-1.4	47	-1.2	23	-1.1
러시아 연방	11	-0.8	39	-1.6	23	-1.3	30	-1.5	28	-1.2	18	-1
룩셈부르크	11	-0.4	26	-0.7	17	-0.6	28	-0.7	52	-0.9	14	-0.4
칠레	9	-0.7	31	-1.2	16	-0.9	40	-1.1	40	-0.9	10	-0.6
오스트리아	11	-0.6	19	-0.9	13	-0.8	35	-1.2	51	-1.6	14	-0.8
그리스	8	-0.6	43	-1.6	17	-1.1	21	-0.9	37	-1.2	16	-0.8
영국	15	-0.9	18	-1.1	8	-0.7	39	-1.4	46	-1.3	12	-1
리히텐슈타인	11	-1.6	17	-2.2	14	-1.8	26	-2.4	58	-2.7	11	-1.7
리투아니아	11	-0.6	35	-1.3	15	-0.8	23	-0.9	31	-1.2	17	-0.9
아일랜드	8	-0.6	10	-0.7	9	-0.7	50	-1.1	43	-1.3	10	-0.7
라트비아	9	-0.8	33	-1.5	13	-0.8	38	-1.2	22	-1.3	14	-0.8
몰타	14	-0.9	23	-1	9	-0.7	36	-1.3	28	-1.3	16	-0.9
슬로베니아	6	-0.5	28	-1.3	10	-0.6	24	-1	44	-1.2	13	-0.7
스위스	6	-0.7	21	-1.4	13	-1	26	-1.1	49	-1.4	8	-0.8
벨기에	5	-0.5	15	-0.9	7	-0.5	23	-0.9	60	-1.1	11	-0.6
노르웨이	8	-0.6	13	-0.9	10	-0.7	20	-0.9	52	-1.1	12	-0.7
에스토니아	9	-0.8	19	-1	8	-0.7	44	-1.3	15	-0.6	10	-0.7
이탈리아	5	-0.4	26	-1.2	14	-0.7	23	-1	24	-0.9	11	-0.7
스페인	5	-0.5	18	-0.8	14	-0.8	26	-0.9	32	-1	7	-0.5
슬로바키아	6	-0.6	19	-1.4	12	-1	27	-1.3	26	-1.7	9	-1
체코	4	-0.3	21	-1.2	9	-0.6	13	-0.7	29	-1.1	6	-0.4
스웨덴	7	-0.5	8	-0.5	7	-0.5	14	-0.7	23	-1	6	-0.4
덴마크	4	-0.5	3	-0.3	3	-0.3	12	-0.7	36	-1	6	-0.5
대만	4	-0.3	9	-0.5	3	-0.3	20	-0.7	17	-0.7	10	-0.6
핀란드	3	-0.3	9	-0.5	1	-0.2	14	-0.6	20	-0.9	2	-0.3
대한민국	4	-0.3	5	-0.3	2	-0.2	18	-0.7	8	-0.7	2	-0.2
ICCS 평균	10	(0.1)	29	(0.2)	16	(0.1)	34	(0.2)	39	(0.2)	14	(0.1)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5) ICCS 2009 학교에서 시민 참여

청소년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민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어떤 형태로 힘을 행사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할 수는 있다.

기존 문헌 분석 결과, 학교에서 시민관련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시민관련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EA와 CivEd 연구에서 모두 학교의회나 학생회에 학생참여는 시민지식과 참여에 긍정적인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ICCS 2009는 학교 내 시민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1년 전에 활동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 내 활동(<표 IV-7>참조)에 학교 밖 활동(<표 IV-6>참조)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는 61%의 학생들이, 토론에 적극적 참여에는 44%,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는 76%,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에는 40%,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에는 43%, 학생회 토론 참여에는 42%의 학생들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학교 내 시민참여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립적 참여는 23%, 토론에 대한 적극 참여는 33%, 반장 및 학생회 임원투표는 26%,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는 33%, 학생집회 토론참여는 26%,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 33%로 참여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표 IV-7 ICCS 2009 각 국가별 학교 내 시민참여 응답비율

	방과후 프로그램		토론에 적극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학생집회 토론	
과테말라 ¹	76	-1	56	-2	94	-0.8	63	-1	51	-1.2	56	-1.2
그리스	61	-1.4	40	-1.1	85	-1	57	-1.1	74	-1.4	68	-1.5
노르웨이 [†]	61	-1.3	62	-1.3	90	-0.8	58	-1.6	52	-1.3	62	-1
폴란드	60	-1.3	32	-1.2	95	-0.5	57	-1.1	67	-1.1	59	-0.9
파라과이 ¹	73	-0.9	39	-1.3	87	-1	56	-1.2	54	-1.4	58	-1.3
도미니카공국	62	-1.3	66	-1.5	61	-1.5	59	-1.1	49	-1.2	58	-1.2

콜롬비아	71	-0.9	49	-1.3	90	-0.5	57	-0.9	41	-0.9	44	-0.8
스페인	65	-1	50	-1.5	87	-1	48	-1.2	38	-1.3	55	-1.2
키프로스	69	-0.9	55	-0.9	71	-0.8	35	-1.2	39	-0.9	67	-1
인도네시아	55	-1.4	41	-1.2	72	-1.4	57	-1.3	85	-1	26	-1
슬로바키아 ²	60	-1.2	49	-1.5	73	-2.3	28	-1.2	81	-1	43	-1.5
스웨덴	59	-1.4	42	-1.6	85	-0.9	54	-1.1	53	-1.1	40	-1
칠레	70	-1	49	-1.7	89	-0.7	39	-1.1	35	-1	47	-1
영국 ‡	62	-1.3	48	-1.5	79	-1.2	55	-1.5	37	-1.4	40	-1.2
태국 †	64	-1.1	36	-1.3	79	-0.9	46	-1.1	52	-1.1	36	-1
멕시코	59	-0.8	48	-1.1	74	-0.9	54	-0.9	41	-1	36	-0.7
슬로베니아	65	-1.3	41	-1.2	84	-0.8	28	-1.2	35	-1.4	59	-1.1
뉴질랜드 †	64	-1.2	42	-1.4	75	-1.4	48	-1.3	43	-1.1	38	-1.1
라트비아	77	-1.2	55	-1.6	67	-2.5	31	-1.3	31	-1.5	39	-1.6
대만	56	-0.8	17	-0.8	67	-0.9	43	-0.7	84	-0.7	32	-0.9
리히텐슈타인	48	-2.9	54	-2.6	74	-2.5	27	-2.6	42	-2.5	49	-2.5
아일랜드	58	-1.2	66	-1.3	76	-2.2	38	-1.3	28	-1.1	25	-0.9
덴마크 †	43	-1.4	57	-1.2	73	-1.1	44	-1	20	-0.8	49	-1
오스트리아	52	-1.4	25	-1.1	81	-0.9	30	-1.2	38	-1.1	57	-1.1
러시아 연방	67	-1	34	-1.2	76	-1.4	32	-1.2	45	-1.1	28	-1.1
핀란드	61	-1.2	59	-1.2	83	-1.3	15	-0.7	23	-1	35	-1.4
불가리아	66	-1.2	52	-1.4	52	-1.9	31	-1.2	40	-1.2	34	-1.1
스위스 †	56	-1.3	56	-1.5	60	-2	28	-1.3	40	-1.4	34	-1.4
리투아나	63	-1.1	23	-0.9	84	-0.9	35	-1.1	38	-1.2	30	-1.1
에스토니아	73	-1.2	36	-1.2	75	-1.8	24	-1.2	25	-1.3	32	-1.5
체코 †	52	-1.2	54	-1	74	-1.9	21	-0.9	29	-0.9	31	-1
몰타	70	-1.3	30	-1.1	62	-1.2	29	-1	*		24	-0.9
이탈리아	67	-1.1	50	-1.3	49	-2.3	34	-1.5	24	-1.5	21	-1.3
벨기에 †	47	-1.8	31	-1.2	68	-2	36	-1.3	24	-0.9	34	-1.2
대한민국 ¹	23	-0.7	33	-0.9	76	-0.7	33	-0.9	26	-0.6	33	-0.7
룩셈부르크	46	-0.7	19	-0.6	63	-0.8	25	-0.6	31	-0.7	36	-0.8
ICCS 평균	61	(0.2)	44	(0.2)	76	(0.2)	40	(0.2)	43	(0.2)	42	(0.2)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2010)

(6) ICCS 2009 기대 시민 참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시민행동을 질문함으로써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시민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영역 참여에 초점을 두었다. Verba et al. (1995)은 정치적 활동을 정부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EA와 CivEd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국가수준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시민지식은 미래의 선거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CivEd 조사에는 학생들의 현재 정치관심은 미래 국가수준의 투표참여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ICCS 2009는 미래의 시민참여에 대한 질문에 “확실히 참여함”, “아마도 참여함”,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확실히 참여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질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수준의 투표를 포함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의 참여를 묻고 있다.

그 결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국가수준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불가리아, 체코, 스위스의 학생들은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ICCS 2009에서는 미래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학생들은 87% 미래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고, 이는 전체 평균 81%보다 높다. 투표할 것이라 응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수준 평균이 574점으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한 학생 평균 506점보다 높았다. 또한, 투표할 것이라 응답한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관심도 51점으로 6점 더 높았다.

표 IV-8 ICCS 2009 각 국가별 기대시민참여 응답비율

	성인이 되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답한 응답(%)		응답한 학생들의 시민지식					
			투표 X (A)		투표 O (B)		차이 (B-A)*	
과테말라 ¹	94	-0.4	410	-5.3	442	-3.8	32	-4.5
인도네시아	92	-0.6	397	-3.8	439	-3.3	42	-4
콜롬비아	90	-0.5	436	-4.1	476	-2.7	40	-3.8
덴마크	89	-0.6	505	-5.4	590	-3.5	85	-5.7
파라과이	89	-0.9	397	-5.8	451	-3.5	54	-6.5
이탈리아	88	-0.6	470	-5.6	541	-3.1	72	-4.8
리투아나	88	-0.8	455	-4.3	513	-2.7	58	-4.2
태국	88	-0.6	415	-3.9	458	-3.8	43	-3.9

대한민국	87	-0.6	506	-3.1	574	-1.9	68	-3.3
아일랜드	87	-0.7	464	-5.9	550	-4.2	85	-5.8
몰타	86	-1.2	428	-7.1	506	-4.5	78	-8.1
멕시코	86	-0.6	419	-3.6	463	-2.9	44	-3.8
도미니카 공국	86	-0.9	381	-3.9	390	-2.9	10	-4.2
핀란드	85	-0.7	521	-4.4	588	-2.4	67	-4.5
스웨덴	85	-0.9	477	-4.4	551	-3.2	73	-5.2
스페인	85	-0.8	456	-5.8	516	-3.9	60	-5.1
러시아 연방	85	-0.8	470	-4.4	514	-4	44	-4.8
뉴질랜드	84	-0.8	452	-6.5	535	-5.1	83	-6.7
노르웨이	83	-1	451	-4.4	535	-3.3	84	-5.5
대만	82	-0.7	503	-3	572	-2.4	69	-3
오스트리아	82	-0.9	452	-5.2	516	-3.9	63	-5
리히텐슈타인	81	-2	482	-13	544	-4.5	62	-15.1
슬로베니아	81	-0.8	471	-4.4	528	-2.9	57	-4.4
폴란드	77	-1	491	-6.2	550	-4.3	59	-4.9
그리스	77	-1.1	446	-4.5	491	-4.9	45	-4.9
라트비아	77	-1.2	455	-4.7	490	-4.3	36	-5
칠레	76	-1	473	-4.3	490	-3.6	16	-3.6
슬로바키아 ²	75	-1.2	493	-4.7	542	-4.7	49	-4.8
키프로스	75	-0.8	420	-4.3	472	-2.7	51	-4.9
에스토니아	73	-1.3	487	-6.3	542	-4.4	55	-5.4
룩셈부르크	73	-0.7	435	-3.4	493	-2.4	59	-3
영국	72	-1.1	470	-4	544	-4.9	74	-5.4
벨기에	72	-1.3	476	-4.8	530	-4.6	54	-4.1
스위스	70	-1.4	500	-4.8	547	-3.7	47	-4.5
불가리아	69	-1	447	-5.5	492	-5.5	45	-5.5
체코	50	-1.1	481	-2.1	542	-3	61	-3.3
ICCS 평균	81	(0.2)	458	(0.9)	514	(0.6)	56	(0.9)

* 자료: IEA ICCS 2009 Initial report.

제 5 장

연구 결과

1. ICCS 문항구조 및 타당성 평가
2. 민주시민역량의 질적 유형 분석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4.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5. 결과 요약

제 5 장 연구 결과

1. ICCS 문항구조 및 타당성 평가

비록 IEA에서 ICCS의 문항을 구성하면서 참가국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친 것이나 최종 문항의 개념구조가 각국에서 전제로 한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조와 일치하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특히 시민의식 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60년대의 공민교육적 접근과 최근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적 접근이 병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의 교육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시민교육 분야의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ICCS의 조사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ICCS의 문항구성이 전제한 시민교육의 개념 틀과 우리나라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틀 간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했다.

1) 연구방법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역량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청소년학, 정치학 전공 연구자 중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와 NGO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참여분야를 담당해온 담당자, 흥사단 및 교육희망연대 등의 NGO 단체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해온 현장 전문가 15명과 중·고등학교에서 윤리 및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15명 모두 3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조사 대상자들에게 ICCS의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 측정문항 및 ICCS의 영역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항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각의 문항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아이টে็ม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평가받았다. 그 결과 무응답과 불완전 응답을 제외한 18명의 응답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9명, 시민성 분야 전공 교수가 5명, NGO 및

청소년단체 현장 전문가가 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척도로 환산되었다.

첫 번째는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각 문항별로 배분한 내용영역과 실제 ICCS에서 배분한 내용영역 간의 일치도로서, 이를 통해 문항을 분류한 영역개념구조의 부합성을 평가했다.

두 번째는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개별 문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타당도로서 각각의 문항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얼마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를 반영한 지표였다.

이 두 지표는 ICCS 문항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개념구조와 ICCS가 상정한 개념구조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ICCS의 개념구조와 우리나라 개념구조가 비교적 부합한다는 의미이며 수치가 낮다는 것은 민주시민역량의 해당영역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ICCS 인지 영역 문항분석 결과

ICCS에서는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크게 두 차원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차원은 민주시민역량의 기본요소로 전제된 4개 내용 영역 차원에 따른 구분이다. 두 번째 차원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구성요소에 따른 구분이다. 첫 번째 차원에 따른 구분은 시민사회와 체계 자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1: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2: 시민사회의 원칙),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규범과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3: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각과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이다. 두 번째 차원에 따른 구분은 지식(knowing) 요인과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 요인이다. 인지영역의 문항분석은 이 두 차원에 따른 구분을 기초로 총 8개 하위 영역에 대해 실시하였다.

(1)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Civic society and systems

① 지식 분야 문항 평가

2009년 ICCS의 인지영역 문항 중,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의 지식부분 문항은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에 지고 있는 책임의 기본은 준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역할은 투표권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의 심각성 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
-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 향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
-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
-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을 통한 의사표현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한다는 사실
-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가 입법이라는 사실 지식
-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도했다 구속된 신문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은 시민의 공적참여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선진국 기업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은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법을 하는 것은 부정부패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전문가 평가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 14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61.1%가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에 따라서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기준간의 일치율은 큰 편차를 나타냈다.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67번 문항)과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70번)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 응답한 국내전문가 전부가 이 문항들이 시민사회의 체계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해 일치도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을 묻는 68번 문항에 대해서는 단지 1명의 전문가만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8명(44.4%)은 이 문항을 시민정체성(내용영역 IV)에 관한 것으로, 5명(27.8%)은 시민공동체의 원리(내용영역 II) 문제로 평가했다. 이 문항 다음으로 전문가들과 ICCS 분류틀 간에 차이가 컸던 문항은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 향상이라는 문항(일치율 16.7%),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참여관련 범위만이 폭력과 파괴임을 묻는 문항(일치율 33.3%),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가에 대해 져야할 책임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문항(일치율 38.9%)으로서 이들 3개 문항은 ICCS 분류기준과의 일치율이 40% 이하였다.

표 V-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17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성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선택)	72.2	72.2	0.0	22.2	5.6
63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에 지고 있는 책임의 기본은 준법	38.9	38.9	33.3	5.6	16.7
64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역할은 투표권	55.6	55.6	0.0	27.8	16.7
65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지도자	66.7	66.7	27.8	5.6	0.0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향상	16.7	16.7	16.7	61.1	0.0
67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이해	100.0	100.0	0.0	0.0	0.0
68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 대한 올바른 사실 인식	5.6	5.6	27.8	11.1	44.4
69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적 의사표현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한다는 사실	33.3	33.3	0.0	66.7	0.0
70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는 법을 결정하는 것	100.0	100.0	0.0	0.0	0.0
71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도했다 구속된 신문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	44.4	44.4	55.6	0.0	0.0
73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법은 시민의 공적참여를 보장하는 법	77.8	77.8	0.0	11.1	5.6
75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선진국 기업	83.3	83.3	11.1	0.0	0.0
76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은 기업 간 활발한 경쟁	94.4	94.4	5.6	0.0	0.0
79	국회의원의 가장 명백한 부정부패의 사례는 돈을 받고 입법을 한 것	66.7	66.7	16.7	0.0	11.1
	문항 평균	61.11	61.11	13.90	15.09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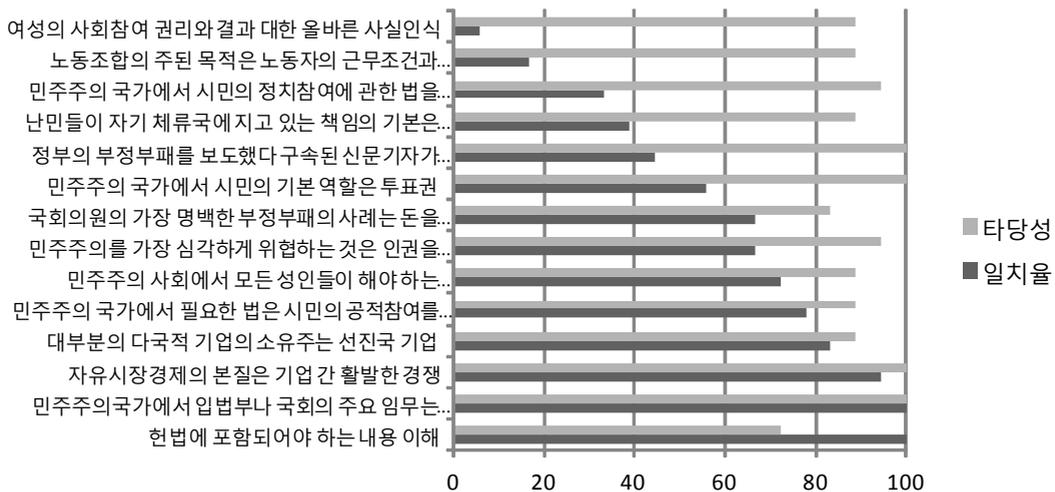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의 평균이 91.3%로서 대부분의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당성이 가장 낮은 문항은 “헌법에는 정부와 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주요 원칙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는 문항으로 응답자의 72.2%만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표 V-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사회와 체계 x 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17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성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선택)	88.9
63	난민들이 자기 체류국에 지고 있는 책임의 기본은 준법	88.9
64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역할은 투표권	100
65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지도자	94.4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급여향상	88.9
67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72.2
68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	88.9
69	민주주의 국가에서 폭력적 의사표현은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한다는 사실	94.4
70	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는 법을 결정하는 것	100
71	정부의 부정부패를 보도했다 구속된 신문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100
73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법은 시민의 공적참여를 보장하는 법	88.9
75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선진국 기업	88.9
76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은 기업간 활발한 경쟁	100
79	국회의원의 가장 명백한 부정부패의 사례는 돈을 받고 입법을 한 것	83.3
	문 항 평 균	91.26

문항 영역체계에 대한 전문가들과 ICCS의 일치도와 문항별 타당도 평가는 일치하지 않았다(【그림 V-1】). 이러한 결과는 ICCS의 문항 영역 체계가 국내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민주시민역량의 지적 영역에 대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ICCS의 체계간에 차이가 많았던 문항을 요약하자면 여성, 노동자, 난민 등 사회소수자나 약자의 사회 참여 자격이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문항이었다. 반면에 가장 일치도가 높은 문항은 헌법의 원칙이나 투표권, 삼권분립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 문항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ICCS가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영역 체계와 그 체계에 기초해서 산출된 2009년도 ICCS 민주시민역량 평가결과
의 문화간 보편타당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계의 요소들
중에서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
반면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중시해온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역사가
전문가들의 의식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1】 시민사회와 체계×지식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의 비교

② 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평가

ICCS의 인지영역 문항은 지식 영역과 추론 및 분석 영역으로 분류된다. 추론과 분석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그 자체의 소유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일종의 응용문제이다. 내용영역 I 중에서
추론 및 분석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17개이다. 각 문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를 추론해서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 정부에서 가장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을 정부의 입장에서 추론하기
- 지역 내 운동장 건립에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 정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고려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 어떤 기업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 추론하기
- 같은 상황에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추론하기
-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할 이유를 추론하기
- 정부로부터 독립된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추론하기
- 정당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이해하기
-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리적 근거를 추론하기
-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추론하기
-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을 추론하기
- 특정 국가에서는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그 국가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지도자 비판 집회를 경찰이 해산하는 것이 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 행동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평가용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 17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74.8%가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내용영역 1의 지식 문항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치했다.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 기준 간의 일치율이 40% 이하인 문항은 단 하나였다. 압력단체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52번 문항으로 7명(38.9%)만이 이 문항을 시민사회와 체계의 문항으로 분류했으며, 10명(55.6%)은 이 문항을 시민참여 영역(내용영역 III)에 관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 문항 다음으로 전문가들과 ICCS 분류틀 간에 차이가 컸던 문항은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일치율은 50%였다.

표 V-3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사회와 체계×추론과 분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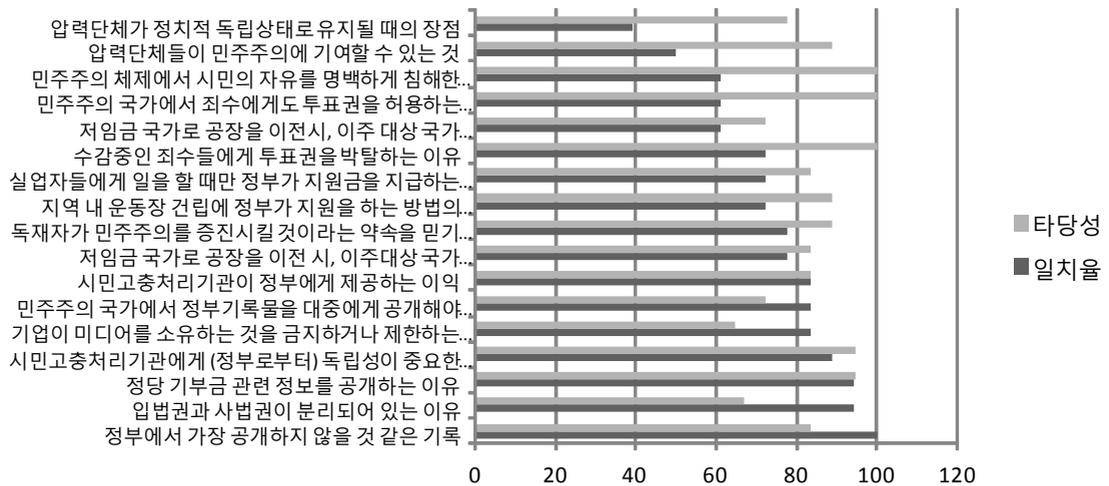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 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2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의 존재이유	83.3	83.3	11.1	0.0	5.6
6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	94.4	94.4	0.0	5.6	0.0
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	83.3	83.3	5.6	11.1	0.0
10	정부에서 가장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기록	100.0	100.0	0.0	0.0	0.0
13	지역 내 운동장 건립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법의 타당성	72.2	72.2	11.1	11.1	0.0
15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의 이익	77.8	77.8	11.1	0.0	0.0
16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의 손해	61.1	61.1	16.7	5.6	5.6
34	시민고충처리기관에게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88.9	88.9	5.6	5.6	0.0
36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제공하는 이익	83.3	83.3	5.6	5.6	5.6
47	정당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94.4	94.4	5.6	0.0	0.0
50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리적 근거	72.2	72.2	11.1	0.0	16.7
51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0.0	50.0	5.6	44.4	0.0
52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	38.9	38.9	5.6	55.6	0.0
60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유	72.2	72.2	16.7	5.6	5.6
61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61.1	61.1	38.9	0.0	0.0
72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동은 정치지도자 비판 집회를 경찰이 해산하는 것	61.1	61.1	33.3	0.0	0.0
78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거제도 인정	77.8	77.8	0.0	5.6	11.1
	문항 평균	74.82	74.82	10.80	9.16	2.95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의 평균이 84.8%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당하다고 평가된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이유”에 대한 추론 문항으로 64.4%만이 이 문항이 민주시민역량 측정도구로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를 추론하는 문항으로서 응답자의 66.7%만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압력단체들의 존재가치나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문항은 타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V-4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사회와 체계 x 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의 존재이유	64.44
6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	66.67
9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	72.22
10	정부에서 가장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기록	83.33
13	지역 내 운동장 건립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법의 타당성	88.89
15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의 이익	83.33
16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 시, 이전대상 국가 주민들의 손해	72.22
34	시민고충처리기관에게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94.44
36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제공하는 이익	83.33
47	정당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	94.44
50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리적 근거	83.33
51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	88.89
52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	77.78
60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이유	100
61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00
72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동은 정치지도자 비판 집회를 경찰이 해산하는 것	100
78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거제도 인정	88.89
	문 항 평 균	84.84

문항 영역체계에 대한 전문가들과 ICCS의 일치도와 문항별 타당도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냈다(【그림 V-2】).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ICCS의 체계 간에 차이가 많았던 문항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압력단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추론능력이었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가장 덜 타당하다고 평가한 문항은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에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이유에 대한 추론이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나 로비업체와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와 가치, 그리고 이익단체가 사회적 참여를 할 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항들이 가장 부적절한 문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지도자를 비판할 권리의 보호나 수감자들의 투표권 보호, 정보공개에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요약하면 국내 전문가들은 역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견제를 중시해서,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V-2】 시민사회와 체계 X 추론 및 분석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2) 내용영역 2: 시민공동체의 원리 Civic principles

① 지식 분야 문항 평가

ICCS의 인지영역 측정문항 중에서 시민공동체의 원리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26개로서 이 중에서 4문항이 지식 차원을 측정한다. 그 4문항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지식 측정문항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에 대한 지식 측정문항
- UN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지식 측정문항
-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측정 문항

구체적인 질문지는 <부록1>에 제시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77.8%가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기준간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서 11명(61.1%)만이 이 문항을 시민공동체의 원리 문항으로 분류했으며, 6명(33.3%)은 이 문항이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내용영역 I)에 관한 것이라 분류했다. 나머지 3문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83.3%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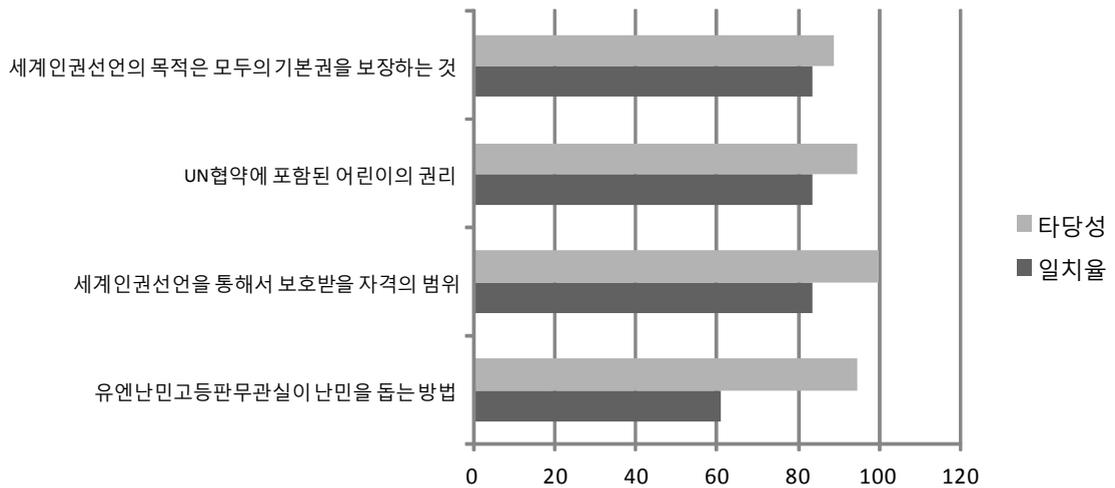
표 V-5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공동체 원리×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48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	83.3	11.1	83.3	0.0	0.0
6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	61.1	33.3	61.1	0.0	0.0
74	UN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	83.3	16.7	83.3	0.0	0.0
80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83.3	0.0	83.3	0.0	11.1
	문항 평균	77.8	15.28	77.75	0.00	2.77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평균 94.4%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당하다고 평가된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었으나 이 문항의 타당도에 대해서도 16명(88.9%)이 동의하였다.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표 V-6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48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	100
6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을 돕는 방법	94.4
74	UN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	94.4
80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88.9
문항 평균		94.4



【그림 V-3】 시민공동체원리×지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②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평가

시민공동체의 원리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22문항이 추론과 분석에 해당한다. 인지 영역에 해당하는 4개 하위영역 중 가장 많은 문항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 22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의 로고로 공존을 표현한 스티커의 의미를 이해하기
-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그 민족의 언어가 아닌 공용어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추정하기
- 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 제시하기
-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를 추론하기
-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추론하기
-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는 왜 민주주의에 위반되는지를 이해하기
- 대표선수 선발 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추론하기
-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를 추론하기
- 정부가 토지보상금으로 낮은 가격을 댄으로 수몰될 지역의 농부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토지보상금이 아님을 이해하기
-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자기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 학급토론에서 토론 규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추론하기
- 토론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불공정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의 이익을 추론하기
-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 선택하기
- 원주민 지도자가 (원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이주민 고유의 축제를 허용한 이유를 이해하기
-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이해하기
- 그와는 반대로 정부의 영화 검열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 이해하기
-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이해하기
-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시하기
-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에서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를 이해하기

구체적인 질문지는 <부록1>에 제시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으로 구분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들이 분류한 문항들 중 평균 28.6%만이 ICCS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과 분석 영역의 문항들은 일종의 ‘응용문제’에 해당하므로 문제해결과제의 특성상 다양한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과 ICCS의 분류 기준 간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크게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문항으로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선정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0.0%). 16명의 전문가들은 이 문항이 시민사회와 체계(내용영역 I)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 외에 단 1명(5.6%) 씩만 이 영역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문항이 3개 있었다. 그 중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문항은 13명(77.3%)이 시민정체성(내용영역 IV)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문항은 17명(94.4%)이 시민사회와 체계(내용 영역 I)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9명(50%)이 정체성 영역 문항으로 분류했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83.3%), ‘대표선수 선발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근거’ (77.8%),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66.7%)에 관한 세 문항만이 일치율 60% 이상이였다.

표 V-7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1	다양한 문화의 로고로 공존을 표현한 스티커의 의미	38.9	11.1	38.9	0.0	50.0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16.7	38.9	16.7	22.2	16.7
4	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	44.4	22.2	44.4	0.0	27.8
5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	11.1	33.3	11.1	50.0	5.6
14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5.6	16.7	5.6	0.0	72.2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0.0	88.9	5.6	5.6	0.0

19	대표선수 선발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근거	77.8	16.7	77.8	0.0	0.0
20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38.9	22.2	38.9	22.2	0.0
22	댐으로 수몰될 지역의 농부들이 토지보상금을 인상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33.3	16.7	33.3	44.4	0.0
23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66.7	27.8	66.7	0.0	5.6
26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	11.1	72.2	11.1	0.0	11.1
31	학급토론에서 토론 규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33.3	38.9	33.3	22.2	0.0
33	위의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불공정한 이유	27.8	55.6	27.8	5.6	5.6
35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의 이익	33.3	55.6	33.3	11.1	0.0
37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선택하기	83.3	16.7	83.3	0.0	0.0
40	원주민 지도자가 이주민에게 이주민 고유의 축제를 허용한 이유	27.8	0.0	27.8	0.0	66.7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5.6	94.4	5.6	0.0	0.0
55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11.1	66.7	11.1	0.0	16.7
56	정부의 영화 검열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22.2	22.2	22.2	0.0	50.0
57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16.7	77.8	16.7	0.0	5.6
58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	5.6	38.9	5.6	0.0	50.0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에서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16.7	16.7	16.7	0.0	61.1
	문항 평균	28.54	38.65	28.80	8.33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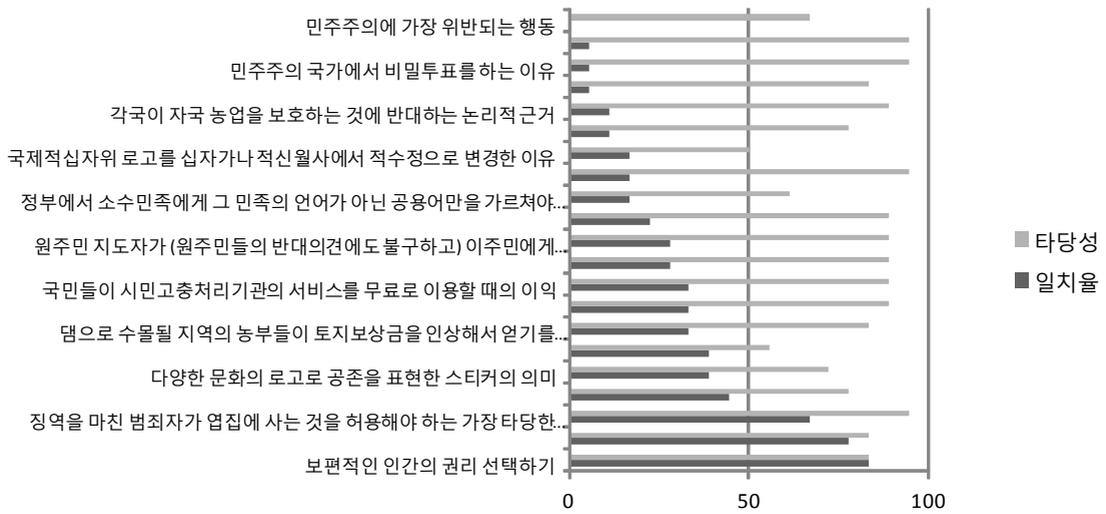
문항 영역체계에 대한 심각한 불일치와는 달리,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81.5%가 동의했다. 문항의 타당성에 있어 60% 이하의 평가를 받은 문항은 단 두 문항으로서 하나는 ‘국제적십자사의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가 아닌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이해력' 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전문가들 중 50% 만이 이 문항의 타당성에 동의했다. 두번째는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를 추론' 하는 문항으로 55.6%만이 이를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표 V-8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1	다양한 문화의 로고로 공존을 표현한 스티커의 의미	72.22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61.11
4	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적 근거	77.78
5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	77.78
14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83.33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66.67
19	대표선수 선발시 지역 할당제 규칙 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근거	83.33
20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55.56
22	댐으로 수몰될 지역의 농부들이 토지보상금을 인상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83.33
23	징역을 마친 범죄자가 엽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94.44
26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	88.89
31	학급토론에서 토론 규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88.89
33	위의 규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도 불공정한 이유	88.89
35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의 이익	88.89
37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선택하기	83.33
40	원주민 지도자가 이주민에게 이주민 고유의 축제를 허용한 이유	88.89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94.44
55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88.89
56	정부의 영화 검열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88.89
57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94.44
58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	94.44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십자나 적신월에서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50.00
	문 항 평 균	81.5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내용평가와 타당성 평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타당성은 높았으나 ICCS 영역체계와의 일치율은 매우 낮았다. 이는 본 문항들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질문들이라는 점에는 국내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그 문항이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ICCS의 체계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영역 문항을 선정한 원칙과 의미를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2차년도 민주시민역량 조사시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림 V-4】 시민공동체원리x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내용영역 3: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① 지식 분야 문항 평가

시민참여 영역의 지식분야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를 묻는 1문항이 배분되어 있다. 시민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투표임을 고려하면 원칙적인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 중 5명(27.8%)만이 내용영역3에 해당한다고 선택했으며, 나머지 13명은 모두 시민사회와 체계영역 문항으로 분류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이 민주주의 체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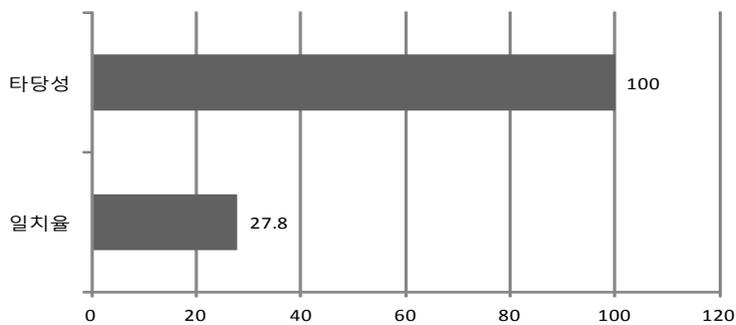
표 V-9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참여×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27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좋은 이유	27.8	72.2	0.0	27.8	0.0

반면에 이 문항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즉 이 문항의 타당성 평가와 ICCS의 문항 분류체계와의 일치율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표 V-10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참여×지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7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좋은 이유	100



[그림 V-5] 시민참여×지식 영역 문항의 영역 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②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평가

시민참여 영역에서 추론과 분석 분야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A가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에서 제조한 신발임을 알고 신지 않기로 한 이유
-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업체의 신발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법)
-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 투표 할 때 친구가 알려준 정보만을 이용할지의 여부와 이유
- TV 인터뷰가 농부들이 정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
- 저가 농산물 수입환경에서 각국이 자국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 폭력적인 항의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리적 근거
- 이해당사자들은 반대투표를 했지만 찬성표가 더 많아 새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민주적인 결정인 이유
- 두 종교단체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논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이유
-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
-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이유
- 인터넷으로 이런 카드를 만드는 일이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유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 투표가 자발적이라도 투표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의 논리적 근거
-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 교내 환경동아리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 위의 사례에서 조언을 얻는 경우의 위험요소

이들 문항에 대해 ICCS의 분류와 국내전문가들의 분류가 일치하는 비율은 평균 27.1%로 매우 낮았다. 이는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에서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들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가장 일치율이 낮은 문항은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에 대한 문항으로 이 문항은 본 영역이 아니라 시민공동체의 원리 영역(내용영역 2)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체에서 제조한 신발을 신기를 거부하는 결정의 근거”에

대한 문항과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5.6%)의 전문가만이 이 내용영역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또한 저가농산물 수입으로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방법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투표결과를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이유에 대한 문항,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에 대한 2문항에 대해서는 단 2명의 전문가(11.1%)만이 이것이 시민참여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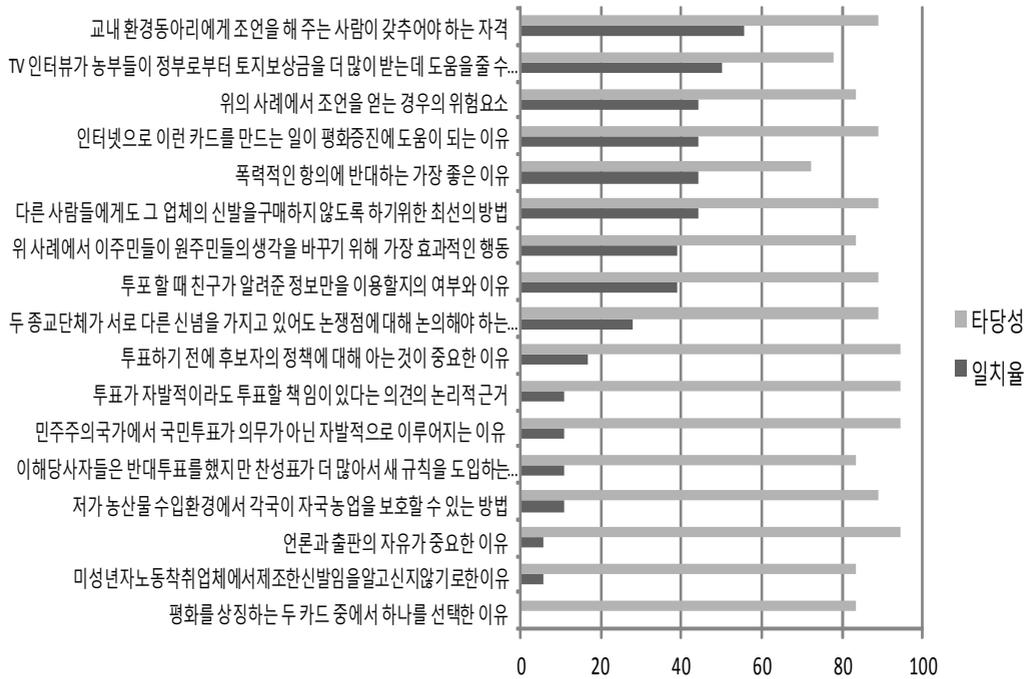
표 V-1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참여×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7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 제조신발을 거부	5.6	16.7	50.0	5.6	16.7
8	노동착취 관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법	44.4	5.6	38.9	44.4	0.0
11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 알기	16.7	83.3	0.0	16.7	0.0
12	투표 할 때 친구에게만 정보의존	38.9	50.0	11.1	38.9	0.0
21	TV 인터뷰와 농부의 토지보상금간 관계	50.0	33.3	16.7	50.0	0.0
25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업 보호방법	11.1	44.4	11.1	11.1	27.8
28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이유	44.4	16.7	22.2	44.4	5.6
32	다수결의 민주성	11.1	72.2	11.1	11.1	0.0
38	신념이 달라도 논쟁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27.8	0.0	27.8	27.8	38.9
41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	38.9	0.0	11.1	38.9	44.4
42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의 의미	0.0	11.1	55.6	0.0	22.2
43	이런 카드 제작과 평화증진의 관계	44.4	22.2	16.7	44.4	5.6
44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	11.1	88.9	0.0	11.1	0.0
45	자발적 투표와 투표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	11.1	72.2	5.6	11.1	11.1
49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5.6	66.7	22.2	5.6	0.0
53	동아리에게 조언자의 자격	55.6	16.7	0.0	55.6	22.2
54	조언을 얻는 경우의 위험요소	44.4	16.7	5.6	44.4	22.2
	문 항 평 균	27.12	36.28	17.98	27.12	12.75

각 문항의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평균 86.9%로 전체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60% 이하인 문항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문항의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일치도가 매우 낮지만 타당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영역2 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1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7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 제조신발을 거부	83.3
8	노동착취 관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법	88.9
11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 알기	94.4
12	투표 할 때 친구에게만 정보의존	88.9
21	TV 인터뷰와 농부의 토지보상금간 관계	77.8
25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업 보호방법	88.9
28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이유	72.2
32	다수결의 민주성	83.3
38	신념이 달라도 논쟁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88.9
41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	83.3
42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의 의미	83.3
43	이런 카드 제작과 평화증진의 관계	88.9
44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	94.4
45	자발적 투표와 투표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	94.4
49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94.4
53	동아리에게 조언자의 자격	88.9
54	조언을 얻는 경우의 위험요소	83.3
	문 항 평 균	86.91



【그림 V-6】 시민공동체의 원리×추론과 분석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내용영역 4: 시민정체성 Civic identities

① 추론과 분석 분야 문항평가

시민정체성 영역은 지식 분야에 배분된 문항이 없으며 추론과 분석 분야의 5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전과자가 자신의 이웃집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원칙과 논리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범위
- 지역사회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자신이 환경보호단체의 지도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 국기와 국가에 대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이들 5문항에 대한 ICCS 분류체계와 국내전문가 분류간의 일치율은 평균 21.1%로 본 분석 대상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인 문항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훼손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결국 지역사회와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한 추론 문항으로 이 문항이 시민정체성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고 시민사회와 체계(내용영역 1)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전문가가 12명(66.7%)이었다. 그 다음은 전과자와 이웃하기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근거에 관한 문항과 개인이 자신의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운동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두 문항 모두 단 1명의 전문가만이 이 문항들이 시민정체성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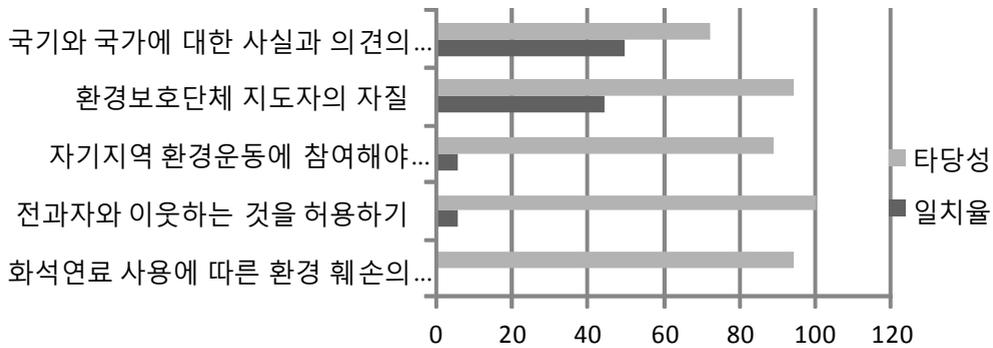
표 V-13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시민정체성×추론과 분석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체계	2영역: 원리	3영역: 참여	4영역: 정체성
24	전과자와 이웃하는 것을 허용하기	5.6	16.7	77.8	0.0	5.6
29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0.0	66.7	22.2	5.6	0.0
30	자기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6	33.3	5.6	44.4	5.6
39	환경보호단체 지도자의 자질	44.4	11.1	11.1	27.8	44.4
77	국기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사실과 의견의 구별	50.0	33.3	0.0	0.0	50.0
	문항 평균	21.1	32.2	23.3	15.6	21.1

반면에 문항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평균 90%로 매우 높았고 타당성을 인정한 비율이 60%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즉 이들 문항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문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표 V-14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시민정체성×추론과 분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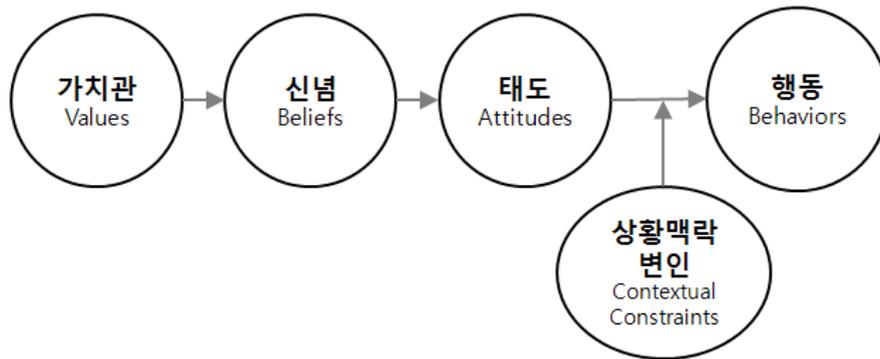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4	전과자와 이웃하는 것을 허용하기	100
29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94.44
30	자가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88.89
39	환경보호단체 지도자의 자질	94.44
77	국기와 국가에 대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72.22
문 항 평 균		90.00



[그림 V-7]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ICCS 태도-행동 영역 문항 분석결과

태도-행동영역은 인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4가지 내용영역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기준으로 다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을 기초로 그 행동에 대한 자기만의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그 다음에야 그 행동을 할 의지가 발생하고, 실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논리적인 연쇄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는 대개의 이론들이 전제하는 공통적인 단계이다. 예를 들어, 합리적 행동모형의 대표적인 학자 피쉬베인(Fishbein)과 아이젠(Ajzen)은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Fishbein & Ajzen, 1975).



【그림 V-8】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동모형(1975)

따라서 이 구분은 영역이나 차원이라기보다는 행동에 이르는 단계(stag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 4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가치-신념’ 단계로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해 어떤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 인지적 차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태도 단계로 그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호오와 적극성을 의미하며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 정서적 차원에 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미래 행동 의도’로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 그대로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는 지금 현재 응답한 청소년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물어보는 문항들로서 (태도-행동 영역 중에서는) 실제 행동의 단계에 해당한다. ICCS에서는 인지영역 문항들에 대해서는 내용영역에 따른 구분을 중시하지만, 태도-행동 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욱 중시한다. 이 단계 구분은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이들 4개 단계에 따른 분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가치 및 신념 단계 문항평가

가치 및 신념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은 크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 과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 의 두 문항으로 각각 12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이 가치 및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고 분류한 전문가는 전체의 61.2%로 전반적으로 ICCS의 분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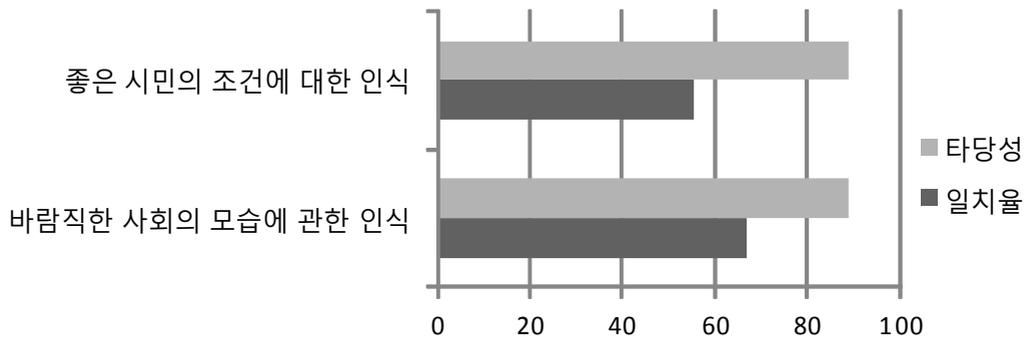
표 V-15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9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12문항)	66.7	66.7	22.2	0	0
10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12문항)	55.6	55.6	11.1	27.8	0
	문항 평균	61.2	61.2	16.7	13.9	0.0

이들 문항이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는 데 타당한 문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88.9%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표 V-16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9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관한 인식	88.9
10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	88.9
	문항 평균	88.9



【그림 V-9】 가치 및 신념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2) 태도 단계 문항평가

태도 단계의 문항은 크기는 10개의 문항이며 하위문항까지 포함하면 모두 62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태도를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
- 자기 주변의 정치적 문제들에 얼마나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
- 자신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
-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 혹은 차별적 태도를 측정하는 7개 하위문항
- 다문화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
- 이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
- 정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11개 하위문항
-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8개 하위문항
-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7개 하위문항
- 개인적으로 종교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 및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6개 하위문항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분류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55.6%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치율이 낮은 문항은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4명(22.2%)만이 이를 태도 단계 단계의 문항으로 평가한 반면 7명(38.9%)은 가치 및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6명(33.3%)은 미래 행동 의도에 해당하는 문항이라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일치도가 낮은 문항은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33.3%)를 묻는 문항이었다.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대한 태도(44.4%)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55.6%)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일치율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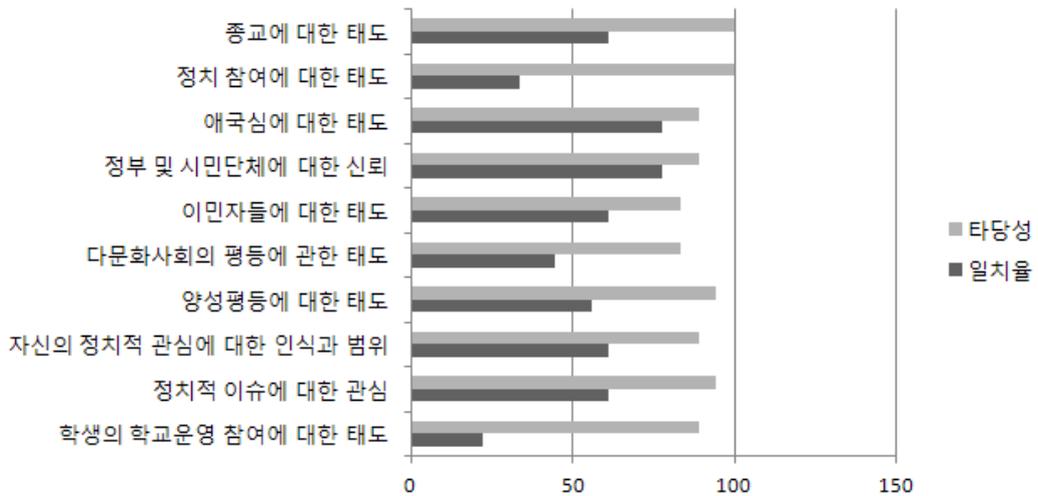
표 V-17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태도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8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태도	22.2	38.9	22.2	33.3	0.0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61.1	16.7	61.1	11.1	5.6
12	자신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인식과 범위	61.1	5.6	61.1	16.7	5.6
1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55.6	38.9	55.6	0.0	0.0
14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관한 태도	44.4	44.4	44.4	0.0	5.6
15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61.1	27.8	61.1	0.0	5.6
16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77.8	11.1	77.8	0.0	5.6
17	애국심에 대한 태도	77.8	16.7	77.8	0.0	0.0
19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33.3	16.7	33.3	38.9	5.6
25	종교에 대한 태도	61.1	16.7	61.1	0.0	11.1
	문항 평균	55.6	23.4	55.6	10.0	4.5

그러나 이들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89.4%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분류체계의 일치도는 높지 않더라도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높은 패턴이 이 영역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V-18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태도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8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태도	88.9
11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	94.4
12	자신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인식과 범위	88.9
1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94.4
14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관한 태도	83.3
15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83.3
16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88.9
17	애국심에 대한 태도	88.9
19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100.0
25	종교에 대한 태도	100.0
	문항 평균	91.1



【그림 V-10】 태도 단계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3) 미래 행동의도 단계

미래의 행동의도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3개 문항으로 하위문항을 포함하면 21개 문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에 얼마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9개 하위문항
- 성인이 된 후 투표에서부터 정당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7개 하위문항
- 향후 청소년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5개 하위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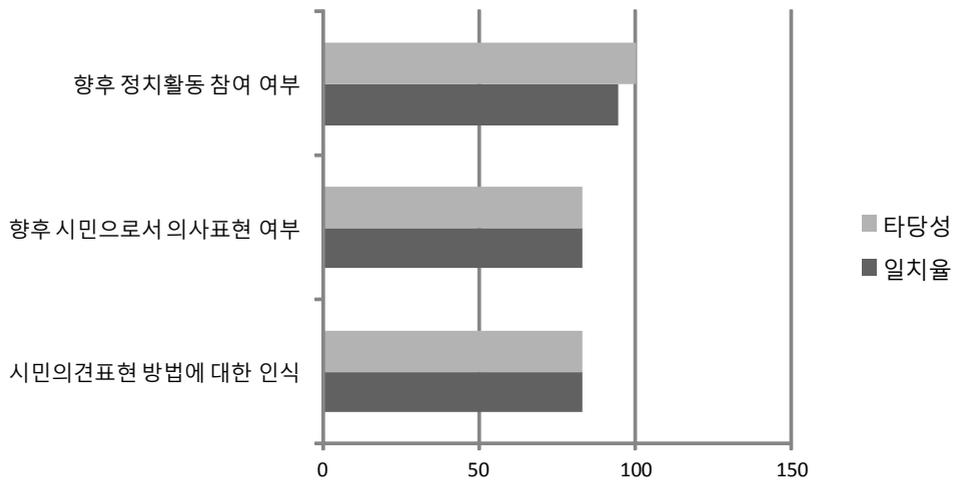
이들 문항에 대한 분류의 일치도는 87.0%로 매우 높았다. 이는 모두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문항들로 시제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88.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미래행동의도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20	시민의견표현 방법에 대한 인식	83.3	0.0	11.1	83.3	0.0
21	향후 정치활동 참여 여부	94.4	0.0	0.0	94.4	0.0
22	향후 시민으로서 의사표현 여부	83.3	0.0	0.0	83.3	11.1
	문 항 평 균	87.0	0.0	3.7	87.0	3.7

표 V-20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미래행동의도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20	시민의견표현 방법에 대한 인식	83.3
21	향후 정치활동 참여 여부	100.0
22	향후 시민으로서 의사표현 여부	83.3
	문항 평균	88.9



【그림 V-11】 미래행동의도 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4) 현재 행동 단계 문항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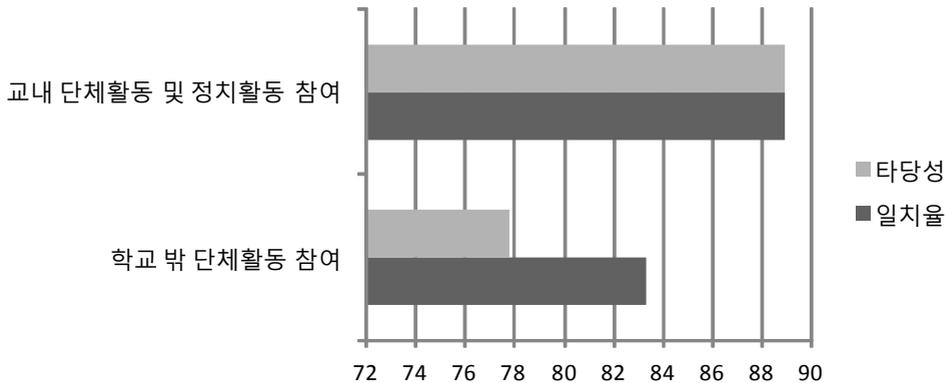
현재 행동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2개(하위문항 14개)로서 학교 밖의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8개의 하위문항과, 학교 내에서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측정하는 6개의 하위문항이 그것이다. 이들 문항의 분류 일치도는 평균 86.1%로 매우 높았으며 타당도에 대한 평가 역시 평균 83.4%로 매우 높았다.

표 V-21 ICCS와 국내전문가 분류의 일치율: 현재 행동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일치율 (%)	전문가 의견			
			1영역: 가치 신념	2영역: 태도	3영역: 행동 의도	4영역: 행동
3	학교 밖 단체활동 참여	83.3	0.0	11.1	5.6	83.3
4	교내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 참여	88.9	0.0	5.6	5.6	88.9
	문항 평균	86.1	0.0	8.4	5.6	86.1

표 V-22 문항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현재 행동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약	타당성 평가(%)
3	학교 밖 단체활동 참여	77.8
4	교내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 참여	88.9
	문항 평균	83.4



【그림 V-12】 현재 행동영역 문항의 영역체계 일치율과 문항타당성 평가 비교

4) 결과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평가는 높으나 분류체계의 일치도는 낮았다. 국내 전문가들이 ICCS 문항의 민주시민역량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에 동의한 비율은 인지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86.9%, 정의-행동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88.6%로 나타났으며 타당성 동의율이 70% 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 문항이 ICCS가 의도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가 있었다. ICCS 영역분류와 국내 전문가들의 영역분류의 일치율은 평균적으로 인지영역 문항에서는 45.8%, 태도-행동영역 문항에서는 65.4%였다. 특히 인지영역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류와 ICCS의 분류가 완전히 어긋난 문항도 3개(18번, 29번, 42번)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역량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내린 명목타당도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ICCS 조사결과와 문화간 타당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능검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제비교조사가 문화맥락의 차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본 조사는 시민성 혹은 민주시민역량이라는 특정한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지영역 문항들이 민주시민 지식점수(knowledge score)라는 단일 지표로 합산되며, 합산과정에서는 난이도 뿐만 아니라 각 문항들의 영역별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weight)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 인지영역 척도 응답결과의 채점과 평가에 있어 문화간 타당성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체계와 IEA에서 전제한 개념체계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치율이 20% 이하인 문항들 중에서 시민사회의 원리(내용영역 2) 문항이 10개로 가장 많았고(해당영역 26문항 중 38.4%), 시민 참여(내용영역 3) 문항이 8개(해당영역 18문항 중 44.4%), 시민사회의 체계(내용영역 1) 문항이 2개(해당영역 31문항 중 6.5%), 시민정체성(내용영역 4)이 2개(해당영역 문항 5중 40%)를 차지했다. 지식 차원과 추론과 분석 차원으로 분류하면 이 22문항 중에서 20문항이 추론과 분석 문항이었으며(해당 차원 61문항 중 32.7%), 2문항만이 지식에 관한 문항이었다(해당 차원 19문항 중 10.5%)〈표 V-23〉. 시민 참여에 관련된 문항 중에서 불일치한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시민참여의 절차나 원칙을 민주주의 시스템의 원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참여의 원칙을 투표와 같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고려하려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의 원리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다문화 포용성에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ICCS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개념 사이에 가장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타당도 평가를 받은 문항은 국제 적십자사의 상징을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서 이는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이었다. 그 외에 지역할당제와 공평한 기회의 관계를 묻는 문항과 견제와 균형, 그리고 독점의 문제를 다룬 문항들이 가장 낮은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표 V-24). 문항별 타당도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역량 구성변인 각각의 중요도를 반영한다고 해석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및 독점 제한의 중요성이 가장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역량 조사지를 구성할 때 영역의 분류, 특히 시민 참여 문제와 시민사회의 원리 영역 문항들에 대한 이론적인 합의가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분석은 18명의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사 방법과 표본 대표성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23 인지영역 문항 중 내용분류 일치도 20% 이하 문항

내용영역	하위 구분	번호	문항내용	일치율
체계	지식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근무조건과 급여향상	16.7
원리	추론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 교육 의무의 근거	16.7
원리	추론	57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이유	16.7
원리	추론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16.7
참여	추론	11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 알기	16.7
원리	추론	5	공적 논쟁이 사회에 유익한 이유	11.1
원리	추론	26	각국의 자국 농업 보호정책에 반대하는 근거	11.1
원리	추론	55	영화 검열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의 근거	11.1
참여	추론	25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부터 농업 보호방법	11.1
참여	추론	32	이해당사자가 반대해도 투표결과를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이유	11.1
참여	추론	44	민주주의와 자발적 투표의 관계	11.1
참여	추론	45	자발적 투표와 투표에 대한 책임간의 관계	11.1
체계	지식	68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와 결과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	5.6
원리	추론	14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	5.6
원리	추론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	5.6
원리	추론	58	국교가 있어도 종교 교육의 의무는 없는 이유	5.6
참여	추론	7	미성년자 노동착취업체 제조신발을 거부	5.6
참여	추론	49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5.6
정체성	추론	24	전과자와 이웃하는 것을 허용하기	5.6
정체성	추론	30	자기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6
원리	추론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0
참여	추론	42	평화를 상징하는 두 카드의 의미	0
정체성	추론	29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의 피해	0

표 V-24 인지영역 문항 중 타당도 70% 이하 문항

내용영역	하위 구분	번호	문항내용	타당도
원리	추론	59	국제적십자위 로고를 적수정으로 변경한 이유	50
원리	추론	20	지역할당제가 해당 지역 선수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55.56
원리	추론	3	정부에서 소수민족에게 공용어 교육 의무의 근거	61.11
체계	추론	2	기업의 미디어 소유를 금지/제한하는 법의 존재이유	64.44
체계	추론	6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	66.67
원리	추론	18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행동	66.67

정의-행동 영역에서 ICCS 분류체계와 국내전문가들의 분류 간에 일치율은 인지영역에 비해 높았으나 그래도 일치율 60% 이하의 문항은 5문항(하위문항 포함 30문항)이었다. 그 중 가치/신념에 해당하는 문항이 1문항(6개 하위문항)이었고, 나머지 24문항은 모두 태도에 관한 문항이었다. 정의-행동 영역에서 가장 낮은 타당도평가를 받은 문항은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문항(77.8%)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시민운동 단체나 사회참여 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5 정의-행동 영역 문항 중 일치율 60% 이하 문항

단계	번호	문항내용	일치율
태도	8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태도 (5문항)	22.2
태도	19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 (7문항)	33.3
태도	14	다문화사회의 평등에 관한 태도 (5문항)	44.4
가치/신념	10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활동 인식(6문항)	55.6
태도	1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7문항)	55.6

2. 민주시민역량의 질적 유형 분석

민주시민역량 관련 변인들 중에서 특히 민주시민역량의 정의-행동 영역변인들과 인지영역 변인들간의 관계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ICC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8개국의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은 시민성 지식 수준에서는 참가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핀란드와 스웨덴 뿐이었다. 하지만 국가나 공공기관, 미디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측정결과는 정 반대였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세상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다. 반대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시민지식 수준은 가장 낮았으나 신뢰수준은 매우 높았다. 이렇게 시민성의 지식변인과 태도변인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의-행동 영역 변인들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정의-행동 영역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을 기초로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영역에서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 정의-행동 영역 문항의 요인구조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행동 영역에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ICCS의 가치신념 및 정의-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121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서 축약했다. 최대 우도 추출법(maximum likelihood factor extraction)을 사용하여 설명량이 적은 요인을 제거하고 9개 요인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그 결과 산출된 9개 요인의 회전후 전체 변인에 대한 설명량은 37.82%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별 항목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0.30이상인 문항들만을 해당 요인의 평균치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구성은 아래 <표 V-26>과 같다.

표 V-26 정의-행동 영역 변인의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요인고유값(eigen value)	8.440	6.182	5.739	5.324	4.146	3.646	3.480	3.410	2.380
미래참여-정치관련 기사작성	0.638								
미래참여-각종단체가입	0.629								
미래참여-정치적견해 표현	0.606								
미래참여-정치관련 온라인 포럼	0.588								
항의-선출직 공무원 접촉	0.563								
미래정치참여-정치단체가입	0.562								
미래정치참여-정당지원	0.557								
항의-신문사에 편지쓰기	0.519								
지지-정치이슈 관련 학급연설	0.509								
지지-신문사에 견해 전달	0.502								
항의-서명운동	0.495								
바람직-정치사회이슈 견해피력	0.485								
미래정치참여-지방선거출마	0.480								
지지-국제갈등에 관한 토론	0.477								
지지-학생단체 구성	0.475								
지지-학교선거 후보출마	0.467								
성인이 되면 정치참여	0.464								
지지-이슈에 대한 TV토론참여	0.463								
미래정치참여-후보자정보 수집	0.449								
미래정치참여-지방선거투표	0.431								
항의-평화집회 참여	0.425								
미래참여-자원봉사	0.405								
항의-벤티나 티셔츠	0.386								
미래정치참여-중앙선거투표	0.381								
미래정치참여-노조가입	0.355								
항의-불매운동	0.341								
신뢰-중앙정부		0.680							
신뢰-국회		0.675							
신뢰-정당		0.639							
신뢰-UN		0.578							
신뢰-지자체		0.577							
신뢰-법원		0.565							
국가관-정치체계 만족		0.547							
국가관-존경		0.547							
신뢰-경찰		0.543							
국가관-자긍심		0.528							
신뢰-군대		0.508							
국가관-자부심		0.493							
신뢰-학교		0.448							
국가관-국기 중요		0.416							
국가관-환경의식		0.391							
국민대표에 대한 존중		0.340							
국가관-상대적 우월		0.331							
시민의식-준법		0.305							

다인종-동등한 취업기회	0.799
다인종-동등한 교육기회	0.778
다인종-동일권리 동일의무	0.705
이민자-동등한 교육기회	0.702
이민자-자국민과 동등권리	0.693
이민자-투표권	0.607
다인종-선거출마 장려	0.584
이민자-고유한 관습유지	0.582
다인종-학교에서 다인종존중교육	0.579
이민자-자국어사용	0.522
이민자-입국제한해야(r)	0.305
관심-국가간 정치	0.800
관심-국외 정치	0.760
관심-국가의 정치이슈	0.713
관심-국가의 사회이슈	0.572
관심-공동체내의 정치이슈	0.557
자신감-또래보다 많이 안다	0.532
자신감-국가 정치이슈 이해	0.487
자신감-의견이 있다	0.481
자신감-경청할만한 의견이 있다	0.474
자신감-쉽게 이해한다	0.455
민주주의-선출권리	0.456
민주주의-모두의 권리 존중	0.403
민주주의-정치적 항의권리	0.390
학생참여-협동과 영향력	0.389
학생참여-학생과 공조	0.379
민주주의-표현권리	0.377
민주주의-정부비판자유	0.366
학생참여-학생회	0.317
민주주의-기업의 언론소유배제	0.305
학생참여-학교 발전	0.303
학생참여-조직구성	0.301
양성-여성은 정치 배제	0.689
양성-남자에게 지도자우선권	0.665
양성-정부일에 동등참여	0.626
양성-모든 면에서 동등권리	0.624
양성-남자에게 취업우선권	0.623
양성-동일업무 동일임금	0.545
양성-여자는 아동양육우선	0.488
인권증진 참여	0.641
환경보호 참여	0.616
공동체위한 활동	0.605
평화적 항의	0.563
정치적 토론	0.488
정당가입	0.355
역사 학습	0.264

종교-도덕판단 도움	0.822
종교-중요성	0.795
종교-법에 우선	0.761
종교-더 많은 권한	0.726
종교-실제행동에 영향	0.722
항의-도로봉쇄	0.820
항의-건물점거	0.770
항의-스프레이	0.732

추출된 요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요인1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합법적인 항의를 위해서 불매운동 등에 참여할 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요인은 전반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요인을 ‘적극적 참여의지’로 명명했다. 요인2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문항 전체와 국가에 대한 태도 특히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을 포괄한다. 이 요인의 구성문항들은 한 사회와 국가의 공공기관과 단체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이 요인을 ‘공공 신뢰’라고 명명했다. 요인3은 다른 인종과 이민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지지하는 문항들로서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름 붙였다. 요인4는 국내외의 실제 정치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 그리고 본인이 남들보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의견이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요인은 ‘정치적 관심과 자신감’으로 명명했다.

요인5는 민주주의의 공평한 참여원칙에 대한 태도문항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요인은 거시적 영역인 사회 및 국가와 중간적 영역인 학교를 포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을 얼마나 체화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로 명명했다. 요인6은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인7은 인권 및 환경보호 활동, 정치적 항의 및 토론활동, 정당가입 등의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서 여기서는 ‘시민운동 참여’로 이름 붙였다. 요인8은 종교가 도덕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등의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요인은 ‘종교적 가치’로 이름 붙였다. 요인9는 정치적인 항의를 위해서 도로봉쇄나 건물점거, 스프레이 페인팅 등의 과격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의지를 묻는 문항들로서 여기서는 ‘불법적 정치항의’로 명명했다.

표 V-27 요인별 내용요약

요인명	요인 부하량	문항수	대표구성문항
요인1 적극적 참여의지	8.440	26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 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현재와 미래의 적극적 정치참여 및 항의활동 참여의사 문항
요인2 공공 신뢰	6.182	18	공공기관 신뢰 및 국가에 대한 태도(국가관) 문항 *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제외됨
요인3 다양성 존중	5.739	10	타인종 및 이민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지지하는 문항
요인4 정치적 관심과 자신감	5.324	11	국내 및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 및 정치적 지식에 대한 자신감 문항
요인5 참여 민주주의	4.146	11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학생참여 원리에 대한 태도 문항
요인6 양성평등	3.646	7	양성에게 평등한 대우를 지지하는 문항
요인7 시민운동 참여	3.480	7	인권 및 환경보호 활동, 정치적 항의 및 토론활동,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정치 참여
요인8 종교적 가치	3.410	5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문항
요인9 불법적 정치항의	2.380	3	도로봉쇄, 건물점거, 스프레이 등의 불법적인 항의 참여의사

2) 정의-행동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1) 분석 방법

시민성 태도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조사대상자들 내에서 동질적인 집단을 찾아내어 다른 집단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 학생들의 시민의식관련 태도의 질적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군집분석을 위해서 위에서 산출한 각 요인별 평균과 시민지식 점수 및 학교내/공동체 참여점수를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군집분석의 대상은 ICCS 시민지식 점수평균 최상위

3개국, 중위 2개국, 최하위 3개국으로 선정했다. 단, ICCS 조사에서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던 핀란드는 종교에 관련된 문항을 측정하지 않은 이유로 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 결과, 핀란드를 제외하고 ICCS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최상위인 덴마크(2위), 한국(3위), 대만(4위)의 3개 국가를 상위권 국가로 선정하였고, 하위권 3개 국가로는 ICCS 시민지식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도미니카 공화국(38개국 중 38위), 파라과이(37위), 인도네시아(36위), 과테말라(35위), 태국(34위)의 5개국 중에서 대륙간 문화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중남미에 해당하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시아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의 3개 국가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중위권 국가로는 13위였던 영국과 14위인 뉴질랜드의 2개국을 포함했다. 최종적으로 8개국의 응답자 36744 명의 조사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학생의 90.3%는 크게 6유형의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분석 결과 추출된 군집별 특성

군집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23.3%를 차지한 군집1은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만 적극적으로 나타냈을 뿐,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중간이하로 나타난 집단으로 ‘정치적 소외자’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공에 대한 신뢰나 적극적 참여의지가 낮고 종교적 가치도 낮게 평가하며 시민참여의사도 적었다.

두 번째 군집은 18.6%를 차지한 ‘종교적 시민’으로 종교적 가치만 높이 평가할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높지도 낮지도 않은 범위에 속했다. 단, 이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나 국가관은 0.402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양성평등(-.422)이나 불법적 정치참여(-.408)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공동체나 학교 내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시민참여도를 나타냈으며 시민지식 점수도 평균수준이었다.

세 번째 군집은 이민자나 타인종에 대한 포용성이 높고,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하며,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시민지식 점수도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단 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지나 학교 밖 공동체에서의 실제적 참여는 높지 않고 불법적인 정치 항의에 참여할 의사도 없는 집단이지만 학교 내 시민참여는 적극적이었으며 종교적 가치에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적절한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조용한 참여자’ 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네 번째 군집은 불법적인 정치적 항의의 의사만 평균수준일뿐,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집단으로 ‘총체적 불만자’ 유형이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인종이나 타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모든 참여영역에서 가장 낮은 그룹이었다. 이들은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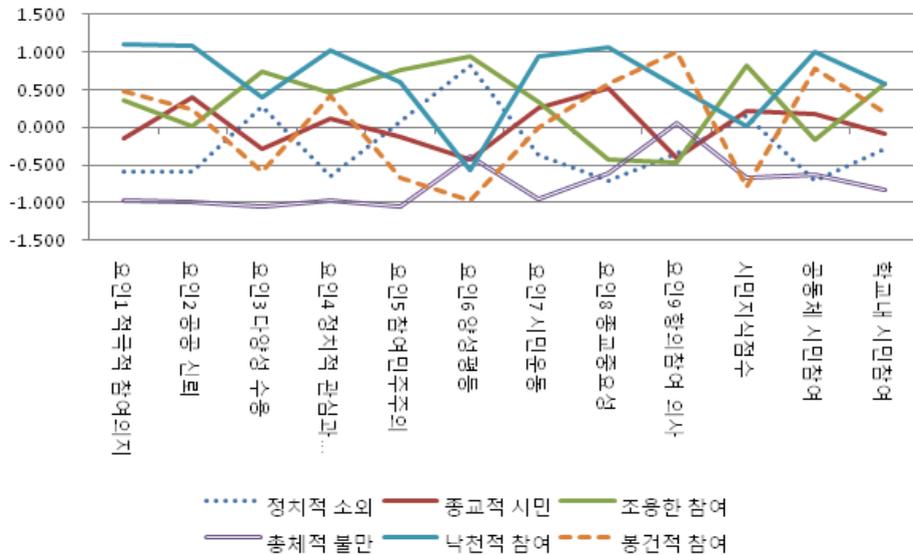
다섯번째 군집은 정치사회적 참여의지가 적극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으며 실제 공동체나 학교 내에서의 시민참여 수준도 높고 종교적인 가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으로서 ‘낙천적 참여자’ 라고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단, 이들 낙천적 참여자의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실제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현실적인 지식이나 판단보다는 피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해서 사회·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12.4%를 차지한 ‘봉건적 참여자’ 로서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의 의지도 높고 실제 공동체 참여수준도 높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정치향의에 참가할 의사도 높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타민족이나 이민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었으며 참여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민지식 점수도 가장 낮았다. 민주주의의 가치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적극적인 참여의사만 가진 집단으로 가장 폭력적일 가능성도 높았다.

이들 군집들간의 시민지식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으며($F(33178.5)=2608.9, p < 0.0001$), sheffe 방식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5개 군집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도 0.05수준에서 의미있었다. 시민지식 점수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조용한 참여자(군집3)들로 이 집단의 시민지식 점수 평균은 ICCS의 환산방식으로 변환하기 이전 기준으로 158.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군집은 종교적인 가치는 긍정하되 다양성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 종교적 참여자(군집2)들로 152.5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정치적 소외자’ (군집1)들로 나타났다. 반면에 태도 요인들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군집 5(낙천적 참여자)는 이보다 낮은 150.4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성 태도 특히 다문화 허용성이나 양성평등의 인식, 그리고 신뢰 등이 시민지식수준과는 별개의 변인임을 시사한다. 시민지식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총체적 불만형(143.5점)과 봉건적 참여형(142.3점)으로 나타났다. 총체적 불만형보다 봉건적 참여형의 시민지식 점수가 더 낮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28 군집분석결과 요약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비율		23.3%	18.6%	18.4%	13.8%	13.5%	12.4%
시민지식 점수 평균		151.74	152.50	158.40	143.48	150.48	142.31
요인	1 적극적 참여의지	하			하	상상	
	2 공공 신뢰	하			하	상상	
	3 다양성 수용			상	하하		하
	4 정치적 관심과 자신감	하			하	상상	
	5 참여민주주의			상	하하	상	하
	6 양성평등	상		상		하	하
	7 시민운동				하	상	
	8 종교적 가치	하	상		하	상상	상
	9 불법적 정치향의					상	상상
	시민지식점수 총점			상	하		하
	공동체 시민참여	하			하	상상	상
	학교내 시민참여			상	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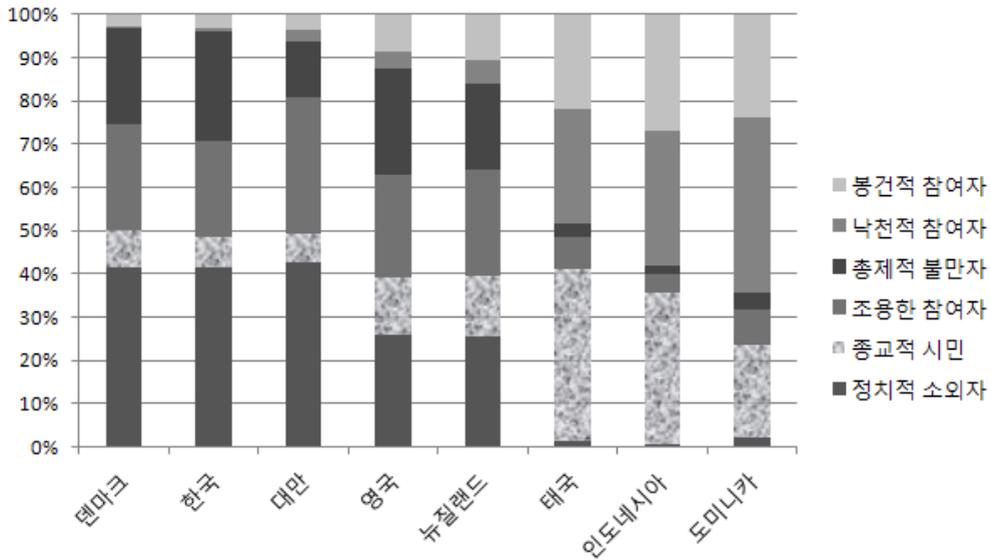
【그림 V-13】 추출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프로파일

3) 각 군집의 분포를 통한 국가별 특징분석

위에서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한 6가지 시민태도 유형의 분포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높은 국가 순서대로 왼쪽부터 배열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덴마크(2위), 한국(3위), 대만(4위)에서는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 ‘정치적 소외자’ 그룹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또한 조용한 참여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는데, 조용한 참여자가 가장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유형임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높은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이들 조용한 참여자들에게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와 사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이들 상위권 국가의 문제는 총체적 불만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민유형 분포에서 주목할 점은 조용한 참여자(22.3%)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낙천적 참여자(1.0%)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25.2%로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였다.

표 V-29 비교대상 국가들의 군집별 분포(%)

	덴마크	한국	대만	영국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전체
정치적 소외자	41.3	41.5	42.6	25.9	25.4	1.4	0.6	2.0	23.3
종교적 시민	8.7	6.9	6.6	13.2	14.2	39.8	34.9	21.5	18.6
조용한 참여자	24.6	22.3	31.7	23.7	24.6	7.3	4.4	8.2	18.4
총체적 불만자	22.1	25.2	12.7	24.6	19.9	3.3	1.9	4.0	13.8
낙천적 참여자	0.7	1.0	2.6	4.0	5.3	26.2	31.5	40.3	13.5
봉건적 참여자	2.7	3.1	3.7	8.6	10.6	22.0	26.8	24.0	12.4



【그림 V-14】 비교대상 국가에서 각 군집의 분포 현황

반면에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도미니카(36개국 중 36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4위)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종교적 시민들의 시민지식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주류집단이 바로 종교적 시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위권 국가에서는 봉건적 참여자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이들 봉건적 참여자와 낙천적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시민지식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영국(13위), 뉴질랜드(14위)는 정치적 소외자 그룹의 비율은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적은 반면,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높고 봉건적 참여자의 비율은 중간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인 ‘지식’ 과 정의적 요소인 ‘가치 및 정의-행동’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특히 신뢰(trust)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도미니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신뢰는 마치 ‘무지한 자가 행복하다’ (Ignorance is bliss)는 말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수준이 낮으면서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낙천적 참여자’ 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 결과 공동체의 응집성이나 개인적인 만족도에서도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낮았고, 신뢰나 참여수준도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수준 이상의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되, 그것이 민주시민역량에 있어서 지적인 영역의 퇴보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4) 결과 요약 및 논의

시민역량을 구성하는 두 요인인 인지적인 지식변인과 태도 및 행동 변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분석 결과, 인지 영역의 지수와 정의-행동 영역의 지수 간에는 단순한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시민역량에 있어서 ICCS 2009에 참여한 각국의 청소년들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인지영역 지수와 정의-행동 영역 지수가 모두 높은 유형(조용한 참여자)이 존재하는 반면, 인지영역 지수에 비해서 정의-행동영역 지수는 낮은 유형(정치적 소외자)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전체의 기술 통계치나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 지수간에 역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지적 영역 지수는 높지 않으나 정의-행동 영역 지수가 매우 높은 3개 유형(종교적 시민, 봉건적 참여자, 낙천적 참여자)이 전체 응답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이 유형의 분포는 각 국가의 민주시민역량 지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 ‘정치적 소외자’ 유형과 ‘조용한 참여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조용한 참여자가 가장 시민역량의 지식 점수가 높은 유형임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의 높은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이들 조용한 참여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임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정치와 사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이들 상위권 국가의 문제는 총체적 불만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민지식수준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매우 높은 지식수준과 매우 낮은 태도수준의 격차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도미니카(36개국 중 36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4위)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종교적 시민들의 시민지식 점수 평균이

두 번째로 높음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그나마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주류집단이 바로 종교적 시민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위권 국가에서는 봉건적 참여자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이들 봉건적 참여자와 낙천적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하는지가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민역량의 지식점수가 높은 반면 태도/행동 점수가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는 지식수준은 높으면서 태도나 행동의 수준은 부정적인 정치적 소외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시민 지식수준과 신뢰수준이 고르게 증상위권을 형성해주는 ‘종교적 참여자’ 나 가장 긍정적인 태도/행동 경향을 보인 ‘낙천적 참여자’ 유형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민역량의 모든 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의 전체 평균은 비록 높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시민지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소외자’ 를 ‘조용한 참여자’ 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교과서를 통한 교육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민주적인 풍토와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정치참여 기회의 제도화,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제 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낮으면서 정치적인 참여의지는 강한 ‘봉건적 참여자’ 들을 최소한 평균이상 수준의 민주시민지식을 갖춘 ‘종교적 참여자’ 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비록 높은 시민지식 점수의 평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은 ‘총체적 불만자’ 들로 이들은 지식도 신뢰도 자신감이나 의지도 모두 낮았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2009년 ICCS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했다. 2011년 9월에 ICCS의 정의-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¹⁷⁾. 그 결과를 기초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시계열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시민참여의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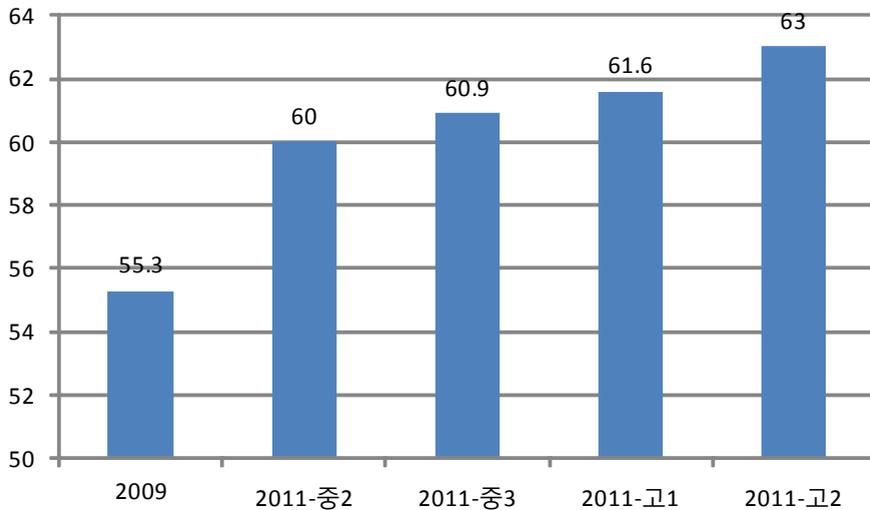
학교 밖 시민참여는 정치사회적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실제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의 인지적인 참여활동과 실제 학교 밖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의 비율이라는 두 지표로 측정되었다.

첫 번째 지표인 방과 후에 자기가 사는 공동체와 국가, 혹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TV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부모나 또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의 비율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치사회적 주제들에 대한 관심은 2009년에 비해서 2011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표의 전체 평균은 55.3%에서 60.05%로 4.75% 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2011년에 유일하게 낮아진 항목은 신문을 통해서 정치사회 분야의 정보를 읽는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직접적인 비교대상인 중학교 2학년에서는 52.4%에서 46.7%로 낮아졌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해서 고등학교 2학년은 53.4%였다. 반면 2009년에 비해서 가장 비율이 높아진 항목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었다. 중학교 2학년 집단에서 이 비율은 2009년의 55.4%에서 2011년에는 74.9%로 19.5% 포인트가 증가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꾸준히 증가해서 고등학교 2학년 집단에서는 79.7%까지 높아졌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TV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정보화와 청소년들의 높아지는 인터넷 의존도를 반영한 결과로서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관심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2011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권인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V-30 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 수준의 차이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한다.	68.1	79.1	77.9	76.9	76.2
2)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89.5	92.2	90.7	90.0	92.1
3)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52.4	46.7	49.7	51.4	53.4
4) 우리나라 정치사회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56.2	55.8	56.9	60.7	65.4
5)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55.4	74.9	77.0	78.3	79.7
6)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73.1	78.0	75.6	74.2	75.7
7)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37.9	38.3	41.8	43.1	46.5
8)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한다	10.0	15.4	17.3	18.3	15.1
평균	55.3	60.05	60.86	61.61	6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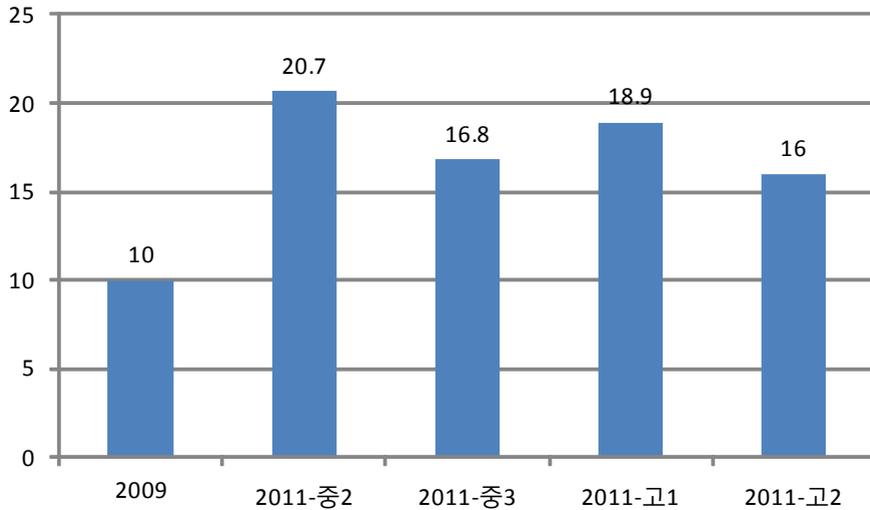
【그림 V-15】 정치, 사회적이슈에 대한 인지적 참여수준의 차

학교 밖 시민참여에 관한 두 번째 지표는 실제로 학교 밖에서 자기가 사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였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내용영역 3)의 ‘현재 행동’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2011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평균 10.6%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활동은 자원봉사단체 참가였으며, 증가량이 가장 적었던 것은 인권운동단체였다. 그러나 인권운동단체의 참가율 자체가 2009년에 2%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 자체는 3배나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문화단체에의 참가율도 1.7%에서 6.5%로 3.8배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참가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반적인 참여율은 모두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입시로 인한 학업부담으로 추정된다.

표 V-31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다.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환경운동단체	5.1	19.3	12.8	16.9	13.3
2) 인권운동단체	2.0	6.0	4.0	5.2	4.8
3) 자원봉사단체	17.7	38.1	35.1	37.9	35.8
4) 기부단체	8.0	24.5	18.2	20.2	15.6
5) 외국인문화단체	1.7	6.5	3.5	4.1	3.6
6) 종교단체	25.3	29.7	25.8	26.6	22.1
7) 청소년캠페인활동	10.4	20.6	18.0	21.2	16.9
평 균	10.03	20.67	16.77	18.87	1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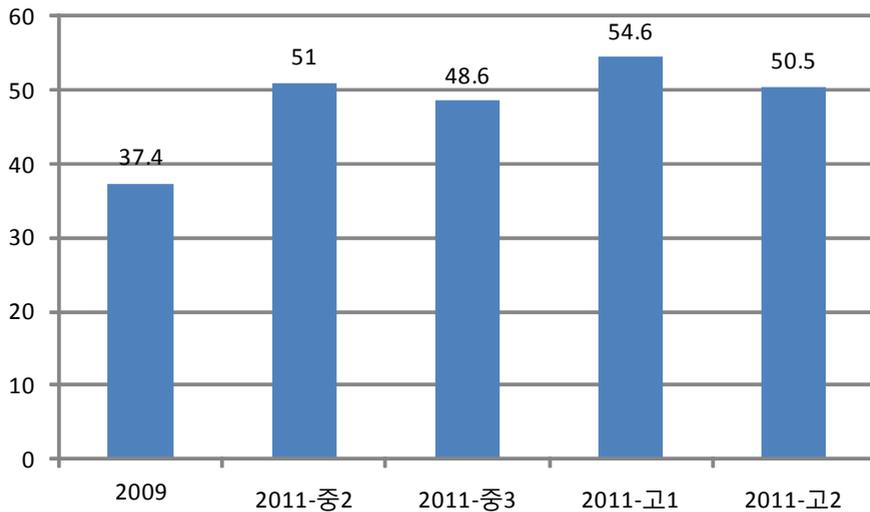
【그림 V-16】 학교 밖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의 변화

2) 학교 내 시민참여의 지표 비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으로는 방과후 교내 활동에의 참여와 각종 학급토론, 학교 임원 선거에의 투표와 직접 출마,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등이 있다. ICCS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이 문항도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내용영역 3)의 ‘현재 행동’ 단계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에 대한 응답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매우 뚜렷한 증가양상이 발견되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모든 영역에서 2009년에 비해 더 많은 학교 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평균 13.7% 포인트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6.5%에 달했다. 교과서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 영역과는 달리 민주시민 역량의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인 참여와 이를 장려하는 환경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편 중학생 집단보다 고등학생 집단이 평균 참여율이 높았지만 같은 교급 내에서는 학년 증가에 따른 감소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 역시 학업 부담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중학교 2학년에서 높아진 교내활동 참여율의 원인에 있어서도 입학사정관제도와 같은 활동지표를 반영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32 학교 내 시민참여(%) - 참여한 적 있음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방과 후 활동에 자발적 참여	23.1	60.6	54.4	63.1	58.4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32.6	54.0	53.4	61.2	53.3
3) 반장/학생회장 임원 투표	76.3	80.3	84.9	80.4	82.9
4)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33.0	38.7	38.2	46.3	43.4
5) 학생회 토론 참여	26.3	31.5	25.7	34.9	27.3
6) 반장/ 학생회 임원 출마	32.8	40.7	34.9	41.5	37.7
합계	37.35	50.97	48.58	54.57	50.50



【그림 V-17】 학교 내 시민참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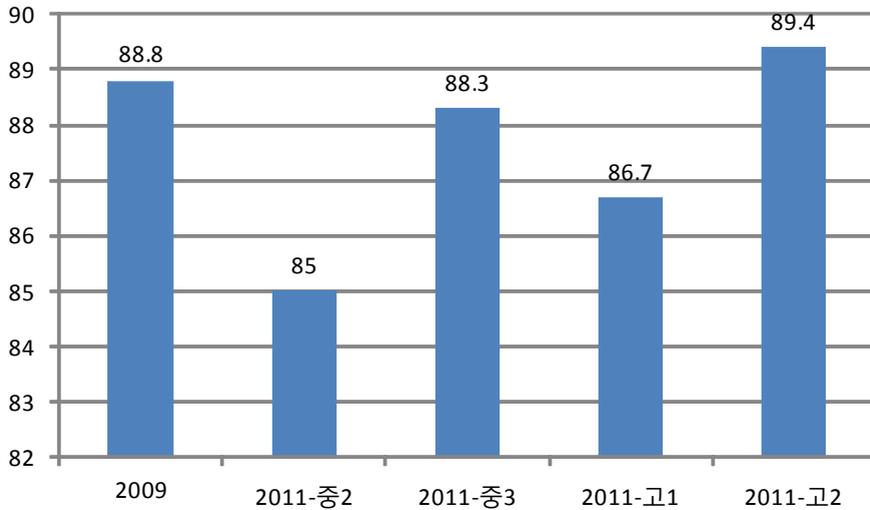
3) 시민사회의 원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문항분류체계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원리(Civic principle)’ 영역(내용영역2)의 ‘가치와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은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감소했다(평균 3.76% 감소). 청소년들이 긍정한 비율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한 항목은 정치지도자가 자기 가족을 정부에서 일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항으로서 이는 2009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변화한 우리 정치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집단에서 급속하게 더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33 올바른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 비율(%)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8	94.7	96.0	95.3	96.6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56	62.6	66.0	61.6	67.9
3)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82	80.3	84.1	84.1	86.8
4)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97	90.0	93.7	92.0	94.1
5)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88	87.2	90.1	87.6	92.0
6)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98	87.7	93.4	91.8	93.1
7)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97	90.6	92.6	91.3	94.3
8)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94	86.8	90.5	89.8	90.4
합계	88.75	84.99	88.30	86.69	8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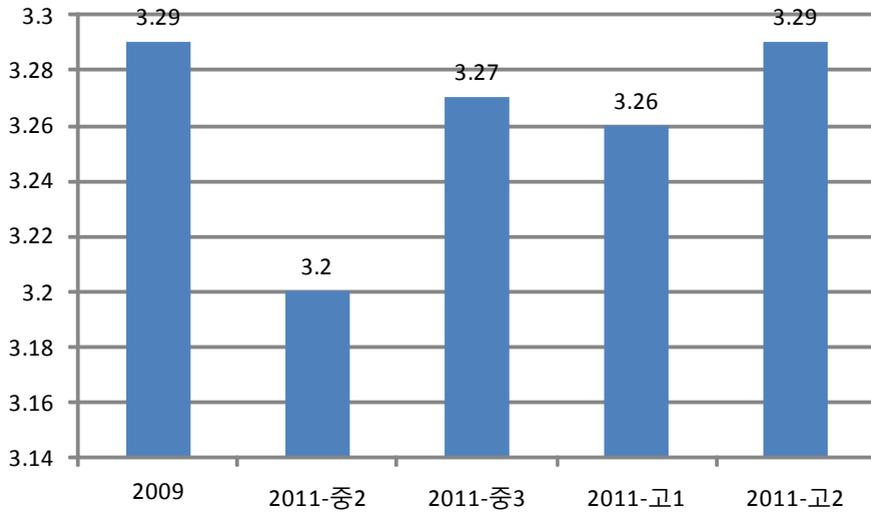
【그림 V-18】 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긍정비율의 변화양상

4) 좋은 시민의 조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조건과 그 구성요건’ (내용영역 1)에 관한 ‘가치와 신념’ 단계에 해당한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점이다. 비교 결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의 수준이 낮아졌다. 동의지수의 평균은 2009년에 비해 2.8% 감소한 3.2점이었다. 2009년에 비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0.06포인트 증가) 뿐이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년 전인 2009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들의 현재 지표를 보면 향상보다는 정체 혹은 퇴보의 양상이 발견된다.

표 V-34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4점 만점)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7)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참여	3.36	3.12	3.18	3.18	3.18
8)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3.08	3.05	3.11	3.14	3.14
9) 인권증진운동 참여	3.14	3.00	3.06	3.05	3.09
10) 환경보호운동 참여	3.26	3.15	3.18	3.22	3.24
11) 열심히 일하기	3.44	3.50	3.62	3.58	3.64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3.46	3.36	3.49	3.41	3.44
합계	3.29	3.20	3.27	3.26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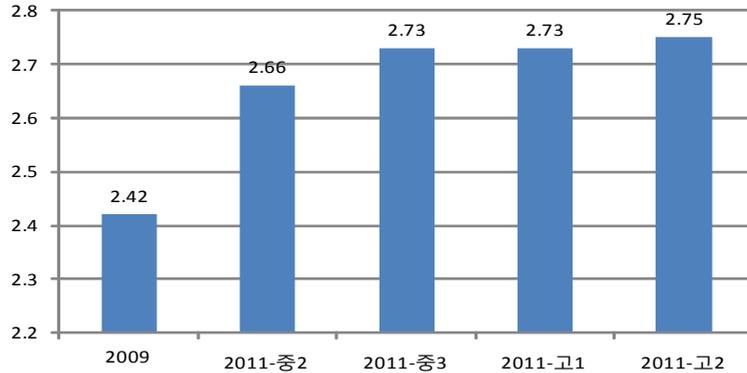
【그림 V-19】 좋은 시민의 조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양상

5) 자신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Civic identities(내용영역 4)영역의 ‘태도’ 단계에 해당한다. 자신이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 공동체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들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본 문항은 이러한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측정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써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4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1점이다. 2009년 조사와의 비교 결과, 2011년의 청소년들은 전에 비해서 시민으로서 자기가 사는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관심 지표는 평균 0.24점 (9.9%) 증가했으며 증가양상은 모든 문항에서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관심 지표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자기가 사는 지역공동체 내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2009년 대비 평균 0.44포인트 (20.2%) 증가했다.

표 V-35 정치적 관심(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 내의 정치적 이슈	2.17	2.61	2.67	2.69	2.68
2)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적 이슈	2.55	2.66	2.78	2.80	2.84
3)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	2.70	2.87	2.96	2.99	3.08
4) 다른 나라 내부의 정치문제	2.19	2.42	2.49	2.43	2.37
5)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적 정치문제	2.37	2.55	2.67	2.67	2.66
6) 환경 보호 문제	2.57	2.86	2.83	2.83	2.87
합계	2.42	2.66	2.73	2.73	2.75



【그림 V-20】 정치적 관심(평균)의 변화양상

6)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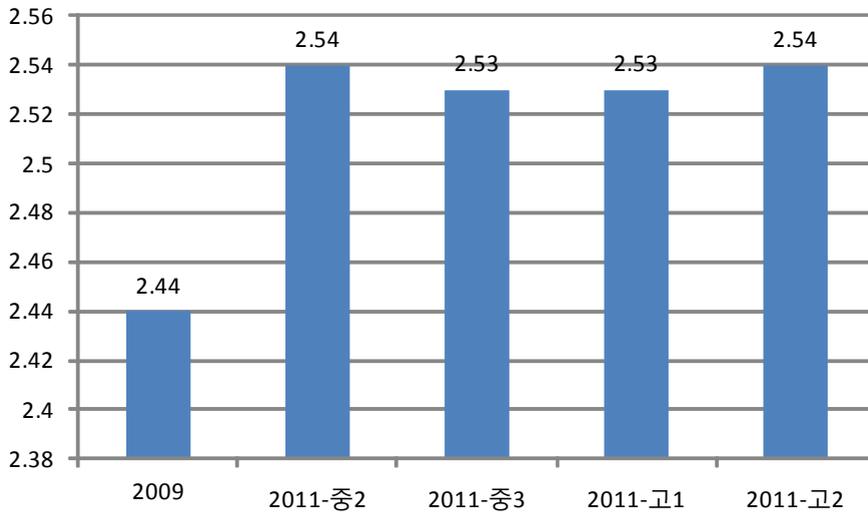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태도가 2009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했다. 이 문항은 ICCS의 문항분류 체계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원리’ Civic principle(내용영역 2)영역 중 ‘태도’ 단계에 해당한다. 본 지표는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4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점이지만 문항들 중에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긍정하는 문항과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문항이 섞여 있어, 이중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역산(reverse coding)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교결과,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양상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가장 뚜렷하게 증가한 항목은 동일 노동시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정도로 2009년에 비해 0.42 포인트(13.5%) 증가했다. 또한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의견(남자만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도 각각 0.17 포인트 (13.1%)와 0.13포인트 (7.7%) 증가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3.54	3.48	3.61	3.53	3.57
2)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3.57	3.48	3.60	3.52	3.55
3) 여자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r)	1.29	1.46	1.39	1.38	1.38
4)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r).	1.72	1.88	1.79	1.85	1.89
5)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3.09	3.51	3.52	3.53	3.55
6) 남성은 여성들보다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r).	1.68	1.81	1.75	1.77	1.75
7) 여성의 우선적 책임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다(r).	2.16	2.15	2.06	2.13	2.08
평균	2.44	2.54	2.53	2.53	2.54

* r 표기 항목은 reverse co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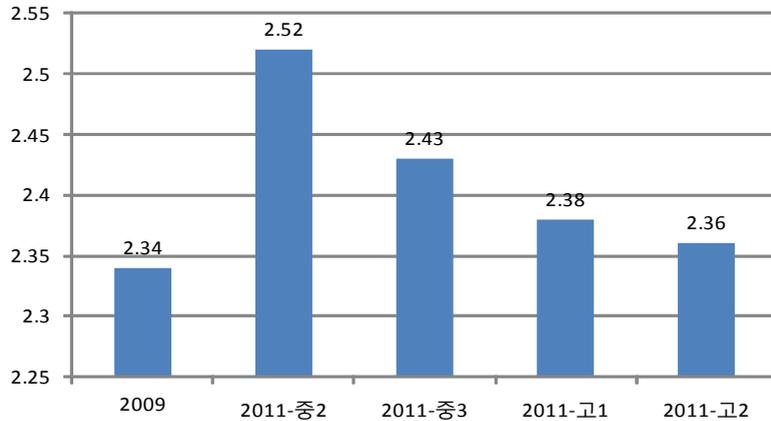
【그림 V-21】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양상

7)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와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구성요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만점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다.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4점, 전혀 관심없다는 응답이 1점이다. ICCS의 분류체계에서 이 문항은 ‘내용영역 1: 시민사회와 그 체계’ (civic society and systems)의 ‘태도’ 단계에 해당한다. 비교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전체의 평균점수는 0.18점(7.6%)이 증가했으며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로서 이 항목에 대한 신뢰점수는 0.09포인트(3.5%) 줄어들었다.

표 V-37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중앙정부 부처 (행정부의 모든 부처)	2.09	2.32	2.23	2.17	2.11
2) 지방자치정부 (도청, 시청 등)	2.16	2.38	2.33	2.29	2.26
3) 법원	2.58	2.73	2.62	2.62	2.53
4) 경찰, 검찰	2.41	2.65	2.52	2.47	2.44
5) 정당	1.94	2.24	2.10	2.06	2.00
6) 국회	1.94	2.23	2.12	2.03	1.99
7) 미디어 (TV,신문,라디오)	2.58	2.49	2.45	2.37	2.34
8) 군대	2.32	2.56	2.43	2.38	2.42
9) 학교	2.44	2.60	2.45	2.48	2.49
10) 국제연합(UN)	2.86	2.97	2.86	2.79	2.80
11) 일반대중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2.39	2.55	2.62	2.57	2.60
합계	2.34	2.52	2.43	2.38	2.36



【그림 V-22】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의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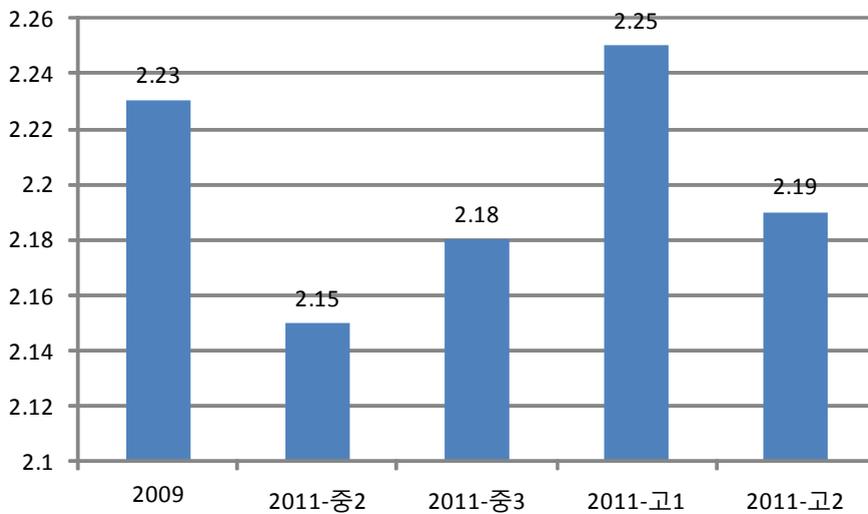
8) 미래 행동의도: 합법적/비합법적 항의

현재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행동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 2009년과 2011년의 응답결과를 비교했다. 측정은 확실히 참여함(4점)부터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음(1점)까지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4점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문항은 ICCS의 분류체계에서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우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항의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합법적인 항의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9년 대비 평균 0.08포인트(3.6%) 감소했는데 감소량이 가장 큰 항목은 신문에 편지를 보내 항의를 하겠다는 문항으로 0.15포인트(6.7%) 감소했다.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은 선출직 공무원을 만나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항목이었는데 2009년에는 가장 낮았던 이 항목의 점수가 2011년에는 0.08포인트(3.9%) 증가해서 항의 의사로 뱃지를 달겠다는 의도보다 더 높아졌다. 합법적인 경로로 자신의 항의의사를 표현할 의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V-38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2.24	2.09	2.09	2.11	2.06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달기	2.14	2.02	2.03	2.07	1.99
3)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 만나기	2.02	2.10	2.06	2.15	2.04
4) 비폭력 평화 집회에 참여하기	2.40	2.35	2.38	2.50	2.45
5) 진정서 서명 모으기	2.35	2.22	2.31	2.40	2.40
6) 상품 불매 운동하기	2.20	2.15	2.21	2.25	2.23
전체 평균	2.23	2.15	2.18	2.25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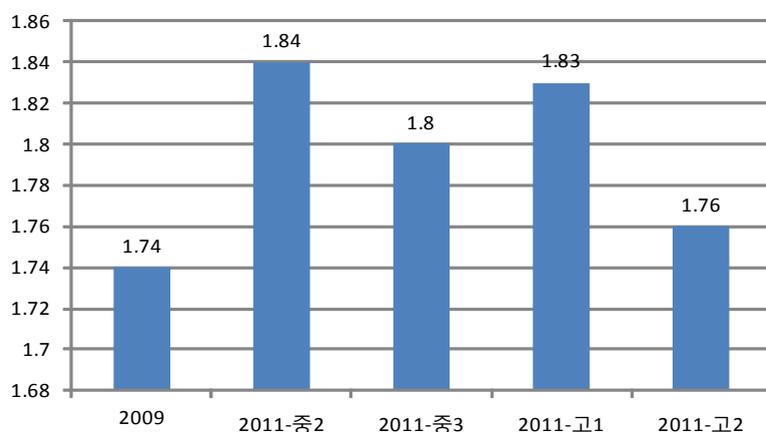


【그림 V-23】 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화(%)

비교한 결과,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보다는 뚜렷하게 낮았다. 그러나 그 수준은 2009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2009년 대비 평균 0.1포인트(5.74%)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도로를 막고 항의집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에 비해서 0.15포인트(9.03%) 증가했다. 반면에 공공건물을 점거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증가했다.

표 V-39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평균)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7) 벽에 항의 표어를 스프레이로 그리기	1.83	1.91	1.88	1.88	1.79
8) 도로를 막고 항의 집회를 하기	1.66	1.81	1.78	1.83	1.75
9) 공공건물 출입을 막고 항의 집회를 하기	1.74	1.79	1.75	1.79	1.73
평균	1.74	1.84	1.80	1.83	1.76



【그림 V-24】 비합법적 항의활동에 대한 미래참여의도의 변화양상

이 결과를 요약하면 2009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이는 합법적인 항의의 기회가 제한되었거나 혹은 합법적 항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합법적인 항의가 보다 효과적인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가 증가할 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정치적 시민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는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민주시민역량 변화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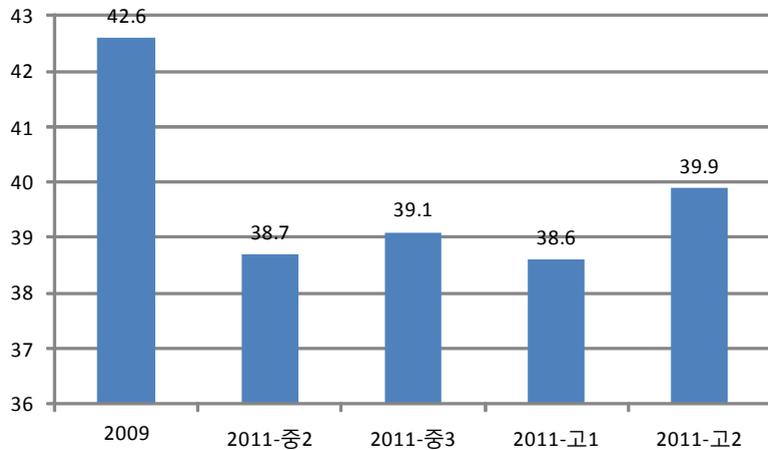
9) 미래행동의도: 정치활동

ICCS의 분류체계에서 ‘내용영역 3: 시민참여’ 영역의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해당하는 또 다른 문항은 성인이 되어 다양한 정치활동에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것이다. 각 문항별로 해당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한 바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선출직 투표에 참여할 의사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지방정부 투표 참여의사는 2009년 대비 18.6% 퍼센트 포인트(22.4%) 감소했고, 중앙정부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도 18.6% 포인트(21.4%) 감소했다. 또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겠다는 응답도 10.5% 퍼센트 포인트(16.9%) 감소했다. 즉 투표의사 자체도 줄었고 선거에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도 감소했다.

반면에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겠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었으며 (9.7% 포인트, 56% 증가) 정치단체(32% 증가)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13% 증가)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17.9% 증가)도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정치참여인 투표에의 참여의지는 비교적 줄어든 반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사는 이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단, 이전에 비해서 증가한 항목들이 모두 20% 이하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0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

문항 내용	2009 ICCS	2011 NYPI			
		중2	중3	고1	고2
1) 지역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82.8	64.2	69.7	69.4	76.6
2)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	86.9	68.3	73.4	73.8	79.1
3)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61.9	51.4	52.3	53.1	59.6
4)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활동을 돕기	17.3	27.0	23.2	21.6	18.1
5)정치단체가입	15.3	20.2	17.5	16.7	14.1
6) 노동조합 가입	18.4	20.8	20.1	20.5	19.8
7) 지역 및 시 선출직 후보 출마	16.2	19.1	17.5	15.2	12.1
문항 평균	42.6	38.7	39.1	38.6	39.9



【그림 V-25】 성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의지(%)의 변화

10) 결과 요약 및 논의

2009년도 ICCS 조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향상된 지표와 하락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은 2009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전에 비해서 TV나 신문보다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뚜렷했지만 청소년들은 자기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서 학교 내외에서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밖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09년에 비해서 평균 10.6%에서 13.7% 까지 증가했다. 단 이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증가현상이었을 뿐이며 이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단체 활동 참여율은 모두 낮아졌다. 또한 2011년의 청소년들은 200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더 인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에 비해서는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은 대중매체인 TV, 신문, 라디오였다.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었다. 정치단체(32% 증가)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13% 증가)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17.9%)도 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투표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크게 감소했다. 또한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도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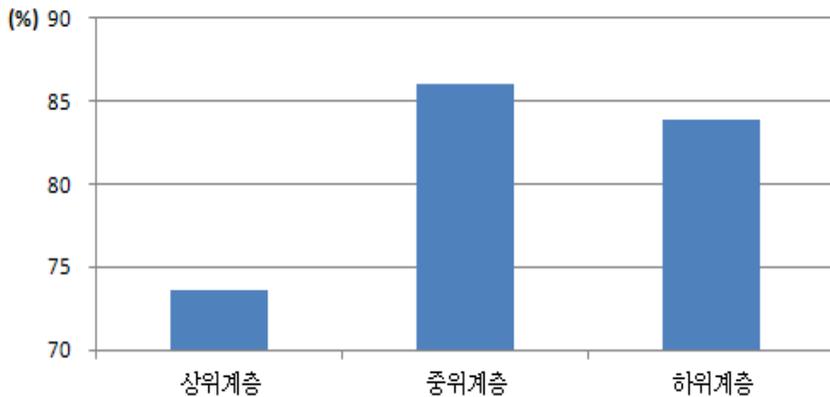
2009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2009년 조사결과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비판의 자유나, 자유로운 선출의 권리, 정치적 항의의 권리 등에 대한 동의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2009년에 비해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0.06포인트 증가) 뿐이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2009년도 ICCS 조사결과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측정을 위해서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청소년들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지역 비율 표집을 통해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의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문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 ICCS 척도의 정의-행동 영역 문항들이었다. 이 조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로 기술하였으며, 여기서는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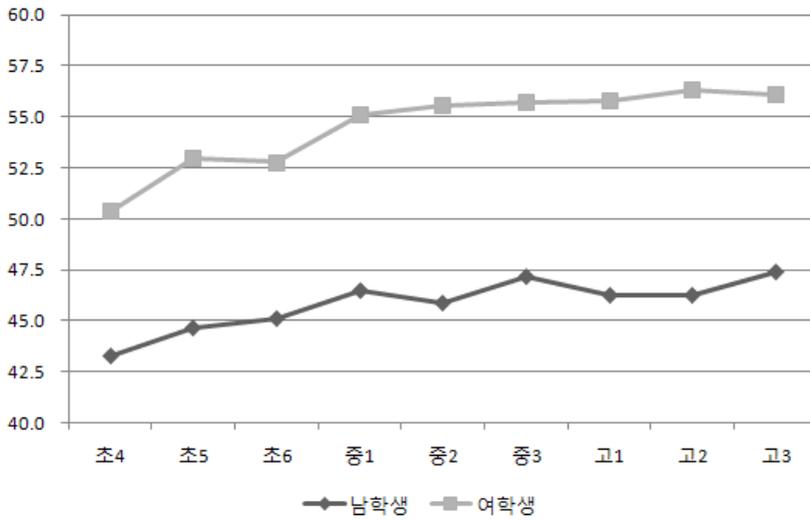
1) 아동·청소년의 가치신념과 태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민주시민적 태도의 차이였다. 상위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소득격차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4명 가운데 1명은 소득격차 해소가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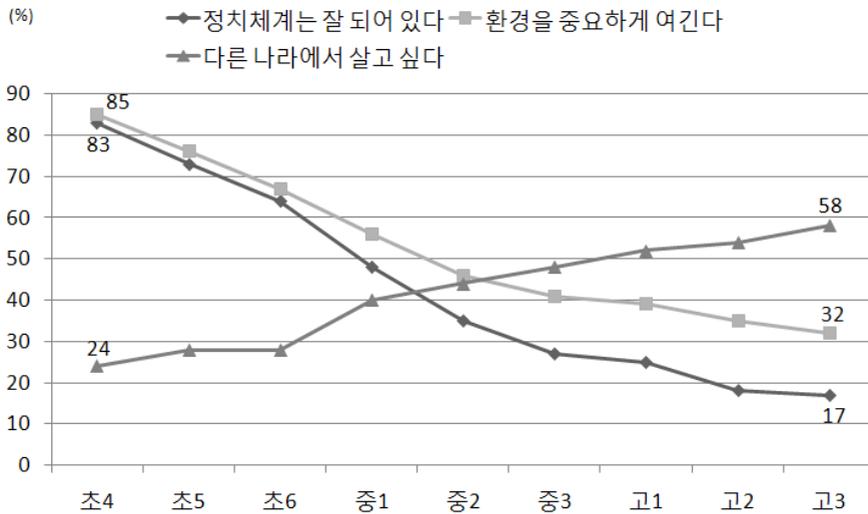
【그림 V-26】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소득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평등(성평등, 인종평등, 이민자평등)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여, 성평등 의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뚜렷이 낮았으며, 부모 학력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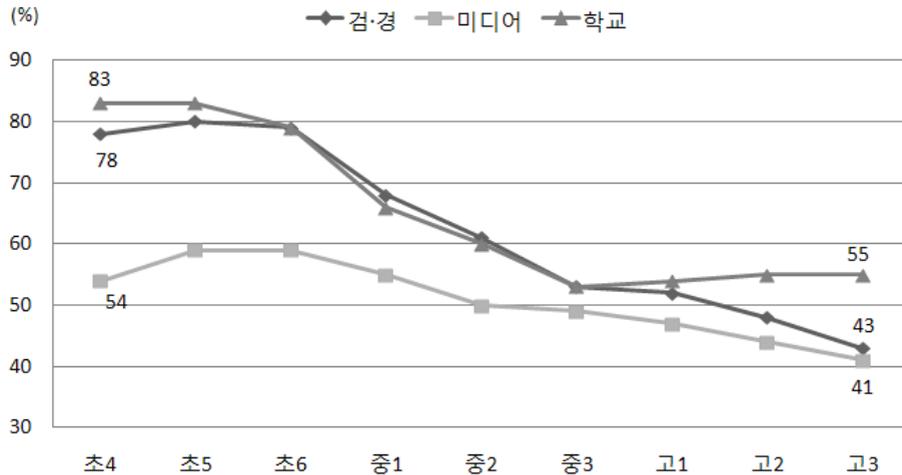
【그림 V-27】 학년별 성평등 의식의 남녀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애착 정도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83%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7%만이 같은 대답을 하였고 초등학생은 27%가, 중고등학생들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그림 V-28】 학년별 국가에 대한 애착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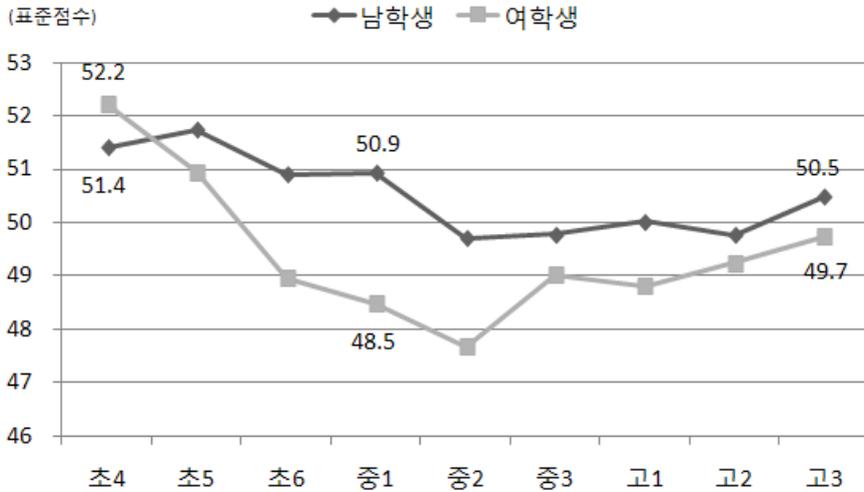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3대 헌법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정도였으나 입법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7%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절반이상은 학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29】 학년별 공공기관(검·경찰, 미디어, 학교)에 대한 신뢰

2)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스스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해당하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나 시민적 참여가 가능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을 의미하는 시민적 자아효능감이 여학생들은 고등학생 시기에 향상되는 반면 남학생들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0】 학년별 시민적 자아 효능감에서의 남녀 차이

청소년들의 교내 활동 참여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학업성적에 따른 격차가 뚜렷해서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의지는 투표 행위나 평화적인 항의 집회에 대해서는 높았으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경 특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참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3)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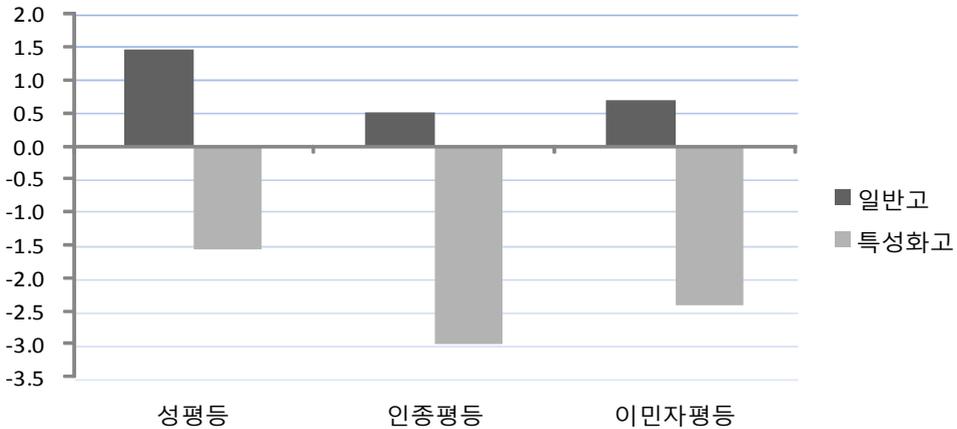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밖 시민단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시민성 수준이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과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들 사이의 투표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의지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항의 행위의 참여 의지는 시민성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학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치사회적인 관심과 정치적 자기 확신이 있는 학생들은 현실 참여적인 성향이 강하며, 반대로 낮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현실적인 참여 행위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능감이 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참여 행위에 대한 의지도 약했다.

표 V-41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 (%)

		학급토론	학교운영 의사결정	학생회 토론
내적인 정치 효능감 (백분위)	25%	46	24	22
	50%	59	35	29
	75%	69	47	40
	100%	78	56	52
	F값(유의도)	198.05(0.000)	195.23(0.000)	179.25(0.000)
	Effect Size	0.06	0.06	0.05
시민적 자아 효능감 (백분위)	25%	44	30	23
	50%	59	41	30
	75%	59	46	33
	100%	71	57	42
	F값(유의도)	84.41(0.000)	85.41(0.000)	43.76(0.000)
	Effect Size	0.04	0.04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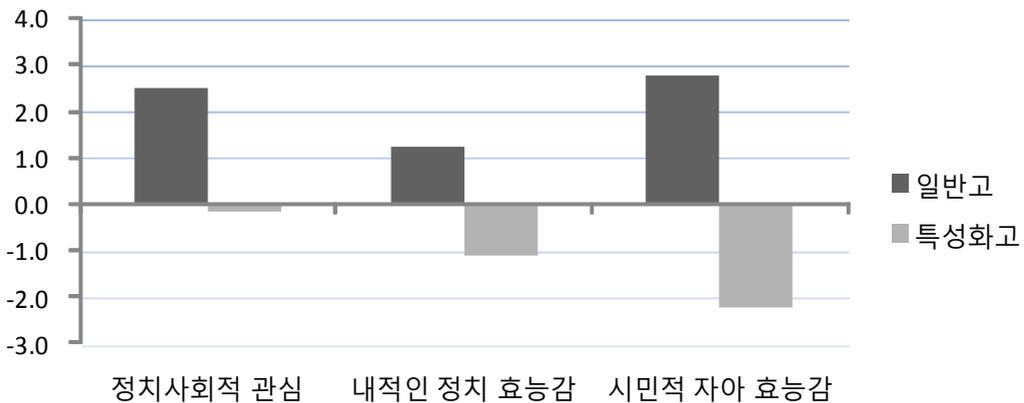
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비교

본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였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보다도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종과 이민자 평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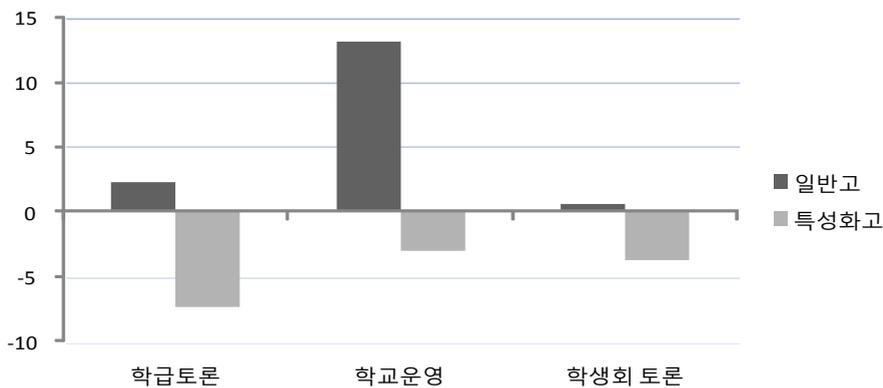
【그림 V-31】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평등 의식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적 신념에 있어서도 특성화고(실업계고) 학생들은 중학생들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내적인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약 2.5점정도 높았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내적인 정치 효능감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민적 자아 효능감이다. 일반고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은 중학생들에 비해 2.8점이 높았으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오히려 2.3점이 낮았다. 결국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5점 이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유형에 따른 이러한 사회심리적 태도에서의 차이는, 미래에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에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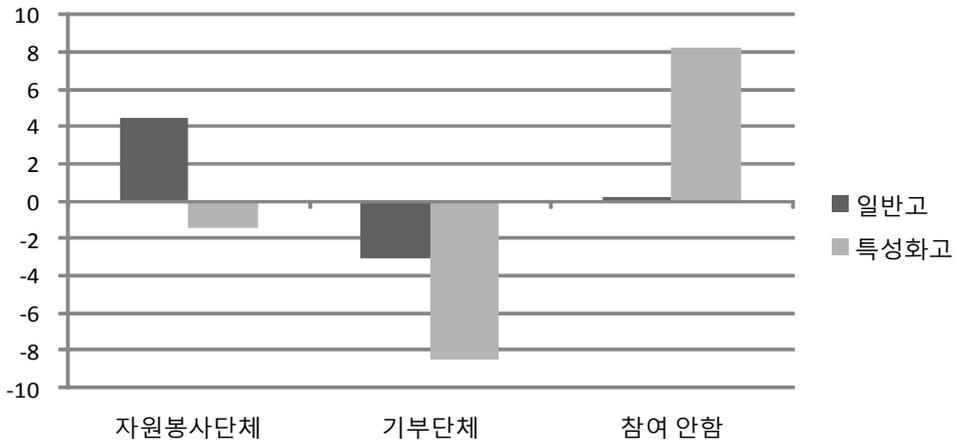
【그림 V-32】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정치적 관심과 자기 신념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모든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밖 시민단체의 참여 경험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대적 참여율은 낮았다. 특히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에서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차이는 15%가 넘었다. 심리적인 측면보다 실제적인 측면의 시민역량에서 학교유형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모든 학내 참여 활동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낮은 참여 활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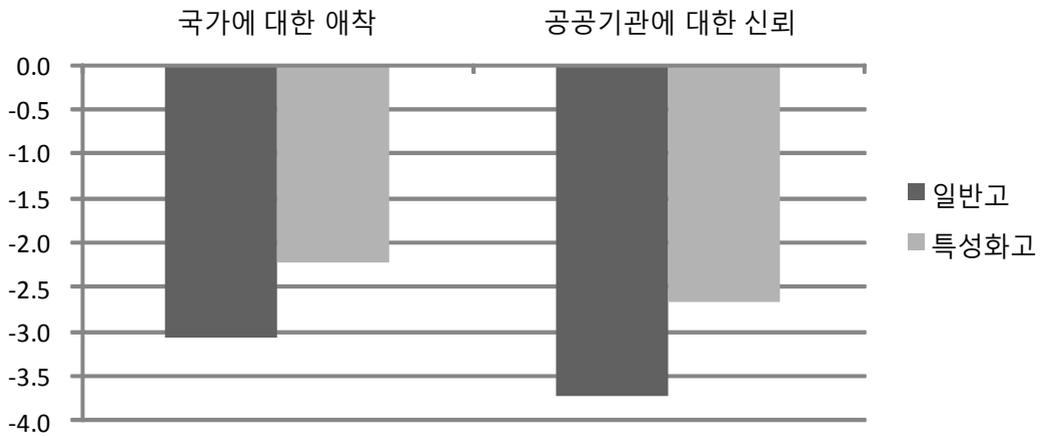
【그림 V-33】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내 학생활동 참여율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시민단체의 참여 경험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대적 참여율은 낮았다. 【그림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학년이 오르면서 증가하는 경향(〈표 III-11〉참조)이 있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중학생들 보다 낮았다. 이들은 기부단체 참여 경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어떠한 단체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중학생 혹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8%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림 V-3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하락하였으나 하락의 경향은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고에서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낮은 신뢰도는 일반고 학생들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35】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는 학년별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표 III-23>은 학년별로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애국심을 비교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오르면서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반고 1학년 학생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치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이지만 3학년 학생들은 13%로 하락한다. 반면 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은 33%이고 3학년 학생들은 23%로 하락했지만 2학년 학생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았다. 한편, 일반고와 특성화고간의 차이는 학년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42 학년별 학교 유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애착 정도 비교, (%)

	정치체계가 잘 되어 있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일반고(A)	특성화고(B)	B-A	일반고(A)	특성화고(B)	B-A	일반고(A)	특성화고(B)	B-A
1학년	20	33	13	33	50	17	55	48	-7
2학년	17	20	3	32	41	9	58	48	-10
3학년	13	23	10	26	43	17	61	54	-7

5. 결과 요약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CCS 문항의 분류체계와 타당도 분석 결과

분류체계와 타당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이들 문항이 ICCS가 의도한 영역의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는 ICCS 조사결과의 문화간 타당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역량의 개념체계와 IEA에서 전제된 개념체계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민 참여에 관련된 문항 중에서 불일치한 문항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시민 참여의 원칙을 투표와 같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고려하려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의 원리 문항 중에서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다문화 포용성 관련 문항의 분류가 가장 불일치 했는데 이는 사회의 개방성과 민주주의의 원칙간의 관계에 대해 ICCS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개념 사이에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타당도 평가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그리고 독점의 문제를 다룬 문항들이 가장 낮은 타당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및 독점 제한의 중요성이 가장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의-행동 영역 문항의 타당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시민운동 단체나 사회참여 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민주시민역량의 유형분류와 국가간 비교분석

요인추출과 군집분석 방법으로 시민역량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시민역량에 있어서 ICCS 2009에 참여한 각국의 청소년들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인지영역 지수와 정의-행동 영역 지수가 모두 높은 유형(조용한 참여자)이 존재하는 반면, 인지영역 지수에 비해서 정의-행동영역 지수는 낮은 유형(정치적 소외자)도 존재했다. 이 유형의 분포는 각 국가의 민주시민역량 지수의 특성을 이해하기에도 유용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시민역량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고 참여의사도 적은 ‘정치적 소외자’ 유형과 ‘조용한 참여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국가에서 정치와 사회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집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단 우리나라는 시민지식수준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 총체적 불만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시민지식 평균이 낮은 도미니카(36개국 중 36위), 태국(32위), 인도네시아(34위)에서는 종교적 시민과 낙천적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국가에서 그나마 시민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주류집단이 바로 종교적 시민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낙천적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은 ‘총체적 불만자’ 들로 이들은 지식도 신뢰도 자신감이나 의지도 모두 낮았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소외자’ 를 ‘조용한 참여자’ 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교육이 필요하며, 민주시민 지식수준은 낮으면서 정치적인 참여의지는 강한 ‘봉건적 참여자’ 들을 최소한 평균이상 수준의 민주시민지식을 갖춘 ‘종교적 참여자’ 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시민역량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

2009년도 ICCS 조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척도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정의-행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향상된 지표와 하락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참여의 경향, 학교 내외에서의 참여 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아졌다. 또한 정치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응답과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응답도 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투표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크게 감소했고,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의지도 감소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향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향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도 퇴보했다. 특히 폭력적인 향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학교 내외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내외의 시민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역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2011년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결과

ICCS의 정의-행동 척도를 이용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시민역량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높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성평등 의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혹은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서도 더 높은 공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

릿하게 나타났다. 애국심, 공공 신뢰, 국가에 대한 애착 등이 모두 낮아졌다. 또한 시민성 및 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도는 실제 참여 행위 및 미래의 행위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행위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참여에 대한 자기 확신은 실제 참여 행위와 성인이 되었을 때 참여할 의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고) 학생간에 시민역량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시민적 태도와 행동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학생들과 비교해도 시민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특성화고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 6 장

정 책 제 언

1.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 현상
대응정책 마련
2. 실천적 민주시민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
3. 합법적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방안
4. 한국형 민주시민역량척도 개발 및
관련 연구 추진

제 6 장 정 책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 현상 대응정책 마련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이다. 민주시민역량의 불균형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는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간의 불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은 지식 부문에서는 매우 우수하나 정의-행동 영역에서는 결여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원인은 역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민주적 풍토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불균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된 민주시민역량의 양극화 현상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ICCS 조사에 참여한 38개국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민주시민역량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분석 결과, 지식수준과 정의-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반면, 이 두 영역 모두 심각하게 낮은 청소년들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고등학생이라도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실업계고) 학생 간에 시민역량의 차이가 매우 커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도 시민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총체적 불만자’ 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실태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이들 총체적 불만자들은 주로 특성화고교(실업계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민주시민역량 측면에서 특성화고교 재학 청소년들이 취약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의 환경적 요소들이 민주시민역량의 저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환경 요소에서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근대국가를 형성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국민교육이었다. 국민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가치관과 태도와 이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다. 그리고 근대화가 완료된 시점에서 국민교육의 가치는 퇴색했다. 현재는 국민교육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한 시민사회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국민교육일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국민교육은 제 2의 국가주의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모든 시민들이 아동·청소년기에 공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의 국민교육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념의 차이 문제라고 이해하기까지 한다. 강영혜(2011)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홀륭한 공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두고 학교 안과 학교 밖 시민사회 간, 학교 안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및 나이 든 교사와 젊은 교사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p. 3). 그러나 사실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세우거나 합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항목에 가깝다. ICCS에서 개인의 권리나 공공기관의 책무 등에 관련한 문항들을 정·오답 형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문항의 내용들이 문화나 입장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기본소양이라는 전제에 38개 참여국 전문가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이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원칙과 실제 사회에서 적용되는 원칙 간의 괴리가 클수록 청소년들은 따라서 공교육 체제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책무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개인들에게는 어떤 태도와 지식과 신념이 필요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부여된 임무일 것이다.

2. 실천적 민주시민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

2011년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또 다른 우려할만한 요소는 민주시민역량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키우는 데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문서인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었음에도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실천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입시교육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학교의 수업에서는 특정 사회문제를 자신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생각하고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으며, 대신 압축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강영혜, 2011, p.3).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청소년들 전체의 민주시민역량도 저하되거나 퇴보하는 양상이 우려된다. 실제로 2009년과 2011년의 결과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정치적 항의 의사는 감소한 반면, 비합법적인 항의에 참여할 의사는 증가했으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신념도 퇴보했다. 특히 폭력적인 항의에 반대하는 비율도 낮아졌고, 좋은 시민이 되려는 청소년들의 의지도 감소했다. 가치와 신념 단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은 향후 사회정치적 불안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우선은 차년도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09년과 같은 수준의 민주시민역량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지표들은 그 지표의 하락이 의미하는 것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의 민주시민역량의 퇴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적 시민사회의 퇴보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안정된 시민사회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함몰된 봉건적이고 위험한 사회로 전락하느냐는 어찌면 청소년 세대의 민주시민역량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적 지식의 실천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과 교과는 민주시민역량을 실천할 현장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교육이 새로운 독립 교과목으로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영국의 사례처럼 시민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단체나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과정 안에서 실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관 지어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의-행동 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은 이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한 체험과 신념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적 참여와 표현을 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합법적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방안

1) 청소년 특별회의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강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에서 발견된 또 다른 양상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의 기회나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정치참여의 의지가 감소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정치참여의 욕구가 증가하는 위험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우선 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므로 선거권이 있건 없건,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령 아동과 청소년 수준에서의 정치참여는 여론형성에의 참여, 캠페인, 집회 참여, 의견 개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입시 같은 사안을 놓고 청소년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정치 문해 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와 대표성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2004년 시범개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선발된 대표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김기현 외, 2011). 현재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청소년 357명, 전문가 56명 등 총 413명이 참여하여 6월~10월까지 16개 시·도 지역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부문 53개의 세부정책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학계, 정계, 단체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협력강화를 통해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였고, 5년간(05년~09년)의 정책세부추진과제를 모니터링하여 146개 과제 중 130개 과제의 이행을 확인하는 등 정책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특별회의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학계, 정계, 단체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로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채택의 심의·의결 기능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특별회의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특별회의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의 정책반영률과 시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의 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31 과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 (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92.4%

* 자료: 여성가족부(2011)

또한 청소년특별회의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별회의 자체의 인지도도 높지 않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선정과정도 주로 청소년 기관장이나 일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소년 특별회의가 실제 모든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소년참여를 중앙까지 이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의 연계성 강화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 특별회의가 중앙의 대표회의라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지역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0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338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295개 시설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4,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 특별회의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여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정부부처별로 운영중인 국민제안, 청소년 참여포털(withyouth.go.kr), SNS(특별회의 facebook) 등도 청소년의 합법적 정치참여를 위한 온라인 창구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기존의 청소년 단체들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제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청소년 특별회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그 의결절차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2) 청소년 투표권의 확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공적 정치참여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투표연령은 만 19세로서 대다수의 OECD 가입국 표준인 만 18세보다 1년 더 많다. 따라서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18세라는 연령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판단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이고, 공교육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역량의 습득임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투표권 연령제한의 조정은 시민으로서의 투표가 바로 자신의 권한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자각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체계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리라 기대된다.

표 VI-2 세계 각국의 투표권 부여 연령현황

연령	국가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임의적), 소말리아	5개국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4개국	
18세	아시아(18)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홍콩,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144개국
	중동(7)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터키, 예멘	
	아프리카(35)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잔지바르	
	유럽(39)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안도라,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중남북미(32)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13)	호주,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투발루, 바누아투,		
19세	대한민국	1개국	
20세	아르헨티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기니, 일본, 요르단,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나우루, 페루, 필리핀, 폴란드, 세네갈, 대만, 토고, 튀니지, 짐바브웨	24개국	
21세	싱가포르, 쿠웨이트, 통가, 사모아, 피지, 몰디브, 바레인, 가봉, 파키스탄	9개국	

*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4. 한국형 민주시민역량 척도의 개발 및 관련 연구 추진

2009년 ICCS 척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조와 IEA의 그것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원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고, 국제비교연구 자체도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의 고유한 시민성과 정서를 국제적인 비교조사 체계에 반영시키기는 커녕, 우리 학계 내에서조차 제대로 발굴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가령 한국사회에서만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노인공경이나 충효사상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중요한 시민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또 시민성 척도는 현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정체성 등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 관련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확대 및 세분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설정했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현황조사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함의와 투표권을 포함 실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면 본 조사의 경우에는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대학생(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미래에 정치 참여 의지가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의지와 실제 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9년도 ICCS 조사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용 문항과 중·고등학교용 조사문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ICCS 조사결과와의 비교 및 연령집단별 비교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채용할 수 있는 가장 논란이 적은 방법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초등학교용 문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교사들에 의해서 평가되었던 일부 문항을 제외하는 정도의 조정만을 거쳤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능력검사가 아니라 정의-태도 문항의 경우에는 각 조사 연령집단에 적합하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생 집단을 포함시키는 경우, 중·고등학교용 문항과 대학생 문항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인기의 민주시민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시민역량 지표가 성인기의 민주시민참여를 얼마나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기초로 삼았던 ICCS는 조사를 주관한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연구목적이 민주시민교육의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시민역량이라는 개념의 가치와 의미를 고려한다면, 연구를 통해 측정된 민주시민역량 지표들이 실제로 미래의 정치참여 행동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민주시민역량 지표의 타당도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정치참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민주시민역량 지표를 선별하여 민주시민역량 지표를 축약하거나 모듈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설계하여 청소년기의 지표와 성인기의 행동간의 관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국립교육연구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한국도 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단 연구와 횡단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를 깊어지게 될 미래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담 연구 기관 및 연구자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혜 · 양승실 · 유성상 · 박현정 (2011). 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 · 주용완 · 나은아 · 김미향 · 황혜선 (2009). 2009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김원태 (2005). 주요 외국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은경 (2003). 유럽연합시민권의 법적 개념과 의미. 유럽연구 17(여름). pp.305-326.
- 김태준 · 김태준 · 설규주 · 이기홍 · 조영하 · 반재천 · 우명숙 · 윤일성 · 윤혜경 · 장근영 (2009). IEA 시민교육 국제 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한국적 시민교육 전략모형 개발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태준 · 윤혜경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Ⅰ: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동연구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신수연 (2009).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민석 · 송태수 (2010). 독일 통일 20년 - 사회 · 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 pp.3-34.
- 유병규, 김동열 (2011). 한국중산층의 구조적변화: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HRI Weekly Economic review.
- 이명희 (2000). 사회과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영란 · 김태준 · 조영하 · 박희봉 · 양정호 (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CER (2010a).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ICC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ACER (2010b). *Students' civic knowledge: NRC review vers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Amadeo, J., Torney-Purta, J., Lehmann, R., Husfeldt, V., &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n IEA study of upper secondary students in sixteen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Baldi, S., Perie, M., Skidmore, D., Greenberg, E., Hahn, C., & Nelson, D., (2001). What Democracy Means to Ninth-Graders: U.S.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IEA Civic Education Study,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 Birzea, C., Kerr, D., Mikkelsen, R., Pol, M., Froumin, I., Losito, B., & Sardoc, M. (2004). *All European study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policie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Bronfenbrenner, U. (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In N. Bolger, C. Caspi, G. Downey, and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pp. 25-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gan, J. J. (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 Concil of Europe (2002).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 Connell, P. J., Crewe, I. M., & Searing, D. D. (1991). The nature of citizenship

-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Empirical comments on theoretical themes. *Journal of Politics*, Vol. 53, pp. 800–832.
- Conover, P. J., & Searing, D. D.(2000). A political socialization perspective. In L. M. McDonnell, P. M., Timpane and R. Benjamin (Eds.), *Rediscovering the democratic purposes of education (pp. 91–124)*.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Cox, C., Jaramillo, R., & Reimers, F. (2005).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the Americas: An agenda for action*.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Cric, B. (2000). *Essays on Citizenship*, London, Continuum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 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schools White Paper 2010*.
- European Commission (2005). *Citizen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Eurydice.
- FEFC (2002). *Citizenship for 16–19 year olds In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UK.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22 No. 1, pp. 7–20.
- Hahn, Carole L. (2010). Comparative civic education research :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Vol. 6 No. 1, pp. 5–23.
- Harber, C. (2005) Reflections on the new conservatisms, *Educational Review*, Vol. 57 No. 3, pp. 295–297.
- Hebert, Y. & Wilkinson, L.(2002). The Citizenship Debates: Conceptual, Policy, and Experimental, and Educational Issues. In Y. Hebert (Ed.), *Citizenship in Transformation in Canada (pp. 3–3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Janoski, T.(1998).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A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liberal, traditional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ating, A., Kerr, D., Benton, T., Munday, E., & Lopes, J. (2010).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2001– 2010 : young people's practic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The eight and final report from the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CELS)*. Research Report DFE-PR059. Department for Education.
- Keating, A., Kerr, D., Lopes, J., Fetherstone, G., & Benton, T. (2009). Embedding Citizenship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 England(2002–08)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venth Annual Report*. Research Report DCSF--PR172.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Kerr, D., Sturman, L., Schulz, W., Burge, B. (2010) *ICCS 2009 European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tudents in 24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Amsterdam, The Netherlands.
- Kisby, B. & Sloam, J. (2009). Revitalising Democracy : Civic Educ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2009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resended paper*. Canada.
- Lave, J. &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llister, I.(1999). The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ment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s (pp.188–2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OECD (2006). Society at a Glance.
- Owen, D. (2011). Civic Education and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German–American Conference, *"Comparisons of Parliamentary and Coordinated Power Systems"*, presented paper. Indiana.

- Palfrey, J. & Gasser, U. (2010). *Born Digital: Understanding the First Generation of Digital Native*, Basic Books.
- Park, S.Y. (2007). *The provi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NGOs : case studies from England and South Korea*.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 Pasek, J., Feldman, L., Romer, D. & Jamieson, K. (2008). Schools as Incubator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Building Long-term Political Efficacy with Civic Educ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12 No. 1*, pp. 236–37.
- Pitiyanuwat, S., & Sujiva, S.(2005). *Civic Education in Thailand*.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uthority(QCDA) (2010). *Citizenship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3*.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uthority(QCDA) (2010).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May).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August).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e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Wenger, E.(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gos, G.(2005). *At Issue: Educating for Citizenship*. Canadian Education Association.



부 록

[부 록]

1.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한 설문지

민주시민역량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전문가 자문위원님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역량 문항 타당성 평가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가해주실 문항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조사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의 영역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I. 「민주시민역량 조사」의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시민교육 수준과 위상을 국제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 교육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영역과 태도, 행동영역에서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pool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 영역 80개 문항, 태도/행동 영역 25개 문항이 평가대상입니다.

II. 인지 영역 문항에 대한 영역타당성 조사:

- 인지 영역에 대한 80개의 문항에 대해 각 문항이 4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연구진이 각 문항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영역 구성개념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인지영역의 4가지 하위영역은 ①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②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③ 시민참여 영역, ④ 시민정책성 영역으로 각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지의 서두에 첨부했습니다. 이 구분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체(IEA)의 구성개념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III. 태도/행동 영역 문항에 대한 영역타당성 조사:

- 총 25개의 문항이 태도/행동 영역에 대한 4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진이 각 문항에 대해 전제하고 있는 영역 구성개념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태도/행동 영역의 4가지 하위영역도 IEA의 구성개념을 준용해서 ① 가치 신념 영역, ② 태도 영역, ③ 미래 행동 의도 영역, ④ 실제 행동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지의 서두에 상세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IV. 문항 적절성에 대한 평가

- 모든 문항(인지영역 80문항, 태도/행동영역 25문항)들이 조사대상자들(중고등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해당 문항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신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V. 검토 및 의견 수집 기간

- 검토 의견서는 2011년 7월 25일까지 장근영 jjang@nypire.kr 박수의 susepark@nypire.kr 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궁금하신 점은 연구책임자(장근영, 02-2188-8870 혹은 박수의 02-2188-8837)에게 문의해주시십시오.
- 의견을 보내주시실 때 의견서 하단에 있는 표에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제외입금을 위한 확인용), 주민등록상의 주소,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추진기관: 담당연구자: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근영, 박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인지 영역 문항 영역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인지영역 가운데 검토대상 문항 수는 총 80문항입니다.
- 타당성은 제시된 문항이 인지 영역에 대한 4가지 하위영역(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참여 영역, IV. 시민경제성 영역) 가운데 각 각의 문항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 1. IEA의 민주시민의식 인지영역 구성체계

인지영역	내용구분			
	I. 시민사회와 시스템	II. 시민공동체원리	III. 시민참여	IV. 시민경제성
인지영역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들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이 공동체에 할 기본적인 역할과 가치들	공동체에 시민으로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 능력과 가치들	개별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 능력과 가치들

* 각 영역의 자세한 구성개념은 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문항의 **영역타당성**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다음 페이지의 「인지 영역에 대한 4가지 평가영역의 하위항목표」를 이용하여 각 질문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위 항목」 확인
 - 2단계 : 그 하위항목을 포함하는 상위의 평가영역 확인
 - 3단계 : 각 문제 하단에 있는 [전문가 의견]란에 있는 4가지 평가영역 가운데 해당하 는 영역에

적절성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 이유를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 * **적절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 ① 각 질문이 조사대상자(중1 ~ 고3)이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② 각 질문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기술되어 있는가?
 - ③ 각 질문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성 혹은 시민교육과 관련되어 적절한가?
 - ④ 위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 의견

작성의 예

E1. 신문은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왜 매일 인쇄될까요?

-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일 신문을 인쇄하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신문기자들이 그들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 내는 것을 막기 위하여
- 소식은 항상 변화하며 세롭게 생겨나므로
- 독자들이 신문기사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제0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경제성 영역
<input type="radio"/>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십시오]			
적합 / 부적합			

* 이 <문제 E1>은 시민사회에서 '인문'이라는 구성체가 운영되는 원칙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ISSC:2009의 인지 영역에 대한 4가지 평가영역의 하위 항목」에 있는 하위 항목 "책무"와 관련이 있음.

* "책무"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영역은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이므로 해당란에 를 표기함.

인지 영역에 대한 4가지 평가영역의 구성개념

하위 항목	내 용
권력/권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그들을 위해 만드는 조직체나 개인들이 가진 권한 혹은 능력의 본질과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
규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에 대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침 규칙은 국가에 의해 강제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강제되지 않는 지침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지침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국가 하위 조직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기본 규칙 혹은 기본법
행정/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정책 및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절차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기반과 국가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
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을 지탱하고 협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과정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협상의 이용과 그 필요성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들이 자신의 의무 수행과 권력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답변해야 할 필요성 책무성은 대표자들이 그들의 신분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러한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 민주주의란 사람에게 의한 지배"라는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유용 이 정의는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을 지탱하고 인권의 존중과 신장을 보증하는 자유, 평등, 사회 통합의 원리들을 모두 의미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법의 민주주의, 체제(의회)와 직접 민주주의, 체계(지역)의 공동체 또는 학교 기구와 같은 조직) 모두가 민주적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음
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국가가 자국을 제외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궁극적 힘을 가진다는 권리 주장 이것 때문에 국제 조직, 협정, 조약이 작동하고 실행될 수 있음
국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대화와 안정을 위해 국민들 사이에 모종의 통합된 국가 정체감을 건설하는 과정 국민 형성은 신생 독립국에 한정되어 한정되어 관련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
민주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국가라도 국민성 혹은 시민성의 별개 연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이 개념은 두국적성의 원인과 결과를 포함
정치권/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상황에서 선거할 권리, 책임, 그리고 기대감을 의미 경제 선거, 자발적 선거, 비필 투표제 등 투표과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더 폭넓게 지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를 조정하는 시스템과 산업 규제, 무역, 관세, 사회 복지를 포함하는 내용
복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연금,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같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전을 유지하는 정부 의 역할
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해 체결된 구속력 있는 협정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하위 항목	내 용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요인들에는 환경 보호, 경제 개발, 사회적 평등, 사회 정의가 있음 상동, 존, 정보, 사립의 국제적 이동 증가와 이러한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 조직, 법적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 조약에서는 세계화의 정의, 지리, 존재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국제적 논쟁을 인정 세계화는 합성물이 고려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평가 불에 포함되며, 이러한 정의는 세계화의 장점 또는 존재에 관한 신념을 말하는 것은 아님
<h3>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의 구성개념</h3>	
공공신념/시민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와 공동체 행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증진하는 것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교육체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자격의 형태는 UN 세계인권선언(1948)의 내용에 정의되어 있음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타인의 역할이나 관점을 수용하는 것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
사회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안에서 이익과 불이익의 배분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동할 책임을 지닌다는 개념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특징(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
<h3>III. 시민참여 영역의 구성개념</h3>	
하위 항목	내 용
권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공동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이익을 얻고, 그러므로 시민 공동체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권의 행사를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시민의 자기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들이 시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는 개인들의 판단
행동/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협력할 때 공동체는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개념 (이러한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있음을 허용)
협상/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이점의 평화적 해결은 공동체의 부지에 필수적이며, 협상이 해결책을 도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개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인 참여를 위해 공동체 안의 이슈와 정보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

IV. 시민경제성 영역의 구성개념	
하위 항목	내용
시민 지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 • 이 개념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시니컬 역할의 본성과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동태를 포함
다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과 지반성의 범위에 대한 개인의 의식 • 위의 정의는 개인의 역할과 지반성의 본성이 개별적인 각각의 공동체가 인정된 맥락에 의거하며 변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포함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공동체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점들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개인의 지각
문화/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들이 자신의 공민적 삶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서 표재하는 문화의 가치와 장소에 대한 감각
애국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헌신 혹은 사랑 • 이것은 개인이 국가를 지병하라는 의지로 이어짐
국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심을 국민의 정체성이 사회적 정치적 원리에 우선한다는 견해에 기초한 원리를 품은 프로그램으로 정치화하는 것
시민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내에서 시민 공동체와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윤리적, 도덕적 신념

인지 영역 문항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본조사 문항 시작]

아래의 스티커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스티커에 있는 그림들은 세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이 스티커는 영어 단어인 coexist(공존)처럼 여러 상징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다.



<문제1> 이 스티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이한 사고방식들이라도 결국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2)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3)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질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4) 세상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 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많은 나라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같은 미디어(media)는 기업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사업체가 소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문제2> 이 같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미디어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
- 2) 대중의 미디어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 3) 정부에 관한 보도에 충분한 수의 언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 4) 미디어에 의한 다양한 관점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3~4> ○○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집단이 있다. 그 소수집단은 그들 자신의 전통언어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를 가지고 있다. ○○나라의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가 그 나라의 공식 언어만을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결정이 소수집단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문제3> 다음 중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1) 집에서 그들 전통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학생들에게 학교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3) 학생들에게 지역공동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4) 학생들이 집에서 그들의 전통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 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3>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1) 학교 교과목은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한다.
- 2) 정부는 한 개 이상의 공식 언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 3) 정부는 소수 집단의 문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 4) 소수 집단의 아이들은 공식적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문제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공적 논쟁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교환한다. 공적 논쟁은 신문, 텔레비전 쇼, 라디오 송담, 인터넷 공개 토론, 공개 만남의 형식을 취한다.

공적 논쟁은 지역 문제나 국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문제5> 공적 논쟁은 어떤 면에서 사회에 유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1. _____
2. _____

[문제 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세요]			
적합 / 부적합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서 그 법을 집행한다.

<문제6>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입니까

- 1) 이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합니다.
- 2) 이 시스템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업무를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게 합니다.
- 3) 이 시스템은 법원에서 그 법이 집행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4)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균립할 수 없게 합니다.

[문제 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세요]			
적합 / 부적합			

<문제 7><8> 철수는 새 신발을 샀다. 그런데 철수는 어린 아이들을 고용해서 인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그 신발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철수는 다시는 그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문제 7> 철수가 새 신발을 사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들이 만든 신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2) 그 신발 회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3) 그 신발을 만든 아이들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4) 실제 가격보다 비싼 신발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문제 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세요]			
적합 / 부적합			

<문제 8> 철수는 다른 사람들도 그 회사의 신발을 사지 않도록 하고 싶다. 철수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어느 누구도 신발을 살 수 없도록 스스로 모든 신발을 삼니다.
- 2) 가게에 신발을 돌려주고 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3)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가게의 입구를 막습니다.
- 4) 그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문제 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9>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부활동과 결정사항, 그리고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부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9> 사람들이 정부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정부의 정책결정을 사람들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3) 정부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4) 정부의 정책결정을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0>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부 기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정부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기밀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1) 의료비통계
- 2) 국가방위계획
- 3) 이민자수
- 4) 외국 대사들의 이름

[문제 1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1~12> 민홍이와 권우는 실시예정인 선거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민홍: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 나는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권우: "나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말하진 않았지만, 너에게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말해 주겠어."

- <문제 11> 사람들이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1)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이 투표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서 제시한 모든 정책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투표할 지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1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 <문제 12> 민홍이는 어느 후보자에 투표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권우가 알려진 정보만을 이용해야 할까요?
 1) 예, 그들은 친구이고, 권우는 민홍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알기 때문입니다.
 2) 아니요, 권우는 민홍이가 어떤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만족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아니요, 후보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예, 정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문제 1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어떤 집단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장 건립을 원했다. 그 집단이 정부에게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거절했다. 그 집단은 사적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운동장을 건설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운동장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집단에게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민자: "저는 그 집단이 요구했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나리: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 13> 다음 중, 박나리의 의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정부는 지원금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정부는 그들의 대중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만 지역사회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자선들이 사용하는 돈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실할 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부는 지역공동체사업 지원금이 항상 낭비된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 1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역사와 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운다.

<문제 14> 그들 자신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두 가지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1. _____
2. _____

[문제 1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5-16> A 국의 어떤 의류회사는 자국의 공장을 폐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B 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한다.

- <문제 15> B 국에 공장을 여는 것이 B 국 지역주민들에게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1) B 국의 공장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근무 환경이 보장될 것입니다.
2) B 국에서 공장을 여는 것은 B 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3) B 국 사람들은 그 공장으로부터 새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B 국 공장 노동자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 <문제 16> B 국에 공장을 여는 것이 B 국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떤 손해를 입히겠습니까?
1) B 국의 임금이 다른 국가의 임금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질 지도 모릅니다.
2) 다른 회사들은 B 국에 공장을 열지 않게 될 것입니다.
3) 회사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자기 공장에서 만든 옷만을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B 국의 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월급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릅니다.

[문제 1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7>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성인 시민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1) 주요 정당들의 정책 기초 결정
- 2) 국회의원 진출 인원수 결정
- 3) 선거 개표 시기 결정
- 4) 선거 후보 선택

[문제 1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8> 다음에 제시된 행위 가운데 민주주의에 가장 위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어떤 집단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
- 2)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치인에게 사적으로 말하는 행위
- 3) 정부를 비판하는 공적인 연설을 하는 행위
- 4) 일단의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문제 1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9~20> A 시, B 시와 C 시는 동일한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다. A 시와 B 시에 있는 청소년 축구 양 팀 모두에게는 좋은 시설과 여러 코치들이 있다. 그러나 C 시의 청소년 축구팀은 좋은 시설이나 코치가 없다.
 매년 지역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선발은 그 지역의 15 세 미만의 실력 있는 선수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 시 출신 중 단 한명도 지역 청소년 축구대표팀에 선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C 시 출신 축구 선수도 지역 대표팀에 최소한 두 명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다.

- <문제 19> 이러한 규칙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더 많은 도시에서 선수들이 선발될 때에만 지역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는 다른 도시 출신 청소년들과의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 A 시와 B 시 출신 선수들은 함께 경기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C 시 출신 축구 선수들이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1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 <문제 20>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어떻게 C 시 출신의 모든 축구 꿈나무들이 더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1) 그들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더욱 열심히 훈련할 것입니다.
 2) 그들은 전 경기보다 더 잘 매치되어 경기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들은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그들은 지역 청소년 축구팀에 들어갈 만큼 훈련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문제 2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1-22> 정부는 농민 소유의 토지에 밭을 간살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에 대해 농민들이 스스로 매기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농민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 가격을 더 높여 줄 것을 정부 측 대표자에게 요구했다. 그 이후 농민들 중 한 사람이 이 쟁점에 대해 TV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다.

<문제 21>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땅값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데에 TV 인터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TV 방송국은 농민들에게 땅값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2) 정부는 아마도 그 뉴스에 출연한 것에 대해 농부들에게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 3) TV 인터뷰를 본 시청자들은 농민들에게 줄 돈을 정부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 4) TV 인터뷰를 본 시청자들은 농민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문제 2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2>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경제적 이득
- 2) 경제적인 공정성
- 3) 의사표현의 자유
- 4)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문제 2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3-24> 최근에 A 는 간혹에서 선택되었다. 그는 남의 집 물건을 훔치기 때문에 3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출옥 후 A 는 B 라는 사람의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B 는 "A 가 우리 집 물건을 훔칠까봐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와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문제 23> 다음 중 A 가 B 의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A 는 자신의 죄 값을 치렀으므로 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 2) A 가 옆집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3) 만약 주변 사람들이 A 를 잘 대우해 준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A 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B 에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2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4> A 가 옆집에 사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B 는 무엇을 이해해야만 할니까?

- 1) A 의 권리가 그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A 의 권리가 그 자신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B 는 자신과 A 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B 는 자신과 A 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2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십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5~26>

- 나라의 일부 기업들은 쌀 가격에 다른 나라로부터 과잉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 나라의 농민들은 그렇게 쌀 가격을 쌀 가격에 과잉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원성이 높았다. 따라서
-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자국에서 재배한 과일만을 사기로 결정했다.

<문제 25> 자국에서 재배한 과일을 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기술해 보십시오.

1. _____
2. _____
- _____
- _____

[문제 2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십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6> ○나라 농부들의 농업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1) 사람들은 어느 지역 누구에게서나 과일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2) 농민들은 돈을 버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3) 사람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품질 좋은 과일을 구매할 것입니다.
- 4) 농민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쌀 가격을 쌀 가격에 과잉을 판매하면 됩니다.

[문제 2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강철경: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항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항의에서는 경찰에 맞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홍건우: “저는 그 방법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항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문제 28> 다음 중 홍건우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 1) 항의가 폭력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항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 2) 만약 우리 항의가 폭력적이려면 인본 매체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 3) 항의자들이 경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4) 폭력적인 항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2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최소년 클럽 회원들이 리더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어느 회원이 리더가 되려고 자청했지만, 클럽 회원들은 리더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 27> 자청해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투표에 의해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만약 그들이 투표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재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투표는 리더 선출에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 3) 리더 선출에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리더 선출에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2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전기를 만든는데 필요한 석탄과 같은 연료의 사용은 전 세계 환경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

<문제 29> 환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1)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
- 2) 전 세계 사람들
- 3)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석탄을 사용해 왔던 나라에 사는 사람들
- 4)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문제 2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책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유권환경회의의 고문인 사람들에게 세계 환경에 대해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에 참여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제 30> 그 고문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 1) 각 국가의 정부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환경은 반드시 개선될 것입니다.
- 2) 환경 개선에 개인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환경 훼손은 주로 지역공동체의 잘못입니다.
- 4) 유엔은 환경 개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문제 3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책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지역 학교의 한 교사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그 교사는 칠판에 토론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을 썼다.

규칙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 할 것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도 조롱하지 말 것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을 줄 것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을 것

<문제 31> 이러한 규칙은 토론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 2)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 3) 학생 모두가 서로 동의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 4) 모든 학생이 학급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문제 3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안했다.

“선배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싸움이든 멈추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명의 후배 학생들은 이 규칙에 찬성투표를 하였고, 7 명의 선배 학생들은 반대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투표 결과에 따라 제안된 규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문제 32> 어떤 면에서 이 결정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1) 학생들 싸움의 대부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다수의 학생들이 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3) 모든 학생들이 그 규칙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3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32번의 연장)

투표 후에 교사는 말했다. “너희들의 결정이 민주적이더라도 그 규칙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

- <문제 33> 다음 진술 중 그 규칙의 불공정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싸움을 멈추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든 학생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 선배들은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 일부 학생들은 싸움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 4) 선배 학생들은 싸움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3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34-36>>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해 부담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의 불만사항들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 이를 시민고충처리기관이라 부른다.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업무와 결정 사항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 <문제 34> 왜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 1) 국민들의 불만 사항들에 대한 비밀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이 내린 결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불평만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 4) 시민고충처리기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3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시민고충처리기관에 무료로 불만사항들을 표출합니다.

- <문제 35> 국민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 1) 시민고충처리기관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 2) 사람들이 시민고충처리기관의 결정이 올바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누구나 시민고충처리기관에 불만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시민고충처리기관의 직원들이 불만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3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36> 시민고충처리기관이 정부에게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 1)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 2) 굳이 정부가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 3) 정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정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 3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37> 다음 중 어느 것이 세계인권선언에서의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까?

- 1) 가난하다면 타인의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리
- 2) 일할 권리
- 3)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살 권리
- 4)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서 살 권리

[문제 3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이느 지역의 종교 단체는 돌로 나눠이겨 있다. 양쪽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종교 단체의 지도자는 양쪽이 신념이 달라서 다른 신념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쪽이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문제 38> 그들이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논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익한 이유 두 가지를 기술해 보십시오.

1. _____
2. _____

[문제 3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임원숙씨는 지역환경보호단체의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문제 39> 자신이 그 단체의 지도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임원숙씨가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1) 타인의 비판을 얼마나 잘 피하는가
- 2) 어떻게 그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게 할 수 있는가
- 3) 그녀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얼마나 단체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 4) 단체 모든 구성원들이 그녀에게 항상 동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문제 3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40~41> 한 새로운 집단의 이주민 B 집단이 A 지역에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A 지역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 운동장에서 그들의 전통 축제 중의 하나를 개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A 지역 주민들은 이주민 B 집단이 마을 운동장에서 축제를 거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중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이주민 B 집단에게 축제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린 결정입니다.

<문제 40> 다음 중 A 지역 지도자들이 이주민 B 집단에게 축제를 허용한 결정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A 지역의 다수 집단은 이주민 B 집단의 소망을 수용해야 합니다.
- 2) 모든 집단은 그들의 자신의 문화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다수 집단의 권리는 소수 집단의 권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 4) 다수 집단은 축제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문제 4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41> 다음 중 다수 집단이 축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이주민 B 집단의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 1) 축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다수 집단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 2) 마을 운동장에서 항의 행진을 합니다.
- 3) 마을 운동장에 그들의 문화적 심볼들을 장식합니다.
- 4) 자신들이 축제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수 집단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 4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몇몇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가 의무인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국민투표는 자발적 이다.

<문제 44> 다음 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 2) 모든 사람들이 투표한다면 모든 투표수를 집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3) 지식인만 투표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4) 많은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4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김미라: “투표가 자발적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투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문제 45> 이 의견을 지지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사람들은 투표라는 방법에 의해 그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경우,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4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밀투표 시, 유권자를 깨우는 투표용지에 기입한 다음 봉인된 상자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문제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비밀투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당선되기를 원하는 후보를 투표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2)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할 후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당선된 후보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사람들은 그들이 투표하는 동일한 후보를 다른 사람들도 투표하도록 요구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4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개인이나 집단들은 때때로 정당에 기부금을 낸다. 일부 국가에는 정당들에게 기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문제 47> 이를 국가들이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당이 사용하지 않는 돈을 기부자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2)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정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 3) 더 많은 사람들이 차음력 있는 정당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 4) 정당들이 기부자들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4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1948년에 유엔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에 관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문제 48>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모든 사람
- 2) 18 세 이상의 성인
- 3) 범 위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4)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

[문제 4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49> 언론인들이 뉴스를 자유롭게 조사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왜 중요합니까?

- 1)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 2) 이는 언론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 3) 이는 모든 뉴스 사건들을 보도할 충분한 언론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어떤 언론인도 그가 한 일에 대한 지나친 댓가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문제 4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일부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돈을 지급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50> 실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때만 정부가 돈을 지급한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논리적 근거를 쓰시오.

[문제 5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51~52> 압력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조직이다. 압력 단체들은 정당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지도 않으며, 구성원들이 국회나 입법부에서 활동하도록 하지 않는다. 압력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 정부 관료들과의 만남
- 공식적 혹은 공개적으로 회합을 조직함
- 간행물이나 출판물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알림

압력 단체의 대표적인 유형은 기업연합이나 환경단체 등이 있다.

<문제 51> 압력단체들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정부의 책임 일부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2) 보통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 3) 다른 방식으로는 듣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압력단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 4) 조사와 상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당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합니다.

[문제 5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52> 다음 중 압력단체가 정치적 독립 상태로 유지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1) 압력 단체는 주의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불법적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 2) 압력단체는 그들의 생각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압력 단체는 그들의 광고비를 지불하기 위해 정부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압력 단체는 그들의 관심쟁점사항에 대해 자원을 집중하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문제 5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53-54> 학교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 동아리는 학교운동장에 식물을 재배하기를 원했다. 학교 담장은 그 지역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기준씨가 그 환경동아리에게 조언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 53> 학교가 기준씨에게 조언을 요청한 가장 적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준씨는 학교에 무료로 봉사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기준씨는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원하는 식물들을 사 줄 수 있게 때문입니다.
- 3) 기준씨는 식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학생들보다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기준씨는 식물에 대해 학생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 5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54> 기준씨에게 조언을 부탁할 경우 학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준씨는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조언만 할 수도 있습니다.
- 2) 기준씨는 학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3) 기준씨는 학생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4) 기준씨는 학부모들도 자신의 식물을 구입할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문제 5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55-56>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영화는 볼 수 있고 혹은 볼 수 없는지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를 영화 검열제라고 부른다.

<문제 55> 왜 많은 정부들은 영화검열제도를 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할까요?

- 1) 정부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를 보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 2) 정부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정부는 국민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영화를 보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정부는 국민들이 사회에 유익한 영화만을 보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5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56> 영화김영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부가 영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2) 정부는 그들의 시간을 더 중요한 이슈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영화김영제도는 영화산업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 4) 영화 제작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5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화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일부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문제 57>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 돈을 지급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1. _____
2. _____
- _____
- _____

[문제 5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화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식적 종교 또는 국교라고 인정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몇몇 나라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공식적 종교를 가르치지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58> 공식적인 종교를 가진 이들 국가에서 학교가 그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만 종교적 신앙에 대해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민주주의에 있어서, 성인들만이 종교적 신앙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3)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4) 민주주의에 있어서, 학생들은 항상 그들 부모의 종교적 신앙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5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존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화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다음 그림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 가지 상징이다. 각각의 상징은 흰 바탕에 붉은 색이다. 각각의 상징을 채택한 날짜는 아래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상징들은 전쟁이나 재난 중의 의료진 보호를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864년 - 적십자	1929년 - 적신월사	2006년 - 적상징

<문제 59> 다음 중 국제적십자위원회가 2006년에 새로운 상징으로 적수경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 전의 상징들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2) 이 전의 상징들은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의 상징들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 3) 이 전의 상징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4) 이 전의 상징들은 특정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5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몇몇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 60> 다음 중, 몇몇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들이 투표할 수 없는 이유를 가장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1)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세상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3)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행함으로써 투표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 4)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6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문제 61> 다음 중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수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이유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투표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 권이기 때문입니다.
- 2) 투표는 죄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에 대해 부우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 3) 죄수들은 출옥을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 죄수들은 선거의 결과에 적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 6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2-63> 난민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체류하지만 체류국의 국민은 아닙니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은 전 세계의 난민들을 돕는 조직입니다.

<문제 6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난민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 1)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 2)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 3) 난민들의 안전과 주거지를 보장합니다.
- 4) 난민들에게 정치 단체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문제 6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3> 난민들 모두는 자신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난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 2) 난민들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난민들은 그 국가의 국민과 똑같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난민들은 그 국가의 국민처럼 법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 6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4> 다음 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시민들은 정부예산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3) 시민들은 동일한 정당을 항상 지지해야만 합니다.
- 4) 시민들은 무조건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문제 6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5> 다음 중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편파적인 법에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
- 2) 신문에 게재된 다양한 의견
- 3) 타 후보자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말하는 후보자
- 4)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 지도자들

[문제 6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시민공통체 원리 영역	시민 참여 영역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6>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1)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2) 공장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 3) 노동자들을 위해 근무조건과 급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4) 공정한 임금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 6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채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책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7> 헌법은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

- 1) 주변국가들 간의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2) 입법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 3) 지지자들에 대한 정당들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 4) 정부와 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주요 원칙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 6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채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책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8> 다음 질문은 양의 테스트에서 제시한 질문들과는 다르다. 질문은 세 가지 의견과 한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질문을 읽은 후에 답을 선택하시오.

<문제 68> 다음 진술 중 3 가지는 의견이고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문항은 무엇입니까?

- 1) 여성들이 일할 경우 가족에게 해롭습니다.
- 2)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 3) 여성들은 정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4)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남성들입니다.

[문제 6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통채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책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9> 다음 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에 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공적인 논쟁을 요구하는 것
- 2) 그들이 반대하는 법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
- 3) 시민들에게 정치적 진술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 4) 다른 단체의 사무실을 파괴하는 것

[문제 6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0>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나 국회의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 1)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추진하는 것
- 2) 법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는 것
- 3) 사법부를 감독하는 것
- 4) 법체계를 변호로부터 보호하는 것

[문제 7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어느 신문 기자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를 텔레비전에서 보도하였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문제 71> 신문 기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 1) 직업 선택의 자유
- 2) 공정한 재판
- 3) 거주 이전의 자유
- 4) 언론의 자유

[문제 7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2> 다음 중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무장 경찰들이 종교 성전에 들어가는 것
- 2)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적인 집회를 경찰관이 해산시키는 것
- 3) 정부 건물 폭발계획을 세운 집단의 구성원을 경찰이 체포하는 것
- 4)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문제 7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문제 7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5>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 1) 신진국의 기업들
- 2) 개발도상국가의 기업들
- 3) 국제연합
- 4) 세계은행

[문제 7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6>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 1) 노동조합의 의무적 가입
- 2)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경제규제
- 3) 기업 간 활발한 경쟁
- 4) 모든 사람을 위한 부(富)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3> 다음 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환경을 보호하는 법
- 2) 정부가 많은 기업들을 소유하는 것
- 3) 시민들이 공적인 논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 4)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거의 비판하지 않는 것

[문제 7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4> 다음 중 UN 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1) 학교선택권리
- 2) 정당가입권리
- 3)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 성인과 동일한 봉급을 받을 권리

[문제 7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 <문제 77> 다음 질문은 앞의 테스트에서 제시한 질문들과는 다르다. 질문은 세 가지 의견과 한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질문을 읽은 후에 답을 선택하시오.

<문제 77> 다음 진술 중 3 가지는 사실이고 한 가지는 의견입니다. 다음 중 의견과 관련된 문항은 무엇입니까?

- 1) 모든 나라는 국가(國號)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국제연합은 국가는 아니지만 그들의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모든 사람은 그들 국가의 국기나 국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 4) 국가 소유의 선박은 종종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문제 7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8> 어느 볼케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음 중 그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 1) 자신의 정당에서 다른 정당의 대표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것
- 2)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행진'을 하는 것
- 3)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나오는 국가적인 선거를 치루는 것과 그 날짜에 동의하는 것
- 4)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신문기자에게 말하는 것

[문제 7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9> 다음에 다음에 제시된 국회의원 활동 가운데 가장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는 무엇입니까?

- 1) 최근의 정부지출에 관해 비판적인 연설을 하는 것
- 2) 신문에 게재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 불명하는 것
- 3) 농림부 장관에게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 4) 그들이 선호하는 법을 지지해주는 댓가로 유권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

[문제 7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80>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1)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 2) 국가분쟁을 줄이는 것입니다.
- 3)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4) 신생국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8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시민사회와 시스템 영역	II 시민공동체 원리 영역	III 시민 참여 영역	IV 시민 정체성 영역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태도/행동 영역 문항 영역타당성/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태도/행동 영역의 검토대상 문항 수는 총 25문항입니다.
- 타당성은 제시된 문항이 태도/행동 영역에 대한 4가지 하위영역(Ⅰ. 가치 신념, Ⅱ. 태도, Ⅲ. 미래 행동 의도, Ⅳ. 실제 행동) 가운데 각각의 문항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 1. IEA의 민주시민의식 태도/행동영역 구성체계

태도-행동영역	내용구분			
	I. 가치/신념	II. 태도	III. 미래 행동 의도	IV. 현재의 행동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데에 대한 태도와 별,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태도와 믿음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한 태도와 믿음	앞으로 정인이 되어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믿음	앞으로 정인이 되어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믿음	현재 청소년으로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 각 영역의 자세한 구성개념은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질문지 문항에 대한 영역타당성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계 : 다음 페이지의 「태도/행동 영역에 대한 4가지 평가영역의 하위항목」을 이용하여 각 질문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위 항목」 확인
 - ② 단계 : 그 하위항목을 포함하는 상위의 평가영역 확인
 - ③ 단계 : 각 문제 하단에 있는 [전문가 의견]란에 있는 4가지 평가영역 가운데 해당하는 영역에
- 적절성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 이유를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 적절성 판단의 기준
 - ① 각 질문이 조사대상자(중1~ 고3)이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있는가?
 - ② 각 질문이 한국 상황에 맞게 기술되어 있는가?
 - ③ 각 질문이 청소년들의 시민성 혹은 시민교육과 관련되어 적절한가?

④ 위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 의견

작성의 예

<문제00> 병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해당란에 표하여 주세요)

	전혀 안함	30분미만	0~60분미만	1~2시간미만	2시간 이상
1) TV/비디오/DVD					
2) 숙제/학업공부					
3) 컴퓨터/인터넷사용					
4) 독서					
5) 친구와 전화하기/인터넷으로 채팅하기					
6) 친구와 놀기					

[문제0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 이 <문제00>은 사람들이 매체관련 활동/교우관계 및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질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ISSC:2009의 태도/행동 영역에 대한 4가지 평가영역의 하위 항목」에 있는 하위 항목 「**학생활동의 빈도**」와 관련이 있음.

* 「**학생활동의 빈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영역은 「**IV. 실제 행동 영역**」 이므로 해당란에 를 표기함

태도/행동 영역에 대한 4가지 평가영역의 하위 항목

I. 가치 신념 영역	
하위 항목	내용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에 관한 학생들의 믿음
II. 태도 영역	
하위 항목	내용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직에 대한 관심, 정직과 내적 효능, 시민 자기 효능감, 다른 국민들과의 차이점, 정체성의 위치
타인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권리에 대한 태도,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 이민자 권리에 대한 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
제도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외부 효과, 계도에 대한 믿음, 자신의 국가에 대한 태도, 국가의 성취에 대한 거부감
정책과 생활에 대한 개인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학생 참여에 대한 자신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 시민 참여의 효과에 대한 생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막는 정권에 대한 태도
III. 미래 행동 의도 영역	
하위 항목	내용
시민 자정의 형태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에 저항 운동 참여(서명운동, 저항 행렬 참가, 교통 저지 등에 대한 생각)를 반영
미래의 참여에 대한 행동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행동의 미래 참여(자원 활동, 여론주도, 신문 기고 등에 대한 생각을 반영
미래에 상인의 삶에 대한 참여 행동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와 관련된 참여, 정치 행동, 성인으로서 미래에 정치의 참여에 대한 믿음을 반영(선거에서 투표하기, 적극적인 캠페인, 정당 참여, 후보자 출마 등)
III. 현재 행동 영역	
하위 항목	내용
학생활동의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 소리와 개인 관계 의사소통 관련, 스포츠와 음악 및 공동체 활동, 미디어 활동 및 토론 참여 등
공동체 내에서 시민 관련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단체, 종교 단체, 청소년 단체 등 시민으로서의 활동 참여
학교 내에서 시민 관련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위원의, 학생의회, 학교 신문 편집국, 학생 포럼 등

**태도/행동 영역 문항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본조사 문항 시작]**

방과 후 교내외 활동

<문제1>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전혀하지않음	2. 30분 미만	3. 30-60분	4. 1-2시간	5. 2시간 이상
a) 텔레비전/비디오/DVD					
b) 수제/복합공부					
c) 컴퓨터/인터넷사용					
d) 독서					
e) 친구와 전화로 상담하기 또는 인터넷으로 채팅하기					
f) 친구와 놀기					

[문제 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훈주십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전혀하지않음	2. 최소 한달에 한번	3. 최소 일주일에 한번	4. 매일 (거의 매일)
a)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한다				
b)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				
c)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는다				
d)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e) 국내외 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다				
f)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g)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h) 청소년단체에 참여한다(보이스카우트/걸스카웃,YMCA, 컴퓨터 동아리, 장기동호회 등)				

[문제 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훈주십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3> 귀하는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지난 1년 동안 활동 하였음	2. 1년 전에 활동하였음	3. 전혀 활동하지 않았
1) 청소년 정당 단체			
2) 환경운동단체			
3) 인권운동단체			
4) 자원봉사단체			
5) 기부단체			
6) 의국인문화단체			
7) 종교단체			
8) 청소년캠프인활동			

[문제 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가치/ 신념	II 태도		III 미래 행동 의도		IV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4> 귀하는 학교에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당신이 다녔던 모든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지난 1년 동안 활동 하였음	2. 1년 전에 활동하였음	3. 전혀 활동하지 않았
a)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활동에 자발적 참여			
b) 토론에 적극적 참여			
c)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d)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e) 학생회 토론 참여			
f)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문제 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가치/ 신념	II 태도		III 미래 행동 의도		IV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학교

<문제 5>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일어나 자주 일어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전혀 일어나지 않음	2.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3.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4.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a)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b)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c)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d)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e)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f)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g)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문제 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6> 학교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귀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많이 반영됨	2. 보통 반영됨	3. 조금 반영됨	4. 전혀 반영되지 않음
a)교수법(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b)수업내용				
c)교과서 및 학습자료				
d)수업시간표				
e)학급수칙				
f)학교규칙				
8)방과후 활동				

[문제 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7>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				
b)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c)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d)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e)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f)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g)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문제 7에 대한 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8> 다음과 같은 학생참여 질문문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b)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c)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e)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8에 대한 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시민과 사회

<문제 9>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질문문 각각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b)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c)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d)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보다 여자는 사탄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e)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f)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g)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h)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i) 법이 불공정하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j) 정치적 혐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k) 빈부 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				
l)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문제 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문제 10> 귀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중요함	2. 약간 중요함	3. 중요하지 않음	4. 전혀 중요하지 않음
a) 모든 선거 참여				
b) 정당단체 가입				
c) 역사 학습				
d)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상의 정치이슈 주시				
e)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f) 정치 토론 참여				
g)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h)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i) 인민중간운동 참여				
j) 환경보호운동 참여				
k) 열심회 일하기				
l) 항상 법률 준수하기				

[문제 1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지신과 사회

<문제 11>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관심 있음	2. 무척 관심 있음	3. 별로 관심 없음	4. 매우 관심 없음
a) 귀하의 지역공동체(시,군,구) 내의 정치적 이슈				
b) 귀하의 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c) 귀하의 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d) 다른 나라들의 정치				
e) 국제 정치				
f) 환경 이슈				

[문제 1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2> 귀하는 정치와 관련된 다음 진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나는 또래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b)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한다.				
c) 나는 대부분의 정치적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 나는 경찰찰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e) 성인이 되면,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f) 나는 우리나라가 망관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 1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권리와 책임

<문제 13>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모든 남자는 정부가 하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b) 모든 남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c)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d) 임자리가 없을 때, 임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e)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f) 남성은 여성들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g)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다.				

[문제 1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4> 여러 민족과 인종의 사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민족 집단 및 인종 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견에 귀하께서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모든 인종집단은 우리 나라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b) 모든 인종집단은 우리 나라에서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c)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인종집단 구성원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d)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들은 선거에 출마할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e) 모든 인종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문제 1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5> 사람들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점점 더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이민자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이민자들이 그들 국가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이민자들의 자녀도 그 나라의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c)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d) 이민자들에게 그들 국가의 관습과 생활양식을 허용해야 한다.				
e) 이민자들도 이민국가의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f) 이민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을 때 이민자들의 입국은 제한되어야 한다.				

[문제 1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기관과 사회

<문제 16> 귀하는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신뢰함	2. 무척 신뢰함	3. 약간 신뢰함	4. 매우 불신함
a) 중앙정부부처				
b) 지방자치정부				
c) 법원				
d) 경찰				
e) 정당				
f) 국회				
g) 미디어 (TV, 신문사, 라디오)				
h) 군대				
l) 학교				
j) 국제연합(UN)				
k) 일반대중				

[문제 16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7> 다음에 제시된 국가에 관한 진술문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백과거는 나에게 중요하다.				
b)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는 같아있다.				
c) 나는 한국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d)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e) 나는 영원히 다른 나라에 살 것이다.				
f)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g) 우리나라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h)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이다.				

[문제 17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시회집어

<문제 18> 귀하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예

2. 아니오

· 지지정당이 있다면, 귀하는 지지정당에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많이

2. 어느 정도(중간)

3. 조금

[문제 18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19> 다음의 활동 각각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바람직함	2. 대체로 바람직함	3.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함	4. 전혀 바람직하지 못함
a) 독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				
b)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주장				
c) 학교선거 후보자 출마				
d)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집단 구성				
e) 논쟁이슈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 참여				
f) 신문사에 현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신으로 보내기				
g)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학급에서 연설하기				

[문제 19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0> 시민들이 착부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확실히 참여함	2. 아마도 참여함	3.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4.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a) 신문사에 편지 보내기				
b)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팻지 달기				
c) 산출지 공무원 접촉하기				
d) 비폭력 집회 참여				
e) 진정서 서명 모으기				
f) 상품 판매 운동하기				
g) 벽에 합의 표어 스프레이 페인팅 하기				
h) 도로 봉쇄하기				
l) 공공건물 점거하기				

[문제 20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1>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확실히 참여함	2. 아마도 참여함	3.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4.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a) 지역수준에서의 투표참여(예: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 등)				
b) 국가수준에서의 투표참여(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c)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d)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e) 정치단체 가입				
f) 노동조합 가입				
g) 지역 및 시 신출적 후보 출마				

[문제 21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2>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귀하는 향후 몇 년 동안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확실히 할 것임	2. 아마도 할 것임	3. 아마도 하지 않음	4. 확실히 하지 않음
a) 지역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b)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c)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신문기사 작성				
d)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포럼 참여				
e) 사회적,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 가입				

[문제 22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지신과 종교

<문제 23>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종교 없음
5. 기타 종교

[문제 23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4> 귀하는 어느 정도 종교 행사에 참여합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 1. 전혀 참여하지 않음
- 2. 1년에 최소한 한번 참여함
- 3. 한 달에 최소한 한번 참여함
- 4. 1주일에 최소한 한번 참여함

[문제 24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문제 25> 귀하는 다음의 종교 관련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란에 V표하여 주세요.)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종교는 나에게 국가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b) 종교는 나에게 종교 그들을 구별하도록 한다.				
c) 종교적 단자는 더 많은 사회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d) 종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e) 종교에 기초한 삶의 규칙은 근대법보다 더 중요하다.				
f) 종교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				

[문제 25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 질문은 다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에 주십시오.

I	II	III	IV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문항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			
[부적합 일 경우에 부적합 사유를 기술해주시시오]			
적합 / 부적합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Support system study on Civic Competencies of Child and Youth in Korea : General Report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civic competency of child and youth in Korea and do international comparison as of 2011 based on the IEA ICCS 2009. In addition, to propose policies for nurturing of civic competencies. For this, a total of 9,398 students (4th–12th graders/both boys and girls) are surveyed in co-operation with KEDI, and an white paper on education systems of Korean civic competencies are made.

As a result, domestic experts on civic education underestimated multi-cultural sensitivity, check and balance, monopoly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outside of the school. In Korean adolescents' civic competency profile, in addition, the ratio of 'generally dissatisfied citizen' and democratic citizenship were high. However, the ratio of 'feudal participants' was high. And, ①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nation and the world, ②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responsibility, ③trust on public organizations, willingness to ④participate in illegal politics, ⑤join a political party or labor union and ⑥run for election has increased. On the contrary, their willingness to ①vote, ②collect election-related information, ③participate in legal protest, ④faith on democratic values, ⑤resist against violent protest and ⑥become a good citizen has decreased. The student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shown lower values in almost all categories than normal one. They were even lower than middle-school students in certain areas.

This shows that main problem of the Korean youth civic competency is disparity by school type and im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 policy to strengthen civic competencies and a policy to improve actual participation and practice in schoo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it i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nk between the schools, the Yout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Lowering the voting age for adolescents to 18 and promotion of adolescents' engagement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were proposed also.

Key words: civic competencies, ICCS, IEA, child and youth in Korea, international comparison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고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해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에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 주신 분들

◆ 집필진 ◆

박 선 영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교수)

◆ 자문진 ◆

권 복 희 (교육희망네트워크 차장)

권 혜 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처장)

김 남 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리)

김 옥 경 (서울 영남중학교 교사)

류 현 경 (수원 숙지고등학교 교사)

문 성 근 (풀뿌리민주시민교육운동 교육가)

성 낙 돈 (덕성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 지 원 (일산 대진고등학교 교사)

심 성 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오 미 희 (경기 화정고등학교 교사)

유 경 숙 (서울 영남중학교 교사)

윤 지 현 (경기 화정고등학교 교사)

이 종 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 찬 명 (수원 영복여자중학교 교사)

장 재 운 (수원 영복여자중학교 교사)

조 대 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조 선 하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조 아 미 (명지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연구보고 11-R2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총괄보고서**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89-9

978-89-7816-988-2(세트)

